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이주민의 차이의 정치

– 대림동 ‘차이나타운’ 사례연구 –

Constructing differences of an ethnic enclave: exploring the local politics of making Daerim-dong ‘Chinatown’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박 혜 현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이주민의 차이의 정치

- 대림동 ‘차이나타운’ 사례연구 -

지도교수 정 현 주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박 혜 현

박혜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8 월

위 원 장 박 인 권 (인)

부위원장 신 혜 란 (인)

위 원 정 현 주 (인)

초 록

본 연구는 이주민 공간의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과정을 분석한다. 이는 차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차이로 인한 충돌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엇갈림에서 출발한다는 이해에 기반한다. 즉, 차이는 정치의 원인이기 이전에 생산물이다.

그간 학계는 인종적 소수자의 ‘차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존속되고 은폐되는 차별을 비판하고자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작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진보적인’ 표면에 의해 호도되는 불평등의 작동을 폭로한다. 나아가,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론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행위자와 그의 인식, 의도, 실천을 단일하고 경직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국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층적이고, 혼종적이고, 유동적인 행위자와 그 행위성을 관심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문화 관련 개입을 늘 복잡하고 경쟁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역시 표면과 내면, 그리고 국가 내외부의 행위자와 같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본 연구는 재한 조선족 및 중국계 이주민 집적지인 대림동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에 로컬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협력하고, 반목하는 정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공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작용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사례연구는 보편적인 동시에 특수한 포섭과 배제의 복잡한 공존 양상을 보여주고, 최근 이주 의제에 적극적인 행위성을 보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문헌의 공백을 해소하고, 위와 아래에서 기원하는 힘들의 만남과 그 함의를 살펴보는 세가지 방식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문헌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림동의 지방정부 관계자, 이주민 단체 관계자, 상인에 대한 인터뷰 자료, 2010년-2022년의 회의록과 이주민 뉴스 매체 자료, 각종 정책 문서와 기사 자료, 그리고 답사와 참여관찰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2 장에서는 서구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기존 이론이 과도기, 집단 내, 스케일의 중첩에서 나타나는 포섭과 배제의 양가성을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지 못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을 고찰하고, 여덟 개의 '차이' 구성의 논리를 추출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 모델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동질화/차별화의 담론적 양상을 구체화하고 둘을 연결하는 중간적인 분석틀의 구축을 시도했다.

3 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대림동의 '차이'를 포착해 의미화하며, 정책을 도출하고, 정책에 의해 '차이'가 영향을 받는 일련의 '차이' 관리의 과정을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인구 유치에서 다른 지방정부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크게 대림동의 중국성과 관련된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포섭하고, 대림동의 '일탈적 문화'를 동화하고, 대림동의 이주민을 경제적 분배 측면에서 차등화하고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대림동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생산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층적, 혼종적, 유동적으로 공존했다. 포섭과 배제의 대상을 나누는 작업은 포섭의 영역 속 더 작은 층위들에서 반복되었고, 포섭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상태로서 배제성을 수반했으며, 맥락에 따라 포섭과 배제 사이의 임시적이고 표면적인 진동이 나타났다.

4 장에서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포섭, 동화, 배제의 시도에 반응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연결시키며, 그 실천을 통해 대림동과 자신들의 '차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포섭과 관련하여, 이주민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해 대체로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나, 정체성의 환원과 타자화를 문제 삼으며 반대하는 이견도 존재했다. 동화와 배제에 대하여, 이주민은 동화론을 부분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해 내부적 타자화와 시정 노력을 벌이는 모습, 동화론과 배제론을 반박하기 위한 변화와 공헌 담론, 동화론이 주류사회의 차별화 혐오로 비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담론적 대항과 물리적 예방 실천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수용과 거부의 혼종 속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동포성을 염원하면서도 자신들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 그리고 그 배경과 방식

은, 한국적 맥락의 독특성을 드러낸다. 이들에게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동포성의 인정과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의 좌절 끝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이자, ‘내국인’과 ‘다문화’ 사이의 사각지대의 배제된 타자에서 배타적인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내면적 정체성과 외면적인 공간적 정체성을 분리하고, 주류 사회를 준거로 모종의 인정과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차이’ 중심의 외면적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중 정서와 그로 인해 대림동을 중국과 동일시하며 차별하는 현상이 다른 한 편에 자리한 가운데,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실제로 이주민의 임파워먼트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비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주요어: 차이, 이주민 공간,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 이주민의 행위성, 로컬 스케일 정치

학 번: 2020-28753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5
1. 연구 대상 5
1) 대림동의 이주민 공간 5
(1) 형성 배경과 역사 5
(2) 공간적 특징 6
2) 주류 사회와의 접촉 8
3) 사례적 유용성 9
2. 연구 방법 10
1) 심층 면담 10
2) 문헌 연구 11
(1) 공적 포럼 11
(2) 기타 12
3) 필드워크 13

제 2 장 문헌 검토 및 분석틀 14
제 1 절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14
1. 다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14
2. 소수 인종 집단의 행위성 17
3.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19
4. 기존 문헌의 특성과 한계 22
제 2 절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 27
1. 다문화 정책 모델 27
2. 다문화 정책 담론의 양가성 29
3. ‘차이’ 구성의 논리 31
제 3 절 분석틀 34

제 3 장 지방정부의 ‘차이’ 인식과 관리 36
제 1 절 중국 관련 문화 및 사회 자본의 포섭 38
1.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38
2. 재중 네트워크와 이중언어 능력 활용 42
1) 외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 42
2) 내국인의 국제 진출 활성화 47
3. 포섭의 한계 49
1) 언표의 전환: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49
2) 직제의 개편: 다문화지원과 폐지와 비전협력과 신설 51
3) 포섭의 불안정성 54
4) 포섭의 선택성 59
제 2 절 일탈적 문화의 통제와 동화 62
1. ‘중국적인’ 무질서의 통제 62
2. ‘범죄도시’ 낙인의 수용과 물리적 통제 70
제 3 절 경제적 차원의 차등화와 배제 73
1. 영등포구의 가장 낮은 곳: 이주민의 낮은 경제 수준과 낙후된 물리적 환경 73
2. 우선순위 밖의 이주민 75
1) 역차별 76
2) 기회비용 78
제 4 절 ‘차이’ 인식과 관리의 관계적 유동 83
1. 다문화 거점화를 둘러싼 반목 83
2. ‘차이’ 인식의 임시적 조정 86
1) 상위 스케일의 인식에 영합하기 86
2) 상위 스케일의 인식을 이용한 아웃소싱 90
제 5 절 소결 91

제 4 장 이주민의 행위성 97
제 1 절 '차이나타운' 만들기를 둘러싼 내부 동학 97
1. 적극적 동조 97
1) 포섭에 대한 열망 97
2) 자연발생적 중국성에의 편승 102
3) 정체성의 타협과 도구화 107
2. 동조의 배경 110
1) 동포성의 인정과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의 좌절 111
2) '내국인'과 '다문화' 사이의 사각지대 117
3. 이견과 함정 119
1) 정체성의 환원 혹은 반영 119
2) 중국과의 동일시에 따른 타자화 122
제 2 절 동화와 배제에 대한 반응 127
1. 내부적 타자화와 물리적 통제 127
2. 변화와 공헌에 대한 인정 요구 130
3. 차별과 혐오에 대한 담론적 대항과 물리적 예방 134
제 3 절 소결 141

제 5 장 결론 147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50
1.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포용, 인권 담론에 대한 기여 150
2. 공간의 매개 기능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152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153

참 고 문 헌 155

Abstract 160

표 목 차

[표 1-1] 연구 참여자 목록 10
[표 2-1] 다문화 정책 모델에 따른 시민권과 문화권의 인정 여부 27
[표 3-1] 주요 분석 대상 정책 37

그 림 목 차

[그림 1-1] 대림 2 동 디지털로 37 길의 상권 7
[그림 1-2] 대림동에서 열린 쓰레기 문제 관련 주민 포럼 13
[그림 2-1] 분석틀 구체화의 예시 31
[그림 2-2]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로서 '차이' 구성의 논리 33
[그림 2-3] 본 연구의 분석틀 35
[그림 3-1] 대림중앙시장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 40
[그림 3-2]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계획도 43
[그림 3-3]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안 46
[그림 3-4]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착한 쓰레기 문제 관련 현수막 66
[그림 3-5] 대림동에 부착된 각종 경고문 67
[그림 3-6] 대림동 내에 부착된 방범 장치와 신고 안내문 72
[그림 3-7]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계획 단면도 80
[그림 3-8] 문화도시 사업 공모 시 등장한 대림동에 대한 설명 87
[그림 4-1] 대림동 맛집 안내지도 100
[그림 4-2] 대림동 홍보 영상에 사용된 홍보 문구와 그래픽 100
[그림 4-3] 대림동 내 카페에서 판매 중인 중국식 간식 104
[그림 4-4] 중국풍 건축물 디자인 106
[그림 4-5] 주류 방송 매체의 음식점 방영 이력 광고 106
[그림 4-6] 재한 조선족 단체에 의해 설치된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문 130
[그림 4-7] 영화 '청년경찰' 에 대항하기 위한 대림동 거리 행진 138
[그림 4-8] 대림동 방범 초소 앞에서 열린 재한 조선족 문인 독서모임 13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의 정치와 행정은 차이를 둘러싼 부딪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차이는 주관적 인식의 산물이며, 따라서 단일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차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차이로 인한 충돌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엇갈림에서 출발한다. 즉, 차이는 정치의 원인이기 이전에 생산물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주민 공간의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과정을 분석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인종적 소수자의 '차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존속되고 은폐되는 차별을 비판하고자 시도해왔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neoliberal multiculturalism)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작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진보적인' 표면에 의해 호도되는 불평등의 작동을 폭로한다.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론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행위자와 그의 인식, 의도, 실천을 단일하고 경직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특히, 국가를 결정적이고 일관적인 주체로 가정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국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층적이고, 혼종적이고, 유동적인 행위자와 그 행위성을 관심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문화 관련 개입을 늘 복잡하고 경쟁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Speed 2005; Park and Richards 2007; Hale 2018). 이는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역시 내면과 표면, 그리고 국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와 같이 다중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지며 복잡한 양상을 띰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론적 흐름 위에서, 본 연구는 이주민 공간의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에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고, 협력하고, 반목하는 정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공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작용 양상을 밝히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림동의 로컬 스케일을 사례로 선정하고 분석한다.

대림동의 로컬 스케일이라는 사례와 범위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이유는 세가지이며, 이들 각각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연구와 관련한 세부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림동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복잡한 작동 양상, 즉, 과도기적이고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포섭과 배제의 접합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사례다. 대림동은 크게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이주민의 출신지에 따라 구성된 위계적 민족성에 대한 담론에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사례로, 그리고 대림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응은 선망/포섭과 기피/배제라는 이분적 구조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최선영 2022; 이정현과 정수열 2015; 공윤경 2013; 최병두 2012a). 그러나 2010 년대 중후반부터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와 같이 대림동의 '차이'를 부각하고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했으며, 이는 대림동이 배제에서 포섭으로 나아가거나, 양측을 동시에 취하며, 소수 이주민 집적지에 대한 기존의 이분적 분류에 대한 변칙적 사례로 위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림동에서 나타나는 포섭과 배제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그 공존의 양상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실천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방정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지방정부라는 행위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이주가 국가보다 지역 사회에 더 크고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단지 중앙정부에 종속되고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병두 2012 a; 최병두 2012b). 그러나 글로벌 도시 담론이 대두되고, 기업가주의적 지방 행정이 확산되고,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방은 정치와 행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주요하고 강하게 얽히는 스케일로 부상했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이주 관련 의제에 공격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자로 진화했다. 이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지방정부라는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로컬 스케일 안팎의 행

위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독자적인 행위를 펼침으로써 나타나는 역동성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림동의 로컬 스케일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이주민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이주민을 함께 살펴보고, 두 측의 인식과 실천을 비교함으로써,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힘들이 만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과 그 만남이 이주민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갖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를 촉구하는 킴리카의 부름 (Kymlicka 2012)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 같은 배경과 목적의 접점 위에서, 본 연구는 대림동을 둘러싼 로컬 스케일의 차이의 정치를 살펴본다. 특히 차이를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구성물로 간주하는 시각 아래, 차이를 특정하고, 정의하며, 개입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차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생산 과정,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이용하거나 해결하는 실천의 과정에 이르는 차이의 정치의 전 과정을 분석한다. 연구 질문은 크게 대림동의 지방정부와 이주민에 관한 것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다.

첫째,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특성 중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포섭하거나, 동화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가?

둘째,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영등포구의 포섭, 동화, 배제를 수용하는가 혹은 거부하는가? 그리고 그 동기와 방식은 무엇인가?

먼저, 본 연구는 첫번째 연구 질문을 규명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영등포구의 보도자료와 정책 문서, 영등포구 관계자 및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영등포구가 대림동이 주류 사회와 비교해 갖는 차이를 포착하고 의미화하는 과정과, 그러한 인식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정책이 '차이'를 고착시키거나 변형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 같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포섭과 배제의 다층적, 혼종적, 유동적 공존에 대한 종합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두번째 연구 질문을 규명하고자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및 대림동 내 상인과의 인터뷰,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의 기사, 재한 조선족 단체의 홈페이지, 조선족 작가들의 문집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대림동에 대한 영등포구의 '차이' 인식과 관리에 대해 갖는 의견과, 그것이 이주민 자신들의 '차이' 인식과 보이는 상동성과 괴리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영등포구와의 상호작용이나 이주민 측의 독자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 과정에서 대림동의 '차이'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행위성이 드러내는 수용과 거부의 혼종성, 맥락적 독특성, 임파워먼트에의 함의를 고찰한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는 대림동에 대한 지방정부와 이주민의 차이의 정치에 작용하는 로컬 스케일의 특성과 공간의 매개 기능에 대해 고찰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1) 대림동의 이주민 공간

(1) 형성 배경과 역사

대림동[1]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다. 박세훈(2017)은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를 원주민과 이주민의 비율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가시적인 집적지로 보고 있으며, 대림동은 그 중에서도 재한 조선족의 '수도'로 불릴 만큼 가장 대표적이다 (김용선과 임영상 2018). 대림동을 일종의 '차이나타운'으로 분류할 때, 대림동을 인천 등에 위치한 다른 '차이나타운'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 역시 대림동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유입된 신화교 (김일권 2015),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족이 아닌 재한 조선족을 주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정희 2018).

대림동의 형성 배경으로는 대림동 안팎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는데, 대림동 내적으로는 집세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대림동 외적으로는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기존 집거지인 가리봉동의 불안정화를 들 수 있다 (김용선과 임영상 2018). 먼저, 재한 조선족 인구는 1992 년 한중 수교, 2004 년 재외동포법 개정, 2007 년 방문취업제 시행, 2008 년 재외동포법의 변화 등 재한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주와 한국 내의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지위가 개선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김용선과 임영상 2018). 이와 더불어 많은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단기 체류가 아닌 정주를 원하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김현선 2010; 곽재석 2021). 또한, 1990 년

---

[1] 대림 1, 2, 3동 모두 소수 이주민 집적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주민의 비율이 높지만, 본 연구의 답사나 경관에 관한 논의는 그 중 가장 집적도가 높은 대림2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구조조정에 따라 가리봉동에 재한 조선족 집거지가 형성된 후, 2000 년대 초반 가리봉동의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과 재개발 계획 수립으로 인해 인접 지역인 대림동이 새로운 집적지로 등극하기 시작했다 (김용선과 임영상 2018).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집적은 2004 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한국인 타운 속에 재한 조선족이 혼재하는 형태를 띠다가, 점차 재한 조선족 상점이 우세를 점하게 되면서 재한 조선족 타운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김현선 2010).

대림동이 형성된지 20 년 여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대림동 내부적으로 세대, 민족, 계급에 따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대림동을 정착 초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곳으로 인식하며 정착 이후에는 대림동을 떠나 자양동, 신촌, 홍대 등지로 진출하고 있으며, 대림동 내에 한족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한 조선족과 한족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민경 2019). 또한 엘리트 계층의 이주민 유입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임영상과 김용선 2019).

(2) 공간적 특징

중국계 이주민이 대체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재영과 강진구 2016), 대림동 역시 대도시 내의 저렴한 주택지에 입지한 소수 이주민 집적지로 분류된다 (박세훈 2010). 대림동은 무엇보다도 대림 2 동의 디지털로 37 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번화한 상권(그림 1-1)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대림동은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로서 주류 사회 및 여타 '차이나타운'과 구분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대림동에는 중국 음식점과 '커피호프'와 노래방 등의 오락 시설, 그리고 행정사나 여행사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밀집해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한편, 주류 사회에 흔하게 입점한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은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인다 (장효청 2019). 또한 직업 소개소의 수가 적고 이주민 대상 상조 서비스나 조선족 이주민 4 세 등 중국계 이주민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습소가

생겨나는 현상은 이주민이 몇 세대에 걸쳐 정착한 대림동의 특성을 드러낸다 (장효청 2019). 대림동에는 다른 '차이나타운'과 달리 사원이 없다는 사실도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정희 2018).

보다 미시적인 가게나 건물 스케일에서도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의 특성이 관찰되는데, 가게를 도로로 확장하여 영업하는 '탄즈'의 설치나 '탄즈'의 차양을 위한 '펑즈'의 설치가 그 예다 (천현진 외 2012). 이 외에도 이주민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한자를 크게 그리고 한글을 작게 병기한 간판이 걸려 있으며, 붉은색과 금색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천현진 외 2012). 대림중앙시장 내의 간판 역시 흰색 바탕에 붉은 띠와 금색 장식을 첨가한 디자인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적인 요소를 갖는 개별 가게 및 건물의 디자인이 집합하여 대림동의 중국적인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1-1] 대림 2 동 디지털로 37 길의 상권
(2023 년 6 월 연구자 직접 촬영)

2) 주류 사회와의 접촉

대림동은 그 안팎으로 모두 원주민과 이주민이 사실상 분리된 형태를 띠어 왔다. 먼저 대림동 내부에서는 주거지 건물에 한국인 건물주/세입자와 재한 조선족 세입자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음식점, 경로당, 사교 활동 등의 생활 공간과 네트워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박재영과 강진구 2016; 김용선과 임영상 2018). 대림동 밖의 주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림동은 주류 사회의 흔적이 희미한 재한 조선족만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서지수 2012; 박재영 강진구 2016). 이에 따라 대림동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가 재한 조선족 사회 내의 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양상은 2010 년대 중후반 들어 대림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 년 개봉한 '범죄도시'와 '청년경찰' 등의 메가 히트 영화는 조선족 밀집지를 범죄와 연루시키며 대림동에 대해 '담론적 빨간 선 긋기(discursive redlining)' (Jones and Jackson 2018)를 선동했다. 이 같은 대림동의 영화적 재현은 학계에서 비판적 고찰의 대상이 된 한편 (신동순 2020; 최인규와 전범수 2019) 대림동을 '서울에서 가장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갖는' 곳으로 보고 관련 연구의 사례로 기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윤수 2021).

그런 한편 주류 및 대안 미디어의 '먹방'과 소셜 미디어는 대림동을 이국적인 맛과 멋을 가진 관광지로 추앙하는 '담론적 투자 (discursive investing)' (Zukin, Lindeman, and Hurson 2017; Bronsvoort and Uitermark 2022)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림동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서울시와 영등포구 역시 2015 년 경부터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브랜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대림동을 주류 사회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문화 상품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도시'와 '한국 속 작은 중국'으로 대별되는 양가적인 재현과 모빌리티는 대림동과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과 맛집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의 서로 다른 핵을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윤희진 2022).

3) 사례적 유용성

대림동의 사례적 유용성은 대림동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를 포괄한다. 한편으로, 대림동은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양분된 이주민의 출신지에 따라 구성된 위계적 민족성에서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최선영 2022; 이정현과 정수열 2015; 공윤경 2013; 최병두 2012a). 대림동을 위시한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의 집적지는 기존 연구에서 선망과 포섭 그리고 기피와 배제의 이중 구조 속에서 기피되고 배제되는 집단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2010 년대 중후반부터 대림동에서 태동하고 있는 대림동의 '차이'를 부각하고 기념하는 움직임은, 배제에서 포섭으로 나아가거나 양측을 동시에 취하면서, 소수 이주민 집적지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분류가 교란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림동에 대한 다문화주의적인 포섭이 태동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기존의 정책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 새로운 현상이 기존 이론에 대해 갖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림동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일원인 재한 조선족을 주축으로 형성된 집거지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이주민의 다중 정체성은 오히려 정부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로컬 스케일의 동학을 더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두 주체가 '차이'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성으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 하의 다문화 정책 및 담론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주민 관련 정책과 이주민의 행위성을 함께 살펴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Kymlicka 2012; Saha and van Lente 2022), 그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Bourassa 2021; Ahmed 2012; Hale 2002), 또한 더 많은 사례 연구의 축적을 통해 그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역설했음을 고려할 때 (Kymlicka 2012), 대림동은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공간의 재현'과 '재현 공간' 간의 변증법적 동학을 (Lefebvre 1974/1991) 규명하는 일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조각이 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

1)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2023 년 5 월에 지방정부와 이주민 두 측의 주요 행위자를 섭외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2]. 영등포구 관계자 1 명,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5 명, 대림동 내 상인 4 명 등 총 10 명을 섭외하여(표 1-1) 일인당 최소 30 분에서 최대 2 시간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표 1-1] 연구 참여자 목록

식별자	분류[3]	연락처 파악 경로
1	영등포구 관계자	소속 기관 홈페이지
A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동주민센터 및 언론사에 소개 부탁
B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 의 추천
C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 에게 소개 부탁
D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에게 소개 부탁
E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에게 소개 부탁
a	대림동 내 상인	가게 방문
b	대림동 내 상인	가게 방문
c	대림동 내 상인	가게 방문
d	대림동 내 상인	가게 방문

[2] IRB 승인 번호: IRB No. 2305/004-002
[3] 재한 조선족 단체 활동과 대림동 내 상업 활동을 겸업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다수 있었으나, 심층 면담이 둘 중 주로 어느 활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두 카테고리 중 하나로 연구 참여자를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적합하다고 파악된 주요 관계자(key informants)를 의도적 표집 혹은 눈덩이 표집했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공식 출판물 등에서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장소로 방문해 참여 의사를 묻거나, 한 연구 참여자에게 다른 주요 관계자의 소개를 부탁하거나 추천을 받는 세가지 경로를 통해 섭외를 진행했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소개와 대림동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활동 이력, 대림동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 그리고 대림동에 대한 지방정부와 이주민의 활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일차적으로 물어본 후,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답변 내용과 관련한 추가 질문을 자유롭게 끼워 넣어 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면담 중 녹취에 동의하였으므로 면담 이후 녹취록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2) 문헌 연구

(1) 공적 포럼

본 연구의 목적은 대림동에 대한 지방정부와 이주민 두 측의 인식과 실천을 형성하는 동기, 논리, 감정,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정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 및 이후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공적 포럼을 살펴봄으로써 이 같은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등포구 의회 회의록 자료와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 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4] 분석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영등포구 의회 회의록은 구청 공무원 및 구의원 등 지방정부 관계자의 회의 당시 발언을 그대로 기록으로 옮긴 자료이며,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의 경우

---

[4] 자료의 수집과 정제는 모두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Python 스크립트를 활용해 실시했다.

칼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의 기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자료 모두 글의 양식을 통해 매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이주민 각각의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날 것의 자료를 다수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담론으로 취급하고 분석하였으며, 일부 실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추가 자료를 이용한 조사의 실마리로 활용했다.

영등포구 의회 회의록의 경우 2023 년 1 월 20 일에 2010 년부터 2022 년까지 13 개년의 회의록 중 '대림'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동시에 '중국', '외국', '다문화', '글로벌', '동포', '교포', '조선족', '이주', '이민'의 9 개 키워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문건을 검색 및 필터링하여 총 363 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재한조선족 뉴스 매체의 경우 2023 년 3 월 4 일에 동북아뉴스 와 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에서 '대림동'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건을 검색해 각각 472 건과 218 건씩 총 690 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이처럼 공적 포럼에서 추출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자의 직접적인 질문이나 요청이 부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성된 자료(unsolicited data)로, 연구자의 존재 및 개입으로 인한 오염의 우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회의록이나 뉴스 매체의 기사처럼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촘촘한 간격으로 축적된 공적 포럼 자료를 활용할 경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적 포럼 분석을 통해 심층 면담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2) 기타

다음으로, 대림동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영등포구의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 주요업무보고, 달라지는 영등포, 보도자료 및 보도자료의 첨부 문서를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고, 추가 검색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계획안과 보고서, 영등포문화재단의 발표자료와 유튜브 채널, 서울시의 주요업무보고 등도 확보하여 참고했다. 더불어 대림동, 영등포구의 사업, 이주민의 단체 활동 등에 관해 작성된 기사를 수

시로 검색하여 추가 조사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70, 80 후의 삶, 앎, 꿈’, ‘빵상과 쭝국애 혀네언니’, ‘동포문학’, ‘낯섦 그 너머로’ 등 (재한) 조선족이 자신들의 삶에 관해 쓰고 엮은 문집을 구해 탐독했다.

3) 필드워크

마지막으로 2021 년 11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총 10 회 이상 대림동을 방문하여, 대림 2 동을 중심으로 걸어 다니거나 머무르며, 공간적 구조, 표지판, 주민의 활동 등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사진 자료를 수집했으며, 길이나 상점에서 만난 상인 및 주민들과 최대 한시간 정도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했다.

더불어, 심층 면담 참여자의 소개로 대림동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방정부, 이주민, 내국인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도 했다(그림 1-2).

[그림 1-2] 대림동에서 열린 쓰레기 문제 관련 주민 포럼
(2023 년 6 월 연구자 직접 촬영)

제 2 장 문헌 검토 및 분석틀

제 1 절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1. 다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1960 년대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정책은 소수 이주민의 "독특한 필요와 열망(distinctive needs and aspirations)" (Kymlicka 2012, 102)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소수 이주민에 대해 불신과 동화의 압력으로 일관해 온 기존의 정책적 기조에서 탈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단지 소수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차별 금지 원칙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진 차이의 인정과 보존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Kymlicka 2012). 따라서 '다문화'는 여러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실'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소수 이주민의 인정에 대한 '규범'적인 '처방'이기도 하다 (Kivisto 2002 – 오경석 2009 에서 재인용; Malik 2005, 362 – 육주원 2016 에서 재인용). 이때 후자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로서의 다문화주의로 분류된다 (Kymlicka 2012).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천적, 이론적 비판이 존재하는데 (한준성 2010 참고), 그 중에서도 다문화주의 정책이 규범적 차원의 논의에 머무름으로써 실질적인 재분배의 문제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분배의 문제를 은폐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ale 2002). 이와 관련해 김수철 (2017)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인정과 재분배의 관한 논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결국 오늘날의 다문화주의 문제는 단지 인정의 정의를 성취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분배의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의 정치는 인종 문제, 문화적 차이의 승인에 대한 도덕적 요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차이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자본의 작동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 이는 **기존의 무형의 가치, 즉 인종적·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와 초국적 자본과 국가에 의한 유형의 가치, 즉 경제적 재분배 문제가 삶정치를 통해서 상호 교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수철 2017, 13-14, 강조 추가)

한편, 이처럼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가 얽히는 '삶정치'의 방식은,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한층 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캐서린 미첼(Katharyne Mitchell)은 교육철학의 맥락에서 다문화주의를 논하면서, 자본주의 하의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국가주의적 이념의 영향 속에서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의 배양을 요구해 온 것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를 위해 문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상을 이상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Mitchell 2003).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작동'을 결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취하고 있으나, 동시에 자본주의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주체를 배양하고 호명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따라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관계 맺으며, 그 결과 다문화주의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전과 이후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국가의 사례를 두루 섭렵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Kymlicka 2012). 보통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태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1960년대 다문화주의가 도입되고 약 20년간 관련 논의와 실천이 축적된 후에 다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만나게 된 것이다. 킴리카는 이 만남의 양상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설명한다.

처음에 신자유주의는 다문화주의가 규범화하는 과도한 국가 주도의 복지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권적 인정 및 보존을 문제시하며, 다문화주의의 대척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억압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는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반다문화주의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대립 구도로 인해 역설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본래의' 다문화주의로서 사회자유주의의 축소된 영역 안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neoliberal

multiculturalism)로 진화하였다. 즉, 다문화주의는 사회자유주의의 영역을 벗어나 신자유주의의 영역으로 이행함에 따라 새로운 특성과 효과를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와 같이 차이의 인정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동기, 메커니즘, 목표로 하는 주체성 등에서 규범이 아닌 자본의 논리가 선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에 관한 해석은 실용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모두 강조한다. 실용적 측면에서, 킴리카는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ies)'을 바탕으로 결합했다고 주장한다 (Kymlicka 2012). 즉, 신자유주의 하의 글로벌 시장 내의 경쟁 속에서 문화적 차이는 곧 독특한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수반하며, 자본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이해 관계는 자연스럽게 차이를 인정하고 보존하고, 나아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 자체가 착취 가능한 노동의 최대량을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설명 역시 (Michaels 2008; Maloutas 2021 – Kirk 2023 에서 재인용), 신자유주의가 본래의 다문화주의와는 상이한 실용적 동기에 기반해서, 우연적이지만 진정성 있게,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게 된다는 논리를 지지한다.

한편, 정치적 동기에 주목하는 입장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우연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없이 위선적으로, 다문화주의의 탈을 쓰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진정한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다문화주의를 이용하고, 전용하고,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부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를 배제하는 동시에,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주체들을 선택적으로 포섭하는 모습을 띤다 (Kirk 2023; Bourassa 2021; Ahmed 2012; Melamed 2011; Hale 2005). 이러한 '생산적 포용(productive inclusion)'은 (Bourassa 2021) 사실상 인종화된 '차이'를 구성하면서도 인종적 차원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개인 단위 및 생산성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반인종주의적인 움직임을 묵살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개념이 가리키는 포용과 배제의 필연적인 공존, 그리고 포용을 통한 통치의 작동은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소수 인종 집단의 행위성

한편,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만남에 관한 논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더 넓게는 신자유주의/다문화주의적 통치가 그 대상이 되는 소수 인종 집단 측과 주고받는 변증법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의한 '포용'과 그로 인해 생성된 새로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기회들은 소수 인종 집단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신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소수 인종 집단은 어떠한 행위성을 취해 왔으며, 또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신자유주의 맥락 하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 담론에 대한, 더 넓게는 주류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수용되는 방식에 대한 소수 인종 집단의 반응과 행위성은 그간 다학제적인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는 정착형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를 경험한 남미 지역의 원주민(indigenous people)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소수 인종 집단은 자신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 정책 혹은 담론이 제공하는 기회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주체로 그려졌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을 거부하는 비전형적인 행위성을 강조하거나 (Dest 2020), 다문화 정책의 수용과 거부의 동시적이고 양가적인 작용에 주목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Jensen (2011)은 덴마크의 주류 사회가 흑인 청소년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들이 가진 이질성에 대해 열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해 낙인을 찍는, '교차적 타자화(intersectional othering)'를 행함에 따라, 당사자인 흑인 청소년들 역시 주류 사회에서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정체성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자본화(capitalization)와 타자적인 정체성을 거부

하는(refusal)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을 밝혔다. Hale (2020) 역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례 연구에서 원주민 집단이 주류 사회의 폭력에 저항하는 한편,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법적 도구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using and refusing the law)' 상반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전략을 사용함을 포착했다.

한편, 수용과 거부라는 두 종류의 행위성은 반드시 소수 인종 집단 내부의 하위집단이나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분화되거나 변화되기보다는, 집단이나 개인 내부에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유발하며 공존하기도 한다. 예컨대 Park and Richards (2007)는 칠레의 마푸체(Mapuche) 원주민의 사례연구에서 정부와 소수 인종 집단을 대결 상태로 보는 거시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부에서 일하며 원주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원주민 직원의 혼종적인 주체성을 다뤘다. 이들은 공인된 원주민(indio permitido)과 타자(Other)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그 사이에서 늘 딜레마를 겪으며,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원주민을 위해 정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원주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등 수용과 거부 사이에서 진동하는 다채로운 행위성을 보이게 된다 (Park and Richards 2007).

이와 더불어, 수용과 거부라는 이항대립적인 구도 자체를 탈피하여 그 밖에 존재하는 행위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Speed (2005)는 멕시코 사파티스타(Zapatista) 원주민의 사례 연구를 통해 소수 인종 집단이 정부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라는 틀을 우회하여 정부 체계 밖에서 대안적인 논리, 체계, 거버넌스를 추구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권리를 스스로 정의하는 모습을 논했다. 이는 정부에 의해 전용된 인권 담론의 '아래로부터의' 수용 혹은 거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밖에서' 인권 담론을 직접 전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Speed 2005). 또한 Schiller (2011)는 미국 맨체스터시의 사례 연구에서 이주민이 비인종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우선적인 준거로 삼으며 신자유주의나 다문화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문화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다뤘다.

다시 처음에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소수 인종 집단의 권리 측면에서 갖는 유용성과 제한성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Bourassa 2021; Ahmed 2012; Hale 2002), 킴리카는 그 양상이 아주

전복적인 수준의 성공이 될 수도, 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그 스펙트럼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결국 해당 사회가 기존에 다문화주의를 구현해온 수준과 양상에 달려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즉, 맥락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Kymlicka 2012). 그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설을 뒷받침하지만, 해당 가설을 입증하고 세부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에 대한 사례 연구가 충분히 축적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Kymlicka 2012). 이 같은 메시지는 특히 관련 방향으로의 탐색이 부족한 한국의 사례를 향하고 있기도 하다.

3.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서구 사회에서 1960 년대에 다문화주의가 논의되고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20 년이 흐른 후인 1980 년대에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이 도래한 것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흐름이 역순으로,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태동하였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서구보다 한발 늦은 1990 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IMF 경제 위기를 맞아 국가라는 보호막이 사실상 붕괴되고 개인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비로소 각자도생을 모토로 내세우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경제 주체가 탄생했다 (홍태영 2022).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의 상품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1980 년대말 이주 목적국으로, 그리고 1990 년대 이주 노동의 순유입국으로 거듭났는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과 더불어 한국 내 경제 구조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기인했다 (임월산 2011).

‘다문화’ 에 관한 논의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구조의 개편이 시작된지 약 10 년 후인 2006 년에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6 년 4 월 외국인 이주자 및 혼혈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학계와 언론에서도 즉각적으로 관련 논의가 폭발했다 (Kim 2010). 이 종합 대책은 통제에서 통합으로, 즉, 보다 온건하고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적 기조로의 전환을 의도했으나 (최병두 2012a; Kim 2010),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정주의적으로 구상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최병두 2012a).

도입의 시기와 순서, 성숙도 외에도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역사와 정서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된다. 먼저,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발전주의가 맹위를 떨친 이후,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 사이 민주화 및 세계화로 전환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여전히 발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병두 2007). 이 같은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의 혼재는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발전주의적 목표를 위해 신자유주의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발전주의가 신자유주의를 보완하기도 하며 (윤상우 2009), 발전주의는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신자유주의와 융합되어 존속하기도 한다 (박상영 2015).

김현미 (2018)는 또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기존의 부권적 권위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개인화와 정부 개입의 축소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사회 안전망 보장의 의무만을 선택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국가없음'은 역설적으로 민족주의 정서로의 회귀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2018).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관련해서는 단일민족주의 및 순혈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경석 (2009)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단일민족주의나 순혈주의가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 시절 상상되고 발명된 신화일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해 형성된 관행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서가 자연스럽게 제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가 정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김현미 (2018)는 한국 사회에는 역사적 상흔과 급속한 경제 성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유사 제국주의적 정신 상태'가 존재하는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인종주의에 관한 공론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포스트인종주의의 흐름이 조숙하게 덮쳐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종 차별이 노골적으로 지속되면서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 같은 두 가지 맥락이 혼재한 가운데 태동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사실상 다문화주의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왜곡된 형태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 이유

는 첫째, ‘다문화’라는 언표의 도입과 무관하게 관련 정책이 사실상 차이의 불인정을 특징으로 하는 동화주의와 차별적 배제주의의 혼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두 2012a).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주의는 정책의 부재로 나타났고, 다문화 정책 자체가 전제 이주자 중 소수를 차지하는 결혼 이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동화 정책으로 축소되었다 (김현미 2018).

둘째로 ‘다문화’라는 언표는 유명무실함을 넘어 인종적 타자 및 주변화된 계급을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전락함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인종주의적 색채를 함유하게 되었다 (김현미 2018; 육주원 2016). ‘다문화’에 덧씌워진 이 같은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함의로 인해 ‘다문화’라는 용어는 역설적이게도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반다문화’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급기야 당사자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문화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정선 2011; 오경석 2009).

오경석 (2009)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갖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적이고 공급자(주류 사회) 중심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그로 인해 이주민의 문제는 이주민만의 문제로 분리되는 동시에 이주민이 주체적 역할을 박탈당하는 타자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주민 집단에 대한 차등화된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특히 이주민 집단에 대한 차등화는 국가 주도성과 공급자 중심성뿐만 아니라 포스트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함께 얽혀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자와 국적 등의 제도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화와 더불어, 크게 한국보다 ‘나은’ 선진국과 한국보다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양분되는 출신 국가에 따라 형성된 위계적 민족성(hierarchical nationhood)이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고착화되었다 (최선영 2022; Seol and Skrentny 2009).

이 같은 위계적 민족성은 특히 이주민 집적지의 입지, 형성, 유지, 소비 과정에서 발현되어 왔기에 지속적으로 공간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한국 내의 소수 이주민 집적지는 사실상 중국계 이주민의 것을 제외하면 아주 가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박세훈 2017), 크게 이를 서초구의 프랑스인 중심의 서래마을이나 용산구의 일본인 중심의 이촌동과 미국인 중심의 이태원과 같은 선진국 출신 이주민 집적지와, 재한 조선족,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계 외국인 등의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 집적지로 양분하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기존연구는 전

자의 경우 중심적이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민족의 자발적 단합에 의해 능동적으로 형성되며, 주류 사회에 의해 소비되고, 선망되고, 상품화되는 반면, 후자는 주변적이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주류 사회에 의한 차별과 분리에 의한 고립의 성격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주민들만의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주류 사회에 의해 배제되고 주변화됨을 주장했다 (최선영 2022; 이정현과 정수열 2015; 공윤경 2013; 최병두 2012). 특히 최선영 (2021)의 연구는 프랑스인 집적지가 위치한 서초구에서 나타나는 포섭과 재한 조선족 집적지가 위치한 영등포구에서 나타나는 배제를 분석하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징후임을 짚었다.

4. 기존 문헌의 특성과 한계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인 구현 방식은 정치 철학으로서 공표된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이 놓인 사회의 역사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김일권 2015). 이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사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한다기보다, 반대로 "촘촘한 사회 관계의 장(a dense field of social relationships)" 에 의해 조건화되기도 한다 (Kymlicka 2012, 99).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만남은 신자유주의가 다문화주의를 바꾸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상호적인(reciprocal)"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Kymlicka 2012, 101).

이처럼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역사와 현황, 철학, 외부로부터 유입된 힘 등이 상호 구성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대상의 되는 사회의 맥락적 독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이 정책 모형 간의 깔끔한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한 모형에서 다른 모형으로 이행하거나 기존에 연구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발현 방식이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깔끔한 경계를 상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세 가지의 취약점을 논의하고, 모호하고 중첩적인 경계에 대한 가능성을 수용함으로써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이다. 킴리카는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사회자유주의로서 다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다문화주의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과정을 신자유주의적 반다문화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의 이행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처럼 특정한 형태의 변천사를 가정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at first glance)" 신자유주의가 반다문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냉정한 재평가 이후(on a sober second glance)"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나 (Kymlicka 2012, 109),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시민상은 "관용적인 국민(tolerant national citizen)"에서 "코스모폴리탄 시장 행위자 (cosmopolitan market actor)"로 완전히 "대체(displace)"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Kymlicka 2012, 111)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짚는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특히 비서구 국가에서 나타나기 쉬운 과도기적이고 양가적인 접합의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Desille (2019)는 이스라엘 소도시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용에 따라 이주민을 선별하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태동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이스라엘이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보여 온 국가주의적이고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을 무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경제적 논리와 자민족 중심주의의 정치적 논리가 공존하는(cohabitate) 모습으로 이어졌다. 또한 육주원 (2016)은 한국 정부의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반다문화주의와 '차이'의 신자유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상동성을 보이고 협력적 경쟁 관계를 구성함을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신자유주의적 반다문화주의와 과연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남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선택적 포섭 및 배제는 특정한 계급에 따라 위계화된 집단 간의 구분에 맞추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Melamed (2006)는 신자유주의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인종적 계급(color lines)에 따른 집단 간 위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인종적 계급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이념적, 문화적, 종교적 구분(economic, ideological, cultural, and religious distinctions)" 에 따라 "새로운 특권과 낙인의 범주(new categories of privilege and stigma)"를 구성하기도 함을 주장한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상위 집단인 백인 및 북반구 출신들, 혹은 고소득 창조계급(creative class)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위 집단이 포섭의 대상이 되며, 이들의 안티테제에 해당하는 유색인종, 남반구 출신, 저임금 노동 계급은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작동 방식을 구계급 혹은 신계급에 따른 집단 간의 구별로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완전한 포섭과 완전한 배제의 경계에 있는 집단 내의 혼종성에 대한 상상력이 제한된다. 집단을 포섭 혹은 배제의 이분적인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은 한 집단 내에서 세부적인 영역이나 대상에 따라 포섭과 배제가 공존하는 모습이나 포섭에 따르는 조건성 혹은 배제에 따르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같은 혼종적인 형태의 포섭-배제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Lan (2019)은 대만의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에 대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동화주의적인 기조와 자녀의 능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적인 기조가 공존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 내에서 세대에 따라 추가적인 포섭 혹은 배제가 일어남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혼종성을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공간과 같은 비계급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포섭의 가능성이 간과된다. 예컨대 소수 이주민 집적지는 집적이라는 공간적 메커니즘을 통해 상징성을 획득하는 한편, 주류 사회의 영토를 점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완전히 타자화되기보다는 '자아'와 '타자'가 중첩된 성격을 갖게 된다. 설령 이주민 집단의 종류에 따라 전형적인 포섭 혹은 배제의 패턴이 존재해 왔

다고 해도, 이 같은 공간적인 특성은 신자유주의적인 포섭의 가능성을 높이고 배제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계급에 따른 집단 간 구분에 복잡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스케일적인 역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지방, 국가, 국제 사회 등의 폭넓고 다중적인 스케일 위해서 작동하는 만큼,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스케일에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기보다 스케일의 바뀜과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Seet and Zhao (2021)는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내부에서는 다문화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일어나는 반면 외부에서는 오히려 호주의 다문화 이미지를 지우고 백인 국가 이미지를 유지할 때 자본 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스케일 간의 역설과 긴장관계를 포착했다. 이는 담론이 구성되는 스케일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내용과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의 경우 다문화주의의 성숙과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대신 다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각각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동시대에 뒤얽힌 탓인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신자유주의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메커니즘을 일차적 혹은 부차적으로 밝힌 일부 연구를 상술한 세 가지 지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지영과 서정민 (2013)은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주류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을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포섭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계화와 “또 다른 방식의 배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집단 내의 복잡하고 혼종적인 역동을 다루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육주원 (2016)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반다문화 담론이 갖는 신자유주의성을 일부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반다문화 담론과 정부의 ‘다문화’ 담론을 협력적 경쟁 관계로 프레이밍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주의를 신자유주의적 반다문화주의를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비판해볼 수 있는 초석을 제공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비정부 담론에만 집중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실질

적 주체인 정부의 행위 특성은 공백으로 남겨두거나 간접적으로 논의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선영 (2021)은 지방정부의 외국인 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족적 위계에 따른 차등화라는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이 작용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이론적 틀로 채택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신자유주의적 메커니즘을 세밀하게 진단했다는 점과,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주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새롭게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집단의 종류에 따른 포섭 혹은 배제에 천착함으로써 한 집단 내부에서 나타나는 포섭-배제의 양면성에 대한 미시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 2 절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

1. 다문화 정책 모델

그간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 통합의 수준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된 몇 개의 모델을 바탕으로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Castles and Miller (2009)는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의 세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세가지 모델은 이주민의 시민권과 문화권의 인정 여부 및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차별적 배제주의는 이주민의 시민권과 문화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장기적인 정주를 저지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주류 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이주민에게 시민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이질적인 문화를 버리고 주류 사회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주류 사회로 동화됨을 추구한다. 즉, 시민권의 조건으로서 동화를 내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기념하며 이주민의 문화권과 시민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 다문화 정책의 국가 단위 모델은 국가주의와 다문화 정책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민족적(ethnic), 시민적(civic), 다문화적(multicultural) 모델의 세 가지로 나뉘기도 한다 (Karimi and Wikes 2022). 이때 민족적 모델과 시민적, 다문화적 모델 간의 구분은 상당 부분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 형태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Karimi and Wikes 2022).

[표 2-1] 다문화 정책 모델에 따른 소수 인종 집단의 시민권과 문화권의 인정 여부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시민권	X	O	O
문화권	X	X	O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국가 모델들의 현실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개념은 다문화주의를 문화권과 시민권을 모두 보장하는 이상적 모델로 보는 시각에 비판을 가한다. 신자유주의

적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자본화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생산적 포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 같은 비판은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가 과연 동화주의나 차별적 배제주의로부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회는 이 중 하나의 모델만을 배타적으로 취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는 모두 내국인과 이주민을 차등화하는 시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의 틀 아래 논의되는 현상을 '신동화주의(neo-assimilation)'로 명명해도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그 편이 더 본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Reid 2019).

Karimi and Wikes (2022) 또한 이 같은 모델들이 귀납적 유형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기에 일반화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들이 각 모델에 해당하는 사회를 설명하는 정답으로 과신됨에 따라, 경험 연구에서 해당 모델을 분석틀로 취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분석틀에 현상을 끼워맞춰 동어반복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Karimi and Wikes). 이 같은 관례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과연 경험적으로 이 같은 카테고리에 완전히 들어맞는지 자문해보고, 국가주의와 다문화 정책이 관계 맺는 다른 방식을 적극적으로 상상해보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창의적인 발견을 도출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Karimi and Wikes 2022).

위의 논의를 종합할 때, 특정 모델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모델의 하위 구성 요소에 얽매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은, 모델에 전형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참신한 발견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같은 한계는 기존의 모델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는 '모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과론적인 정책의 양상과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정당화의 메커니즘을 열린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분석틀의 고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을 어느 모델로 분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대신에, 정책이 어떤 담론

적 요소를 통해 작동하고 그 담론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다 탐색적이고 메커니즘의 이해를 지향하는 접근은 특히 국가 스케일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지방 스케일의 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국가 수준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모델을 그대로 이식해 적용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이주민의 시각이 어느 지점에서 수렴하거나 충돌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도 담론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2. 다문화 정책 담론의 양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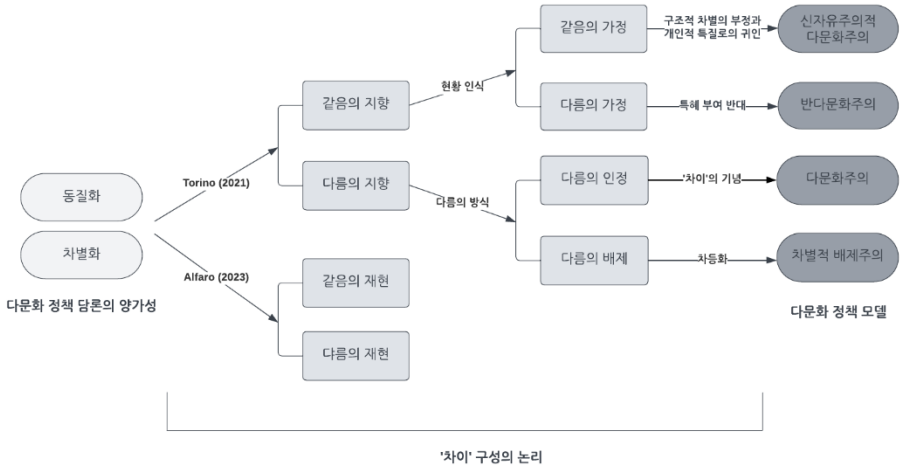
한편, 다문화 정책의 담론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주로 그 담론이 보이는 양가성에 주목해왔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개념은 포섭과 배제의 동시적인 작동을 주요 비판 지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자본주의/신자유주의와 인종의 접점에 천착한 다수의 사례 연구가 소수 인종 집단의 '차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포착해서 병치시키고, 대조하고, 비판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의 뼈대로 삼았다 (Alfaro 2023; Hashimoto 2021; Torino 2021; 최선영 2021). 시선을 다문화 정책 담론을 포함하는 다문화 담론으로 확대하면 이러한 구조는 더욱 빈번하게 관찰된다 (Roderick 2019; Shin 2019).

이처럼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담론적 양상과 관련해서, 특히 일부 연구는 공통적으로 한 집단을 상대로 동시에 작용하는 동질화(homogenization)와 차별화(differentiation)의 힘들을 언급했다. 예컨대 Torino (2021)는 콜롬비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콜롬비아의 다문화 정책이 차별화와 동질화, 즉, 위계화(hierarchise)와 문명화(civilise)의 동시적인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Torino 2021, 709). 이는 다시 말해 소수 인종 집단을 주류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지위로 고착시키려는 시도와 인종적 소수자를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는 일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각각 다름과 같음에 대한 지향을 바탕으로 인종적 소수자를 규제하는 효과를 낳는 담론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lfaro (2023)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사례 연구에서 동질화/차별화를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했다. 이때 동질화와 차별화는 같음 혹은 다름을 미래적으로 지향하는 힘들보다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현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힘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동질화와 차별화를 분석틀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문화 정책 담론에서 소수 인종 집단이 주류 집단과 같거나 다르다고 인식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정치적 함의를 짚으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처럼 동질화와 차별화의 이중적인 작용에 천착하는 것은 모델에 천착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따라서 유연하며, 다문화 정책 담론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추상화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분석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풍부한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Torino (2021)와 Alfaro (2023)는 각각 동질화/차별화를 지향과 재현의 의미로 한번 더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두 방식 간의 상이함은 동질화/차별화의 개념이 다문화 정책 담론의 다양한 면모를 포착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추가적인 구체화 작업 없이 바로 분석틀로 도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질화와 차별화는 그 표면 아래 같음과 다름이 이용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포괄할 수 있다. 예컨대, Torino (2021)가 사용한 같음/다름의 지향이라는 일차적인 세부 분류에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하위 개념을 덧붙임으로써 동질화/차별화의 분석틀을 구체화며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림 2-1).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며 계속해서 개념을 구체화하다보면, 결국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이념과 모델을 특징 짓는 아주 구체적인 논리들과 만나게 된다. 이처럼 추상적인 동질화/차별화라는 담론의 양상, 그리고 반대로 구체적인 - 그리고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현실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수반하는 - 다문화 정책 모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논리들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좋은 분석틀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논리들은 소수 인종 집단과 주류 집단 간의 '차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논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 분석틀 구체화의 예시

3. ‘차이’ 구성의 논리

앞서 다문화 정책의 분석 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다문화 정책 모델을 유연화할 필요성과 동질화/차별화라는 다문화 정책 담론의 양상을 구체화할 필요성과, 그 둘 사이에 존재하며 둘을 연결하는 ‘차이’ 구성의 논리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필요성이 충족될 가능성을 논했다.

Rabii (2023)는 이 같은 ‘차이’ 구성의 논리들을 다문화 담론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모델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그의 연구는 미국 뉴욕주 버팔로시의 다양성 중심 브랜딩에 대한 미디어와 사업가의 담론을 분석하여, 버팔로시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feel good stories)과 글로벌 어필(global appeal)이 상호 구성함(mutually constituting)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부르디외(Bourdieu), 벨(Bell), 비먼(Beeman)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글로벌 어필을 각각 구성하는 논리들을 짚고 분석틀로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인종과 무관한 언어의 사용 (colorblind discourses and logics), 다양성에 대한 추상적인 칭송 (diversity ideology),

이주의 상징적 측면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전략 (neoliberal market logics), 인종주의 회피 (racism evasiveness)과 같은 논리들을, 그리고 글로벌 어필은 다양성 프레임, 경제 활성화 프레임, 상징 자본, 경제 자본과 같은 프레이밍 전략들을 통해 작동한다고 규정했다. 이 논리들은 인종을 희석하고, 탈정치화하고, 자본화하는 방향으로 이주민이 갖는 '차이'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 구성의 논리들은 다문화 정책 모델 및 동질화/차별화와 연결되면서도, 다문화 정책 모델보다는 유연하고 동질화/차별화보다는 구체적인 특성을 띤다. 예컨대 다양성 이데올로기는, '차이'를 부각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인종적인 특정성과 부정성을 희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작용은 동질화와 차별화를 각각 다른 층위에서 혼합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모델과 연결된다.

본 연구 역시 다문화 정책 모델과 동질화/차별화의 양가적 담론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차이' 구성의 논리들을 대림동에 대한 영등포구의 정책의 분석틀로 정립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abii(2023)가 제시한 개념들과 분석 방식을 일부 참고하는 한편, 해당 연구와 본 연구가 갖는 맥락의 차이를 인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의 사례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이주민 공간을 사례로 서구적 맥락을 다루는 반면, 본 연구는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민 공간을 사례로 한국적 맥락을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그의 분석틀을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컨대 인종주의를 은폐하기 위해 인종적 차원의 언급을 피하는 모습(racism evasiveness)은 오랜 기간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이 축적되고 소수 인종 집단이 주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임파워먼트를 달성한 이후에 포스트인종주의적 흐름으로 나아간 서구 사회의 다문화 정책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문화 정책 모델과 동질화/차별화의 양가적인 다문화 정책 담론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각각을 유연화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차이' 구성의 논리들을 추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을 구성했다 (그림 2-2). 자산/부담 (Torino 2021; Kymlicka 2012), 인종화 (Hashimoto 2021; Roberts and

Mahtani 2010), 인종의 희석 (Rabii 2023; Hashimoto 2021; Torino 2021), 본질화 (Pierik 2004; Mazzarella 2004), 민영화(Rabii 2023; Lentin and Titley 2011), 동화, 차등화, 인정/포섭의 8 개 개념이 이에 해당되며, 각 개념의 간략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자산/부담(asset/liability): 자본적인 관점을 우선시하여 '차이'를 자산 혹은 부담으로 규정하는 시각.
- 인종화(racialization): '차이'를 인종적인 특성과 결부짓는 시각.
- 인종의 희석(dilution of race): 인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우회하여 문화나 다양성과 같은 대체적이거나 더 넓은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경향.
- 본질화(essentialization): '차이'를 특정 집단의 영속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는 시각.
- 민영화(privatization): '차이'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맡지 않고 사적 주체에게 전가하는 경향.
- 동화(assimilation): '차이'의 제거와 주류에의 동화를 지향하는 시각.
- 차등화(differential treatment): '차이'의 존재 여부와 종류에 따라 다르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정당화하는 시각.
- 인정/포섭(recognition/embracement): '차이'의 보존, 기념, 이용을 지향하는 시각.

[그림 2-2] 다문화 정책의 분석틀로서 '차이' 구성의 논리

제 3 절 분석틀

본 연구는 대림동이라는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로컬 스케일 동학 속에서 드러나는 '차이'의 정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둘째,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영등포구의 '차이' 인식과 관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들과 대림동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 같은 연구 질문은 앞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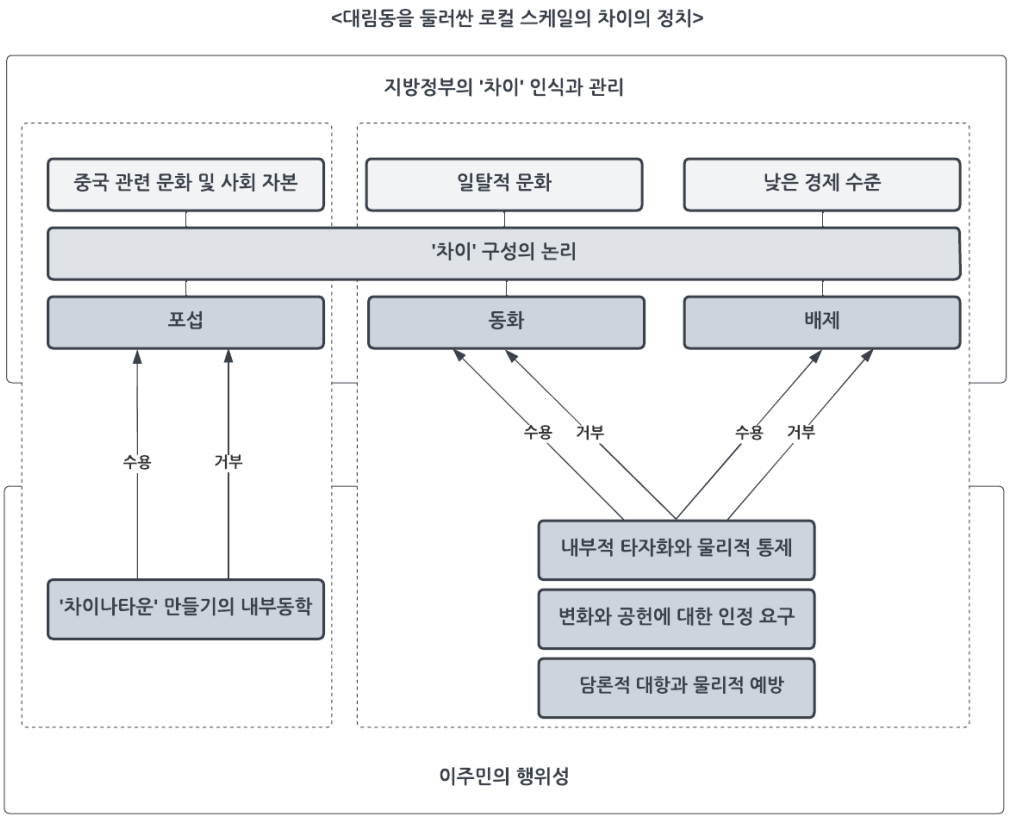
첫째,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특성 중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포섭하거나, 동화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가?

둘째,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영등포구의 포섭, 동화, 배제를 수용하는가 혹은 거부하는가? 그리고 그 동기와 방식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장의 2 절 3 에서 논의한 다문화 정책의 '차이' 구성의 논리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영등포구의 '차이' 인식과 관리 기조 가운데 '차이'를 인정/포섭하거나, 동화하거나, 차등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이'를 자산/부담으로 보거나, 인종화하거나, 본질화하거나, 그 인종적 요소를 희석하거나, '차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민영화하는 모습과 그 세부적인 작동 논리를 짚는다.

이 분석틀은 두번째 연구 질문의 규명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즉,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행위성에서 이 같은 영등포구의 '차이' 구성의 논리 중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3).



[그림 2-3] 본 연구의 분석틀

제 3 장 지방정부의 ‘차이’ 인식과 관리

영등포구는 이주민을 내국인과 차이나는 존재로 바라보는 한편, 그러한 ‘차이’를 곧 한국 내 다른 도시나 서울시 내 다른 구에 비해 이주민 인구의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자신의 특색으로 인식하기도 했다[5]. 이처럼 영등포구는 이주민이라는 ‘차이’를 타자 혹은 자기로 귀속시키며, 문제이자 기회로 인식하고[6], 그 ‘차이’가 수반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파급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차이’의 특성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졌다. 영등포구의 ‘차이’는 이주민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양적인 특성과, 그중 대다수를 중국계 이주민이 차지함으로써 형성된 중국색이라는 질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7].

그리고 대림동은 영등포구 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이주민 집적지로서, 이주민과 영등포구가 갖는 ‘차이’를 충실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물로 인식되었다[8].

---

[5] “다문화가 우리의 한 13%를 차지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글로벌시대니까. 25개 중에서도 우리 영등포구가 최고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니까.” (제21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19.02.25))

[6] 이 같은 이중적인 인식의 경합은 다문화지원과를 둘러싼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다문화지원과는 ‘차이’의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2016년에 신설되었으나, ‘차이’ 자체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그 존재감을 축소하려는 흐름에 따라 2018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지원과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문화지원과의 존재가 곧 ‘차이’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영등포구의 우월성을 증명한다며, ‘차이’와, 넓게는 ‘차이’가 수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를, 다시금 문제보다는 기회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참고: 제211회 행정위원회 제2차(2018.11.22))

[7] “… 대림동만의 영등포구만의 그 많은 인원 다문화 중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인이 가장 많잖아요. …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202회 본회의 제2차(2017.09.05), 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논의 중)

[8] 이에 대림동은 다문화 의제와 관련한 영등포구의 우위를 역설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컨대 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논의를 보면, 대림동이 영등포구에 속한다는 사실을 핵심 근거로 이용해 영등포구가 회비를 내고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다문화 관련 의제를 선도하는 중심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이’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림동은 영등포구의 ‘차이’를 강조하는 기제로 활용된 것이다. (참고: 제19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2016.12.06))

본 장에서는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차이’를 다루는 방식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장 2절에서 논의한 ‘차이’ 구성의 담론적 메커니즘을 도구로 활용하여, 영등포구의 정책적 실천과 그 토대를 이루는 담론에 드러난 논리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주민의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며 이주민이 포용과 배제의 스펙트럼 위의 어느 지점에 위치 지어지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차이’ 인식과 관리의 다층적이고, 혼종적이고, 유동적인 면모를 포착한다. 분석에서 특히 주요하게 활용된 정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주요 분석 대상 정책

정책명	시행 시기	관련 부서 및 기관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만들기 조성사업	2017	다문화지원과
한중문화축제	2017-2019	다문화지원과/지역경제과
대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17-2020	지역경제과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2021-	도시계획과
스마트메디컬특구	2018-2022	보건지원과/비전협력과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2022-2026	영등포문화재단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개발사업	2012-	도시계획과

제 1 절 중국 관련 문화 및 사회 자본의 포섭

1.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대림동은 중국어가 적힌 화려한 간판, 중국풍 건물, 중국에서 수입해오거나 중국식으로 만들어낸 음식과 상품 등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의 일상적 실천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국적인 경관과 문화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9].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이처럼 대림동이 제공하는 이국적인 스펙터클과 체험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광고하고자 했다. 특히 2010 년대 중후반부터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두드러졌는데, 서울시의 차이나타운 지정 시도(2015),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협력해 추진한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만들기 조성 사업(2017), 영등포구의 한중문화축제(2017-2019), 대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2017-2020),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202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구상은 2010 년대 중후반에 대림동의 관광화를 위한 내외부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서로 맞물리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영등포구 회의록에 드러난 2017 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관련 논의와 2022 년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 논의,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영등포구 관계자의 발언 모두 대림동 내부의 자연발생적 여건과 외부적이고 상황적인 기회가 동시에 무르익었음을 강조했다.

> "지금 대림동 중앙시장은 특화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림동 중앙시장에 가면 중국 음식에 대한 재료를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내국인도 거기에 어떤 중국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외국 가면 중국 상인 거리가 더럽든 깨끗하든 한 번 가보잖아요. 그런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인데 지금 관광코스 이런 데서도 빠져있다는 거죠." (제 205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2017.11.22), **문화관광형시장** 관련 논의 중)

---

[9] 본 논문의 1장 2절 1 참고

"저희가 이것을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 특성화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쪽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235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4 차(2022.02.10),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 논의 중)

"요즘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라탕, 양꼬치 이런 음식들이 정말 인기가 있는데 중국에 가지 않아도 중국 제조 방식으로 중국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중국 음식점이 집적돼 있는 곳이 정말 특이하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 그런 측면에서 대림동도 놀러 와서 괜찮다 이런 느낌 받으면 (대림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 1 인터뷰 중)

이처럼 대림동은 특화에 유리한 기본 여건을 자연적으로 갖추게 된 곳으로서, 중국 음식 재료를 사거나 중국 상인 거리를 구경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관심을 갖고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대림동 내부의 여건은 마라탕과 양꼬치 등의 중국 음식 열풍과, 그러한 유행을 만들고 또 그에 합류하는 젊은 세대들의 방문 추세가 강화되는 외부적 상황 속에서 더욱 가치 있게 여겨졌다. 다시 말해 대림동의 잠재적 관광객, 그 중에서도 주류 사회의 젊은 관광객이라는 자본의 출처가 부상하고 확대됨에 따라 대림동의 문화 자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잠재적 관광객에 의해 욕망되는 중국 음식 문화를 특별히 부각하여 대림동을 '차이나타운',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등으로 명명함과 더불어,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인천차이나타운 등의 기존 차이나타운과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등포구는 대림동이 "서울 한복판에 2 호선 역세권에 있는 차이나타운"(영등포구 관계자 1)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대림동이 드러내는 중국성의 진품성(authenticity)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림동이 일차적으로 주류 사회와 비교해 갖는 '차이'인 중국성이, 이차적으로 대림동과 여타 중국성 중심 특화 지역 간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다.

예컨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일환으로[10] 2019 년에 개설된 대림중앙시장 홈페이지[11]에는 'China Town in Seoul' 이라는 커다란 슬로건(그림 3-1)을 필두로 "서울에서 즐기는 중국문화", "서울 안에도 중국이 있어요. 중국의 문화와 맛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 대림중앙시장으로 찾아오세요. 학생분들은 생활 중국어를 사용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처럼 중국성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즐비하다.

이 같은 중국성 자체의 강조와 더불어, 해당 홈페이지는 "전국에 많은 차이나타운이 있으나 짜장면 탕수육이 아닌 중국 현지 음식체험과 중국 현지 식재료를 모두 구할 수 있는 중국거리는 대림중앙시장이 유일" 하고 "전국에 많은 차이나 타운이 존재하지만 중국 현지와 같은 거리 분위기" 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중국 현지' 와 같은 중국성, 즉, 중국성의 진품성을 다른 차이나타운과 구별되는 대림동만의 고유한 특색으로 적극 광고하였다.

[그림 3-1] 대림중앙시장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
(출처: 대림중앙시장 홈페이지)

---

[10] 2017 년부터 2020 년 사이에 시행된 대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대림중앙시장의 로고와 마스코트를 개발하고 대림중앙시장에 대한 ICT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다. (참고: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017.07. 대림중앙시장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계획서(안); 대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2017.06. 대림중앙시장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11] 대림중앙시장, http://www.daerimmarket.co.kr

영등포구는 이처럼 ‘차이’를 담론적으로 구성하고 장식하는 동시에, 물리적 개입을 통해 ‘차이’를 극대화하고 ‘차이’의 관광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2018 년 다문화지원과 폐지 이후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사실상 2021 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과의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영등포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 “그런데 그분들(관광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걷는데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의 음식 문화 그런 것을 존중을 하면서 좀 가로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특화된 어떤 경관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차량이 막 왔다 갔다 양쪽으로 교차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좀 몰아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235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4 차(2022.02.10),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 논의 중)

해당 사업은 이처럼 가로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 과정에서 더 특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간판의 난립과 보도의 미비 등 불편함을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구상되었다. 이는 물리적 개입에 치중하는 도시계획적 특성을 한층 더 짙게 드러내는 동시에, ‘차이’의 확대와 ‘차이’의 관광에 방해가 되는 요소의 제거라는 이중의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의 관광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비단 간판의 난립과 보도의 미비와 같이 ‘차이’의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에 국한되어 정의되지는 않았다. 일례로 연구에 참여한 영등포구 관계자 1 은, 해당 사업을 통해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이’인 이주민의 음식 문화의 역시 일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결국 누군가 젊은 세대가 지하철 타고 여기 와서 음식을 먹고 싶게 하려면 저는 개고기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청이랑 협의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 개고기를 정육점처럼 개를 매달아놓고 판매하는 점포는 5 개인데 거기를 좀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계자 1 인터뷰 중)

개고기를 판매하는 문화와 같이 외부 관광객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요소는, 설령 그것이 특화의 대상이 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차이’의 일부일지라도 – 혹은 그렇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차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요소를 극대화하거나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소비하는 외부 관광객의 수용성과 취향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림동은 소비하고 싶은 ‘차이나’ 타운이자, 소비하기 편리한 차이나 ‘타운’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2. 재중 네트워크와 이중언어 능력 활용

2010 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형성한 중국적인 경관과 문화와 같은 문화 자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재중 네트워크나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능력과 같은 (잠재적) 사회 자본 역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더 구체적으로 대림동의 ‘외국인’은 영등포구가 욕망하는 ‘외국인’을 원활하게 유치하고 수행하거나 내국인의 국제 진출 능력을 배양시키는, 즉, 한국과 중국 간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의 두 방향의 모빌리티를 촉진하고 조력하는 실용적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1) 외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속적으로 영등포구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거론되어 왔으며, 2010 년대 초반부터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2010 년대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 본토와의 연결이 갖는 이점이 커짐에 따라, 영등포구는 2010 년대 후반부터 의료와 금융 분야의 국제 교류 정책에서 중국을 중심 타겟으로 상

정하며 중국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윤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최근의 인식은 스마트메디컬특구와 국제금융특구 관련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 "잘 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특구가 영등포에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사실 특구라 함은 일단은 정말 전문화된 또, 부가가치가 큰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자 유치가 중요하지 않는가. ...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아요." (제 206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8.02.28),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 논의 중)

> "최근에 금년 1 월달에 상하이에서 황포구, 중국의 경제 중심지는 상하이이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는 황포구입니다. 황포구하고 상호우호조약을 맺었고 그 중에서 금융분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적 교류, 그리고 금융 간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일자리나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4 회 본회의 제 2 차(2019.06.24), **국제금융특구** 관련 논의 중)

[그림 3-2]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계획도
(출처: 영등포구, 2017.10.23.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계획(안))

이 중 의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메디컬특구(그림 3-2)는 특히 한국보다 "약간 의료기술이 떨어진[12]", 그러나 막대한 인구수를 가진 인접 국가인 중국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13]이며, 따라서 환자 유치 실적에 대한 양적 평가가 그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14].

영등포구는 특히 스마트메디컬특구가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비슷한 정책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15], 이는 영등포구가 보유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라는 '차이'를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이어졌다.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의료 특구 관련 일자리의 수혜자로 프레이밍되기도 했으나[16], 일차적으로 인맥과 같은 직접적 사회 자본을 이용해 관광객 유치의 촉매 작용을 하거나 언어와 같은 잠재적 사회 자본을 이용해 관광 활동을 조력하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교류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과 지원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의 이분적 구조가[17] 교란되었고, 대림동의 '외국인'은 후자를 넘어 전자에 관계하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정책의 대상으로서 포섭된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가 욕망하는 외부의 '외국인'을 유인하고 수행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 같은 구상은 의료 특구 시행 이전(2015)부터 움트기 시작해, 의료 특구 시행 중(2018-)에 지속되고 발전되었다.

> "... **대림동** 지역에는 4만 5,000명의 조선족 동포 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대림동 지역에 종합병원만 네 곳이나 되므로 이 지역 시흥대로변과 대림 역세권 중심으로 메디컬벨리를 조

---

[12] 제233회 행정위원회 제1차(2021.10.18)
[13] 제233회 행정위원회 제1차(2021.10.18)
[14] 제2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2022.12.15)
[15] "…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강남이나 이런 데로 뺏기지 않고 영등포로 유입하게 하려면 영등포만의 차별화된 어떤 좋다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느끼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2020.12.18))
[16] 제20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17.10.23)
[17] 본 논문의 3장 1절 3-1)-(1) 참조

성하여 성형외과 같은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특성화된 지역개발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187 회 본회의 제 1 차(2015.04.24))

"**대림동** 지역에 중국 동포나 중국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수가 많고요. 그것이 홍보효과라든가 의료특구로 했을 때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할 방안이 크다고 봤었고요." (제 206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8.02.28))

"... 기존에 거주하시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는 더 극대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제 그 분들이 거주를 했고 또 우리 역시도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홍보하려고 더 노력을 하잖아요. ...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우리 의료관광특구라든가 스마트메디컬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제 211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 차(2018.12.17))

"...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 그분들의 가족이나 중국 현지에 있는 분들을 연계해서 안내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218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9.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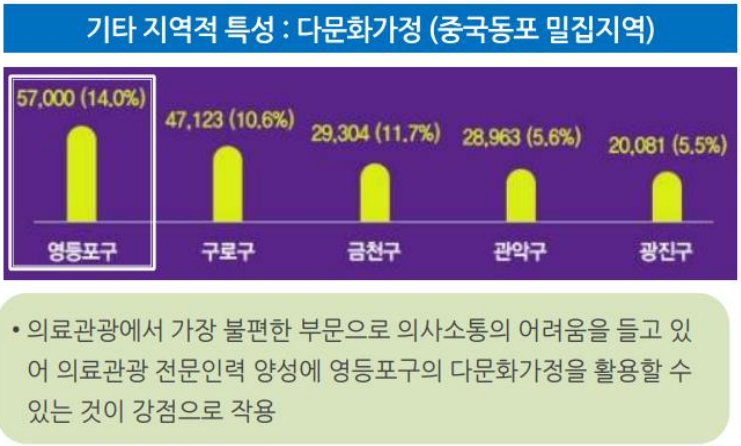
"... 우리 영등포도 외국인들이 한 5 만 명 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단체를 통해서 또 하는 방법. ... 중국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치를 해오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어떠한 이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을 통해서 외화 획득도 되는 거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의 특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233 회 행정위원회 제 1 차(2021.10.18))

영등포구를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중 중국 출신 환자가 가장 많고, 관련 정보 습득 경로로 주변 사람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18], 대림동을 비롯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자신의 거주 및 의료 서비스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지인을 의료 특구로 유인할 수 있는 매개자로 인식되었

[18] 영등포구. 2017.10.23.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다. 또한 이 같은 사회 자본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는 점점 확대되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인 차원을 넘어 단체를 통한 연결을 추진하는 등의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이 보유한 재중 네트워크에 주목함과 더불어,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원활하게 구사하는 그들의 이중 언어 능력 역시 의료 특구의 운영에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의료 특구 사업의 일부로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재한 조선족을 의료 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거나 (그림 3-3),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통번역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19].



[그림 3-3]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안
(출처: 영등포구, 2017.10.23.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

[19] 영등포구 보도자료. 2022.06.29. '영등포구, 결혼 이민 여성 의료통역사 양성'

2) 내국인의 국제 진출 활성화

이처럼 영등포구는 대림동을 중심으로 집적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중국어 능력을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인바운드 교류에 활용하는 한편, 내국인이 중국어 능력을 함양하고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아웃바운드 기회의 확대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대림동의 '외국인'이 소유한 중국어 능력이라는 잠재적 사회 자본을 '내국인'으로 이전하고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어 교육을 특화가 가능한 요소로 주목하는 논의 역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금융 및 의료 분야의 인바운드 교류의 중심 타겟으로 부상한 2010 년대 후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중국어도 지금 다문화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대표이사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이 또 과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대림도서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홍보가 좀 많이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01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2017.06.19) 대림도서관 특성화 관련 논의 중)

> "우리 구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인 관계로 일단 국제화특구사업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은 자율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 그러다 보면 제 2 외국어가 허용이 돼서 중국어의 특화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요 ... 사실 중국이 세계 G2 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제 205 회 행정위원회 제 1 차(2017.11.21), 국제화특구사업 관련 논의 중)

이처럼 2017 년경 중국이 G2 로 불리울 만큼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국어 사교육 열풍이 부는 등 중국어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계 이주민 집적지인 대림동의 '메리트'를 고려할 때 중국어 교육이 특화 주제로 적합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관련 사업은 대림동 내에 위치한 대림도서관에서 중국어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것부터, 대림동을 일종의 국제화특구로 설정하여 지역 전체에 중국어 특화교육 커리큘럼을 보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큰 스케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중국어 교육 중심의 지역 특화 정책에서 이주민은 직간접적인 자원, 즉, 정책의 수단으로서 포섭된 반면, 내국인이 정책의 주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 "국제화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서 지역 내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 그런데 저희 다문화 밀집지역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90% 이상이 중국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강의를 정규과정에서 2시간 정도를 할 수 있고 ... 그러면 좋은 자원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학생들이 있어서 떠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역발상으로 해서 좋은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가까운 중국이나 굳이 멀리 미국이나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중국의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제 205 회 행정위원회 제 1 차(2017.11.21), 국제화특구사업 관련 논의 중)

> "베트남 결혼이민자, 중국 이민자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나라의 세계문화체험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것을 원어로 중국이면 중국말도 함께 섞어서 한국어하고 같이 번역해가면서 책자를 같이 해갖고 ...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자꾸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미래의 비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학을 가지 않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학습이 되니까 그 효과를 누릴 것 같은데요." (제 241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 차(2022.11.22) 세계문화일일체험교실 관련 논의 중)

중국어 교육을 이주민 집적지에 대한 국제화특구사업의 주요 주제로 설정하자는 주장에서, 해당 지역 내의 '중국학생들'은 중국어 교육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로부터 약 5 년 후에 논의된 세계문화일일체험교실 사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주민을 단지 특화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직접 내국인에게 언어와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교육자로 위치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국인 '일반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구상 뒤에는 영등포구가 유학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언어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곳으로서 내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지역으로 부상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더불어 영등포구는 긍정적인 사회 자본 인식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차이'를 재규정하는 '역발상'을 통해, 이주민의 존재를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중국학생들이 있어서 떠나고자 하는' 경향성을 상쇄하고 전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이 보유한 사회 자본의 '내국인'으로의 이전과 확장을 통한 '내국인'의 수혜를 강조하는 경향은, 이주민 밀집 지역과 이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국인 중심 지역 간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중국어 특화 교육 편성의 공간적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졌다. 예컨대 주민자치센터의 중국어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프로그램이 이주민 비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을 불공평한 것으로 규정하고, 내국인의 수요 역시 동등하게 고려하여 공평하게 프로그램을 분배하고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20].

3. 포섭의 한계

1) 언표의 전환: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0 년대 중후반부터 대림동을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포섭하려는 영등포구의 움직임이 태동해온 가운데, 2019 년경에는 대림동이 '다문화'에서 탈피해 '글로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 "... 다문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순수한 다문화 ...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거리라든가 글로벌한 어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 (제 214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3 차(2019.06.17))

---

[20] "중국어 프로그램과 한자 프로그램이 대림동하고 신길동에 집중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 이런 프로그램이 그쪽에 중국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쪽에만 중국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지금 세계화 시대에 정말 영어 이상으로 중국어를 부르짖는데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 우리 구 전체에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198회 행정위원회 제1차(2016.11.30))

이처럼 '다문화'에서 '글로벌'로의 언표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등포구 행정 체계 내에서 두 용어가 사용되어 온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10 년대 중후반 이전의 영등포구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영등포구에 이익이 되는 선진국 출신이거나 부유한 국외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한 것과, 오히려 영등포구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서 영등포구에 부담을 주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저소득 계층 국내 정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이 같은 이분적인 인식과 실천은 2010 년 국제지원과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21],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업무', 그리고 '국제금융'과 '대외협력' 등의 국제 교류 업무가 하나의 과에 존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정도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글로벌'과 '다문화'는 이처럼 상반된 성격을 갖는 두 집단을 각각 수식하거나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져 왔다. 따라서 대림동이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대림동이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림동이 이분되고 상반된 카테고리 중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 이후에 영등포구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관련 사업의 명칭 역시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재편되었다. 대림동의 음식문화라는 '차이'를 부각하고 기념하는 모습이 문화권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며 다문화주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더불어, 대림동에 붙은 '글로벌'이라는 표지는 대림동 관련 정책이 더 이상 '다문화'라는 좁은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의료, 교육 등을 포괄하는 넓은 영역의 '글로벌' 정책들과 궤를 같이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즉, 대림동에 붙은

---

[21] "당초 국제지원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지원팀, 여의도 국제금융기구 관련 업무를 위한 국제금융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였으나 운영해 본 결과 외국인 지원 업무, 국제금융 업무 및 대외협력 업무는 서로 업무 연관성이 적어 현재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팀을 부서 내에 존치하는 것보다 외국인 지원 업무는 주민자치과, 국제금융 업무는 지역경제과, 의전과 연관이 많은 대외협력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55회 행정위원회 제4차(2010.09.07))

‘다문화’라는 딱지를 떼 버림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대림동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포용으로 한발 더 나아간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와 ‘글로벌’의 이분적 카테고리와 ‘글로벌’이라는 카테고리가 내포하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짚어볼 때, 이 같은 결론은 상당한 의구심을 유발한다. 먼저, 대림동을 ‘글로벌’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다문화’ 이주민과 ‘글로벌’ 이주민 간의 차등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대림동의 이름을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바꿔 다는 것은 그 같은 차등적인 위계를 무화하지 못한다 – ‘글로벌’ 대림동의 안팎에는 여전히 ‘다문화’ 이주민이 존재한다. 또한, ‘글로벌’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다문화’와의 차별화가 작용하는 한편,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특정성을 희석하는 동질화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용어는 ‘차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프레이밍하고 칭송하는 경향을 띠는데, 이는 Rabii (2023)가 지적한 다양성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차이’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억누르는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림동이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다문화’ 대 ‘글로벌’이라는 언표의 구조는, 동질화와 차별화 사이에서 진동하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신자유주의적 추구의 산물로 볼 수 있다.

2) 직제의 개편: 다문화지원과 폐지와 비전협력과 신설

영등포구는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 약 2 년 간 다문화지원과 신설을 필두로 이주민을 지원하고 이주민과 주류 사회의 접촉과 섞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였다[22]. 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 “한편 구는 지난해 7월 중국동포, 결혼이민자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한 이후 ▲다국적 주민으로 이루어진 한울봉사단 운영 ▲내외국인 열린 소통의 공간 ‘다드림 문화복합센터’ 설치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조성’ ▲다문화소식지 발행 등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갈등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영등포구 보도자료 2017.09.18.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위한 알짜 생활정보 알려준다’)

개선과 갈등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과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나 한중문화축제와 같이 대림동을 일명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어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기념하려는 시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다문화주의적인 지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경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2017 년에 구 자체적으로나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으나, 2018 년부터는 그 일부로 시행된 한중문화축제[23]를 제외하고는 종적을 감췄다. 한중문화축제 역시 시행 첫 해인 2017 년에 5 일, 2018 년에 2 일, 2019 년에 1 일로 시행 기간이 축소되고 장소 역시 대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대림 2 동 공영주차장 옥상으로 바뀜에 따라 점차 축소되었다. 이 같은 정책의 중단 및 축소의 배경에는 반중 정서의 고조와 코로나 19 로 인한 방역 등의 상황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영등포구는 2018 년 말 다문화지원과를 폐지하며 다문화주의 노선에서 분명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편입되었다.

> “꼭 그 부서만 다문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도 외국인과 다문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부서가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 211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차(2018.12.17))

이처럼 ‘다문화’라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소관을 결정한 결과, 복지 성격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아동청소년과로 이전되었으며, ‘차이나타운’ 만들기의 성격을 띤 사업은 코로나 19 를 맞아 한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다가 2021 년 들어 도시계획과의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계승되었다. 대림동의 ‘차이’가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독자적으로 부각되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나 ‘도시계획’ 등의 보편적 영역 속에 희석되고

---

[23] 2019년의 축제 명칭은 ‘차이나는 대림문화축제’였으나 시기나 성격 면에서 한중문화축제와 동일하며 이전 두 해 간 개최된 축제의 연장선에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 것이다. 이는 이주민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축소와 파편화로 이어졌다.

> "그때도 채현일 구청장이 올라와서 (다문화지원과를) 없어버렸는데 내가 막 항의했다니까. 그때 다문화과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과가 됐어요. (중략) 다문화 뭐 하면 청소년과에 와서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죠. (중략) 접촉할 것이 거의 없어요. 자기네 담당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어차피 축소된 것이 사실이니까."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정책적인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 관련 사항일 것으로 보이며, 지역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교육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정도로 타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은 알지 못합니다." (연구자가 직접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에 질의해 받은 서면 답변 중)

대림동에서 활동하며 2016 년부터 지속적으로 다문화지원과와 협력해 온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는 다문화지원과 폐지 이후의 이주민 정책이 내용면이나 규모 면에서 이전보다 못하다는 불만을 피력했다. 또한 대림동에 대해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 영등포구의 대림동 관련 정책에 대해 문의했을 때, 타 분야의 정책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주민 집적지로서 대림동의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가 소실됨에 따라, 대림동 관련 정책은 각 부서의 테두리 안에서 전형적으로 해온 업무나 상위 기관에 의해 할당된 업무만을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다문화지원과 폐지 이후 약 1 년여만에 '영등포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로 자칭되는 비전협력과가 신설되었다[24]. 이는 2010 년 폐지되기 이전의 국제지원과에서 '글로벌'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담당해 온 국제금융팀과 대외협

---

[24] "먼저,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등포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로 '비전협력과'를 신설한다. '비전협력과'에는 국제금융특구, 의료특구, 대외협력팀이 설치된다. 지역의 풍부한 금융.의료 자원을 활용한 특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외교류를 활성화해 관광자원 개발 및 미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영등포구 보도자료. 2019.12.31. '영등포구, 비전협력과 신설…새해 조직개편')

력팀, 그리고 2018 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한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으로 본격화된 의료특구를 담당하는 팀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

다문화지원과 폐지 이후 '다문화' 정책이 담당 영역이 상이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파편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료 특구 사업은 보건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보건지원과에서 여러 영역의 '글로벌'한 교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비전협력과로 이전된 것이다.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 및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협력과의 설립 취지는 상술한 다문화지원과 설립 취지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갈등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 - 에 비해 완연하게 경제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같은 직제의 개편은 이주민을 정책의 대상보다는 정책의 수단이 되는 실용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25]을 한층 더 노골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대림동의 '차이' 인식 및 관리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의 신자유주의적 추구의 심화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징후로서 언표의 전환과 직제의 개편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문화'를 '글로벌'이라는 매력적인 '차이'로 탈바꿈하고 기념하는 한편, 다문화지원과를 폐지하여 '차이' 자체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긴장과 혼란 속에서 공존하는, 신자유주의적 추구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영등포구는 신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도, 끌고 가지도 못하며, 교착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포섭의 불안정성

'차이'의 인식과 관리를 둘러싼 긴장과 혼란, 그리고 그 결과로 불안정해진 '다문화주의'는 '차이' 인식과 관리 기조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드러내는 언표와 직제 구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포섭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대림동의 '글로벌'화에 대한 회의는 다문화지원과 폐지가 함

---

[25] 본 연구의 3장 1절 2-1) 참조

축하는 ‘차이’ 자체를 희석하는 기조와 연결되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탠다.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만듦으로써 대림동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기념하고자 한 정책들은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주 이견에 부딪혔다. 일부 구의원들은 대림동의 ‘차이’가 기념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대림동에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지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출했다.

>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이 됐든 시설 이용도구들을 보면 중국제가 많습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것보다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 규모가 크든 장난감 수가 많든 정말 다른 데는 없는 장난감이 들어가 있든 이럴 적에 세계라는 것을 붙이면 걸맞은 이름이 되지 않나 해서 …” (제 233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21.10.20), 세계장난감도서관 관련 논의 중)

> “… 글로벌이라는 건 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인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글로벌 음식 이런 식으로다가 특화거리 조성은 좀 불합리해요.” (제 227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 차 (2020.12.21),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 논의 중)

세계장난감도서관 건립 논의에서 중국제는 우리나라 것보다 질이 떨어지고, 또한 중국제로의 편중은 다양성이 부족하며, 따라서 ‘세계화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인식은 ‘중국인뿐이 없는’ 대림동을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의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대림동에게 ‘글로벌’의 칭호를 부여하는 문제는 이처럼 대림동의 ‘차이’가 ‘여러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다른 데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지 등 외부의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의 조건에 관한 끊임없는 가치 평가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성격을 갖는다. ‘글로벌’ 대림동은 ‘글로벌’과 ‘다문화’ 간의 차등화된 위계를 교란하지 못하며, 여전히 그 안에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와 ‘글로벌’의 간극은 이주민에 대한 차등화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자본의 출처에 대한 차등화를 또 다른 축으로 갖고 있다. 대림동에 유치할 수 있고, 또 유치해야 바람직한 관광객의 종류는, 2017 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음식물 막 만들어서 먼지 아니면 또 나쁜 해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 우리 국내인들, 우리 주민들이 봐도 대단히 불결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205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7.11.23), **문화관광형시장** 관련 논의 중)

> “문화관광형 저 이것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대림동 쪽에 교포들이 많아서 이런 말투를 갖다가 붙였나보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 동포들이 많이 사니까 중국동포 많이 사신다고 여기 문화관광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중국 상품 많이 팔고 식자재 많이 팔고 식당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 먹는 음식, 그 뭐예요, 포장도 안 하고 그렇게. 그걸 문화관광상품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지금 안 들립니다. ... 그러면 중국동포들만 그쪽 관광버스 그리로 돌릴 겁니까? ... 사실 대림동 쪽도 아까 문화콘텐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문화콘텐츠가 되려고 하면 그 지역이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림동 하면 우리부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진 동네, 쓰레기 많은 동네, 중국사람 사는 동네, 냄새나는 동네 이래가지고 무슨 문화가 됩니까? 관광이 됩니까? ... 그러려면 정말, 거기를 문화관광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냄새 없애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쓰레기 없애야 되고 중국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시장을 차라리 여기서 정말 중국의 좋은 물건들을 집중해서 팔면 한국 사람도 가지요.” (제 199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2017.02.28), **문화관광형시장** 관련 논의 중)

영등포구에서 욕망하는 ‘그분들’은 대림동을 보고 ‘대단히 불결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대림동의 관광화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객’이나 ‘한국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성공하기보다는 ‘중국동포들만 그쪽 관광버스 그리로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관광의 결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자본과 더불어 경제 자본으로 변환될 수 있는 ‘글로벌’한

방문 경험과 분위기 등의 문화 및 사회 자본에 대한 전망에 따라 관광객의 종류가 차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의 실제 실행 과정을 볼 때도, 대림동의 '차이'를 기념하려는 움직임은 그 추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일련의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의 진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구상 및 실행 과정에도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매우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2016 년 다문화지원과 신설과 함께 2017 년에 발을 뗀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문화관광형시장, 한중문화축제 모두 마찬가지였다.

>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했어요. 우리는 들떴죠. 신문에서도 막 보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구상 많이 했죠. 1 년에 한 번씩 중국 축제해가지고 사자춤도 추고 남부 도로 사업소 같은 데서 노래 자랑도 그 다음에 대동 초등학교 이런 데 일요일에 해가지고 중국 무슨 벼룩시장도 하고 단체들이 앉아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없어요. 그거 하고 말았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대림동)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거나 일단은 선거 때 되면 또 와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한다.) 여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림시장에 하나 써놓고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 저기에다 그냥 대림시장 해 놓고 그냥 관광형시장 하고 꽹과리 두드리고 한 몇 번 했었어요.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고."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웃기는 게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고 이듬해 **대림 (한중) 문화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단체들은 다 몰라요. 첫째는 동포 단체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얼른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뜨내기들 귀에만 들어왔지. 나보고 아냐고하니 아니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옥상에서 한 거예요. 웃기지도 않지. 예산 뜯어먹고 했다고 사진만 찍으려고 저기서 하는가 보네. ... 동포들 앞에 몇집 앉혀놓고 사진이나 찍고. ... 어떻게 대림동 문화축제라고 해서 옥상에서 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옥상에서 띵가띵가 하다가 말았죠."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B 는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사업의 구상 과정에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문화관광형시

장은 ‘그냥 대림시장 하나 써놓고’, ‘꽹과리 두드리고 한 몇 번’ 하는 것에 그쳤으며, 한중문화축제의 경우 ‘예산 뜯어먹고 했다고 사진만 찍으려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옥상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거 때 되면 또 와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정부 조직이 수시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정책은 지속되지 못했고, 그 일환으로 진행되다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온 한중문화축제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기간과 장소가 축소되다가 코로나 19 를 맞아 전면 무산되었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역시 사업 기간 종료 이후 다른 사업으로 계승되지 못했다.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관련 정책을 문의했을 때 ‘과거의 사업이고 더 이상 대림동 쪽에 대해 신사업이나 이슈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으며, 대림중앙시장 홈페이지 역시 2019 년 이후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실용적 차원[26]으로 언급한 스마트메디컬특구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영등포구는 스마트메디컬특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별도로 관련 책자를 제작하고, 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도시계획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스마트메디컬특구 사업은 2018 년에서 2022 년까지 5 년간의 공식적인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담당 팀이 신설된 비전협력과로 이동하여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성공’이 있다. 스마트메디컬특구는 시행 2 년여 만에 외국인 환자수를 세배로 늘리는 성과를 냈고, 이에 영등포구는 특구들 가운데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스마트메디컬특구는 영등포구 그리고 모든 지방정부가 욕망하는 외국인 – 선진국 출신 혹은 짧게 머무르며 큰 규모의 소비를 한 후 떠나

---

[26] 본 논문의 3장 1절 2-1) 참고

는 외국인 –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공식적인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대림동의 ‘차이’가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아 ‘글로벌’한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대림동에 대한 포섭의 강도와 지속성을 침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대림동에 대한 포섭이 그 생산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생산적 포용(productive inclusion)의 (Bourassa 2021)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

4) 포섭의 선택성

Simmel (1908/1950)은 그의 저작 ‘이방인’에서, 주류 사회 내의 이방인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p. 1): 첫째, 이방인의 위치는 주류 사회에 처음부터 속하지 않으면서 주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외래의 특성들을 수입해온다는 사실을 통해 결정된다[27]. 둘째, 또한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중간 상인으로서, 외부로부터 유래한 생산물에 관해서만 필요한 존재다[28]. 이방인의 위치에 대한 이 같은 고찰은 다시 말해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주류 사회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역할을 부여받으며, 그와 무관한 다른 이방인의 특성들은 비가시화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방인의 ‘차이’ 중 일부가 선택적으로 취해지는 한편 가치가 없는 ‘차이’와 ‘차이’의 가치가 유효하지 않은 영역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같은 선택성은 대림동에 대한 영등포구의 정책적 경향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상징적인 차원에서 영등포구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은 대림동이 한국과 중국의 두 국가성 및 민족성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다중 정체성을 소유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밀집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

27 “… his position in this group is determined, essentially, by the fact that he has not belonged to it from the beginning, that he imports qualities into it, which do not and cannot stem from the group itself.”

28 “… the stranger everywhere appears as the trader … a trader is only required for products that originate outside the group.”

이라는 ‘차이’만을 단순화된 형태로 취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상징적 측면에만 천착해 재한 조선족 스스로의 정체성 이해[29]나 일상 생활과 괴리된 상징적이고 파편화된 민족성(symbolic and fragmented ethnicity)을 구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Roberts and Clifton 1982 – Kim 2010 에서 재인용), 다른 측면은 가치 없는 ‘차이’로 취급됨에 따라 상당 부분 소실되거나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30].

다음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림동 이주민의 재중 네트워크와 중국어 능력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은, ‘차이’의 가치가 유효한 영역과 아닌 영역을 구분하고 전자로 대림동을 귀속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외국인’ 민원 안내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 확인된다.

> “어느 데스크에 앉아서 도저히 소통이 안 될 경우에 민원실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에 그때 이런 분들한테 해서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는 데 이런 외국인이 필요한 거지, 일반인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안내하는 것은 왜 굳이 여기에 외국인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분으로 하면 아까 일자리 관계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얼마라도 일을 못해서 민원도 굉장히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나요?” (제 205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 차(2017.11.21))

이처럼 ‘외국인’의 특장점인 외국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경우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분’이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이’가 유용한 영역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과 별개로, ‘차이’가 유용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등화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외국인’이 소유한 중국어라는 사회 자본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역할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국한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같은 포섭의 선택성은 내외국인 간의 일상적 소통과 관계의 계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

[29] 관련 논의는 본 논문의 4장 1절 1-3)과 3-1) 참고
[30] 본 논문의 4장 2절 1 참고

"이번에 중국동포단체들하고 참여단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많이 한 결과 내외국인 주민들이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 지원을 많이 원해서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결국은." (제 234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2 차(2021.12.02))

"그런데 이것조차도 보니까 문화체험활동이라든가 예체능활동, 토크콘서트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 흐르는 이런 아이템(item)이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모여서 이런 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눈부시게 서로간에 이중언어의 발달이 있었다 이런 명확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것을 그냥 타성적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쟁취하고 그 다음, 그 다음 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도약을 하려면 뭔가가 쌓여있어야 됩니다." (제 205 회 행정위원회 제 6 차(2017.12.06))

이처럼 내외국인 주민이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체험활동은 외국인을 위한 시혜적인 사업이라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타성적으로 흐르는 것' 으로 저평가되곤 했다.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초국적 연결을 위해 활용되거나 내국인에게 확실하게 전수가 이루어지는 종류와 상황에 한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외에 상호 교류와 융화를 위한 내외국인 간의 일상적 네트워크 형성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이주민에 대한 포섭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 자본으로 기능하지 않는, 따라서 '차이' 의 가치가 유효하지 않은 일상의 영역에서는 동력을 상실했다.

제 2 절 일탈적 문화의 통제와 동화

1. ‘중국적인’ 무질서의 통제

본 연구에서 검토한 13 개년의 영등포구의회 회의록에서 대림동과 관련하여 한해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담론은 단연 대림동 거주민들의 문제적인 행동과 그것이 야기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대림역 부근은 그냥 법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31]”, “대림동 지역 청소를 나갔다 와서 다들 충격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런 힘든 곳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32]”, “토요일, 일요일에 대림지역에 순찰 한 번 돌아보세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33]” 등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림동은 “무질서의 표본[34]”으로 특정되어 왔다.

‘무질서’의 내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빗물 받이에 요리용 기름 투기, 공공장소 흡연 등으로 형성된 불결함과, 노점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및 간판 등으로 형성된 난잡함과 불편함, 즉 가시적인 경관의 문제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 외에도 식품 위생, 불법 마사지, 불법 식품접객업소 등 경관 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불결함과 불건전함 역시 간혹 언급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림동은 영등포구에서 도입한 환경 관리 정책의 시범 지역, 특별 관리 지역, 전수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자주 거론되거나 지정되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대림동 거주민의 행동을 지적할 때 자주 대림동의 중국성이 그 원인으로써 결부되며, 대림동의 ‘차이’가 인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림동 쪽에는 차이나타운이 생기다시피 했잖아요? 아주 혼란스러운 지역인 것 같아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

[31] 제20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2017.06.20)
[32] 제18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2014.09.25)
[33] 제21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19.10.21)
[34] 제172회 본회의 제2차(2012.12.07)

이런 걸 알고 있는 이상 좀 강력하게 단속 좀 하시고 예방 좀 하십시오."
(제 179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3.11.25))

이처럼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이 생겼고 그렇기에 그곳은 '혼란스러운 지역'이라는 것과 같은 인과적 논리 구조가 별다른 부연 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대림동 같은 경우 중국 교포들이 많은 곳은 무단투기가 시급[35]", "중국인들이 많은 대림동 지하철역 입구[36]", "대림역 구간 특별정비추진 나와 있는데 중국동포들이 많은 지역이 관리하기 힘드시죠?[37]", "대림동 일대는 심하더라고요, 중국동포거리라든가 일대는[38]" 등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대림동의 '차이'는 행동이라는 표면적인 차원을 넘어 더 근본적인 의식 차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림 2 동 같은 경우는 또 조선족 분들이 있어가지고 의식들이 좀 그래서[39]", 대림동이, 신길동 지역이 유난히 다른 데보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동포들이 아직 의식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40]",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아직까지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더욱 심한 것 같아서[41]" 처럼, 대림동 이주민의 '의식', '의식수준', '문화수준'이 문제의 근원으로 거론되며, '좀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낮아서'처럼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중국이라는 출신 공간의 영향으로 형성된 뿌리 깊은 문화, 즉,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로 여겨지며 본질화되었다.

"상당 부분에 거기 또한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국적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릴 때 3 살 때, 4 살 때 중국에 아버지 손잡고 올라가가지고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

35 제23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2022.02.08)
36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2021.12.15)
37 제20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2017.06.20)
38 제19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2016.12.02)
39 제19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15.11.23)
40 제18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2014.09.25)
41 제19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17.02.27)

클린봉사대 청소라든지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155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0.09.06))

대림동 거주민의 의식과 행동은 '3 살 때, 4 살 때'와 같이 생애의 극초기부터 형성되어 고착된 것으로, "중국교포들도 많이 살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닿지를 않는 것[42]", "우리 문화하고도 다르고 의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43]" 등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사실상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대림동은 이처럼 '중국적인' 문화의 결과인 물리적 환경의 무질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대림동의 이주민의 '차이'에 대한 부정적이고, 인종화되고, 본질화된 평가를 특정적이면서도 완곡하게 지적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로 작용하였다.

이에 영등포구는 "대림동이라든지 외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직 적응이 덜 되셨나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이 덜 돼서 그러는지 아무 데나 버리고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44]", "이 분들이 생활에 대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45]" 등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적응'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며 이주민의 '차이'를 억누르고 이주민을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였다.

영등포구는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으로 주민의 복지를 거론하기도 했지만[46], 사실 그 이면에서는 대림동의 '차이'가 영등포구에 손실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문화 자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얼마 안 가서 대림동 같은 지역은 ... 자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정말 조선족과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대림동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 정말 자

---

42 제23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2021.12.03)
43 제183회 행정위원회 제2차(2014.09.23)
44 제18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2014.09.25)
45 제197회 행정위원회 제1차(2016.10.20)
46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간에 복지, 복지 하면 주위환경이 깨끗해야지 복지가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18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2014.09.25))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다른 데로 가야지. ... 일부에서는 인구가 돈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제 161 회 행정위원회 제 3 차(2011.07.06))

대림동이 갖는 '차이'는 영등포구에 '돈'이 되는 '인구'를 유출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영등포구 차원에서 그 차이를 적극적으로 교정하여 '자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영등포구는 이 같은 '차이'의 관리를 영등포구의 거버넌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인식하기도 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서울시 옥외광고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되는 등 2000 년부터 금년까지 연속 17 년간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는 있습니다만 ... 앞으로 구에서는 대림동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확대와 오염광고물 제거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205 회 본회의 제 2 차(2017.12.13))

"주택가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우리 주민들이 못 견뎌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의 쓰레기라든가 버리지 않아야 될 물건도 마구 버리고, 또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 무질서에 같이 살고 있는데 ... 서울시에서 영등포구가 다문화가족들이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영등포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해결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다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186 회 행정위원회 제 1 차(2015.03.02))

대림동의 '차이'라는 과제는 이처럼 잘 해결된다면 영등포구가 '우수구'나 '다문화 대상' 등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가 '이슈'가 되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청소과를 중심으로 대림동에 대해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무질서를 통제하고자 노력했다. CCTV 나 안내기 등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는 한

편, 상호문화참여단 등을 통해 기초질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의식의 개조를 병행하여 이주민의 동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영등포구의 실천은 대림동의 경관을 말 그대로 각종 경고문과 통제 장치로 뒤덮인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림 3-4, 3-5). 대림동의 '입구'라고 볼 수 있는 대림역 12 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즉시 대림동주민센터에서 부착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경고문을 접하게 된다. 해당 경고문은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림동을 '쓰레기로 병들어 가는' 동네로 칭하며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사진을 통해 대림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대림 2 동 안으로 진입하면, 노란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를 가진 영등포구의 공식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이 쓰레기 배출 장소는 물론 건물 외벽과 가로등에 촘촘하게 붙어 있고, 가로등은 불법 광고물 부착이 불가능한 특수한 재질의 가림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같은 쓰레기 및 흡연 관련 경고문은 여러 차례에 거쳐 덧붙여져 그 자체로 경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가 하면, 공공 외벽과 기물뿐만 아니라 가게의 내벽이나 사유물에도 어김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3-4]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착한 쓰레기 문제 관련 현수막
(2023 년 6 월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3-5] 대림동에 부착된 각종 경고문
(2022 년 5 월, 2023 년 3 월 연구자 직접 촬영)

한편, 이 같은 ‘차이’의 통제와 동화를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주민들의 무급 자원봉사 활동으로 민영화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는 재한 조선족 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련 활동이 대체로 영등포구의 지원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 “자기는 (모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는) 분무 기계도 샀어요. 기계 사고 약품 사고 해가지고 음식점마다 다 들어가서 다 소독하고 그때는 계속 그랬었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또 지금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화단 조성. 그것도 다 자기네 출자(해서) 자기네 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동사무소나 어디서 돈 대주는 건 (없어요.) 자기 사비 털어서 하는 거예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예컨대 재한 조선족 단체들은 직접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대림동 내의 방역을 실시했고, 대림동 일대의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표지판과 화단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대체로 ‘사비를 털어서’ 이루어졌다.

더불어 영등포구는 자체적으로 거리 청소와 기초질서 개선 관련 활동에 주력하는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외국인자율방범단 등의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대림동 답사 도중 2 회 정도 영등포 지역자율방재단과 대림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의 하수구 청소 활동을 목격하기도 했다(그림). 이 같은 봉사단체들에게는 조례 상 식대, 교통비, 피복비 등의 필수적 경비 외에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E에 따르면 실상은 활동에 필요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람 수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 이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이게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해봤었어요. ... 올해는 주로 이거 (지원금이) 야식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봉사자 물품 보관 및 쉼터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 공과금 나오는 거 하고, 우리 여기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사고, 우리

신호봉 있잖아요. 거기 뭐 배터리라든가 그런 거 또 사서 어쨌든 넣어야 되니까. ... 저는 이거 (간식비) 가지고 그냥 식사 비용 하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한 달에 50 만 원씩 더 들어갈 때도 있더라니까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E 인터뷰 중)

"지금 이번에 옷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팔에다가 순찰이라고 이거 쓴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이거 (순찰이라고 로고 부착을) 하는 게 2천원이 든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앞에다가만 방범대라고 쓰고 이쪽에는 순찰이라고 안 썼더라니까요. ...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시 후에 가가지고 세 개 대에서 4 만 6 천 200 원씩 해가지고 그거 내서 이거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청에서 13 만 얼마 없어서 못 해주는가 이래 가지고 불만이 좀 있었어요. ... (직접 로고 부착을 의뢰하기 위해 가는 길에서 사용한) 택시비는 그냥 우리 카드를 긁으니까 그거 (야식비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반납을 했어요. 6,800 원을.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니까. 안 되게 되면 그러면 내 돈을 쓰지 뭐 하고 제가 반납해서 넣었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E 인터뷰 중)

예컨대 외국인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한달 활동 인원이 80 명 이상일 경우에 주어지는 33 만원 정도의 간식비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그보다 적은 인원이 활동하게 되면 금액이 차등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 경우 각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1 회당 최대 4000 원 정도로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돈은 단순히 대원들의 간식비로 소용될 뿐만 아니라 대원들의 물품 보관 및 쉼터 용으로 대림역 출구 옆에 작게 개설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공과금을 내고 신호봉 배터리 등의 물품을 사는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구청에서 5 년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 피복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필수 디자인이 누락된 채로 준비되었고, 이에 각 대대에서 간식비를 각출하여 잔금을 마련해 직접 택시를 타고 업체를 찾아가 로고 부착을 의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택시비는 간식비로 처리할 수 없어 E 의 사비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E 는 부족한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많게는 '한 달에 50 만원씩' 사비를 동원하여 대원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2. ‘범죄도시’ 낙인의 수용과 물리적 통제

2017 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와 ‘청년경찰’은 대림동에 ‘범죄도시’라는 낙인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영화는 조선족 범죄자 캐릭터를 자주 등장시켰으나, ‘범죄도시’와 ‘청년경찰’은 둘 다 500 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밀집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대림동 및 그 근방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대림동이라는 실제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대림동=범죄’라는 연상 작용을 더욱 강하게 유도했다[47]. 이는 자본 획득을 목표로 대림동이라는 공간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그 (의도되지 않은) 산물로 대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 자본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개봉 직후 영등포구는 이 같은 낙인을 인지하고, 중국 동포와 대림동, 나아가 영등포구가 우범지역으로 매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영등포 지역사회가 매도되고 있고 대림동이 마치 범죄소굴로, 치안이 불안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된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300 만 명이 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보듬고 가야할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중국 동포를 흥행의 도구로 삼아 비인격적인 존재로 비하해야 되겠습니까? ... 영등포지역이 오락영화 한 편에 놀아나 범죄도시로 매도되었는데 가만히 구경만 했습니까?” (제 202 회 본회의 제 2 차(2017.09.05))

> “영등포 지역이 범죄 소굴, 치안이 불안한 곳으로 전국에 알려진다면 누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이곳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누가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자기 지역을 보다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만 이대로 당하고 있습니까? ... 대림동이 이렇게 그냥 교포들 때문에 짓밟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 구

---

[47] 특히 영화 ‘청년경찰’은 대림동에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대림동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대림역 12번 출구 등을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대림동을 명시적으로 범죄의 소굴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에서도. 우리 대림동은 영등포 아니에요?" (제 202 회 본회의 제 2 차 (2017.09.05))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지탄의 이면에는 대림동이 갖는 부정적인 상징 자본으로 인해 아무도 영등포구로 '이사'를 와서 '식사를 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영등포구가 감당해야 할 손실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었다. 이는 영화사에 대한 영등포구의 분노가 대림동을 도구화하는 것 자체보다도 영등포구와 다른 이해 관계에 기반한 도구화로 영등포구에 손해를 입혔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대림동'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교포들 때문에' 대림동이 짓밟힌다며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을 타자화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문제의 영화들이 개봉하기 이전부터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이주민을 범죄와 결부시키며 대림동에 대한 낙인을 '차이'로서 수용하고 인종화하는 담론을 생산해 왔다. 예컨대 대림동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많아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던 거[48]" 같다고 말하거나, "대림동 등 우리 구의 남부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살고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49]"이라고 규정하는 등 우범지역이라는 '차이'의 실존을 인정하며 대림동의 중국성과 범죄를 인과적으로 결부시키는 논리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주민의 일탈적 행동으로 인해 우범화된 대림동은 다음과 같이 영등포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우리가 8 만명을 어림잡았을 때 영등포 인구의 거의 25%쯤 되죠. 그러면 상당한 몫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림동이나 신길동 이런 데가 지금 우범지역화 되고 생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자꾸 영등포가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일반 서울시민들한테 자꾸 인식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죠." (제 183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 (2014.09.23))

---

[48] 제193회 행정위원회 제1차(2016.02.29)
[49] 제198회 본회의 제2차(2016.12.12)

이는 곧 대림동의 ‘차이’를 통제하고 동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여성 안전 귀갓길 사업을 통해 여성 취약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50],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을 도입하고[51], 생활안전종합센터 및 범죄특수수사대 등의 설치[52] 등을 통해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구상되었다. 영화 개봉 전과 후 모두 동일하게 물리적 방범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드러났고, 이는 영화 개봉 이후 더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물리적 통제의 기조는 허구적이고 과장된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별과 혐오 같은 담론적 차원을 문제시하는 대신, ‘차이’를 실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이주민 집단의 행동에 귀인함으로써 인종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영등포구의 물리적 통제 실천은 대림 2 동 전역에 부착된 각종 감시카메라, 비상벨, 안내문 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3-6). 특히 대림동 12 번 출구에 앞에는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 비상벨, 112 신고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 등이 커다랗게 부착되어 있고, 그 옆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수시로 범죄 관련 경고 및 안내 음성이 송출되고 있었다.

[그림 3-6] 대림동 내에 부착된 방범 장치와 신고 안내문
(2022 년 5 월, 2023 년 3 월 연구자 직접 촬영)

---

[50] 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2015.12.16)
[51] 제202회 본회의 제2차(2017.09.05)
[52] 제221회 본회의 제1차(2020.05.08)

제 3 절 경제적 차원의 차등화와 배제

1. 영등포구의 가장 낮은 곳: 이주민의 낮은 경제 수준과 낙후된 물리적 환경

한편, 영등포구는 구 내 이주민의 특성으로 그들의 낮은 경제 수준에 주목하기도 했다. 대림동의 이주민은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서 오신 분들[53]", 그리고 "내국인보다 경제 생활을 더 바쁘게[54]"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55]"로 지칭되었다. 다시 말해 대림동의 이주민은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또한 전체적인 한국 사회 내에서, 경제적 하위층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주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구 차원에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숙인이나 다문화나 노인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함께 공존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글로벌시대에서 우리 국가의 위치, 경제규모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우리 다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179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 차(2013.11.21))

> "우리가 전입해서 우리 다문화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들어와서 전부 수급자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국가가 책임도 져주겠지만 우리 구민들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다 같이 가야되겠지만." (제 227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6 차 (2020.12.08))

'다문화'로 지칭되는 이주민은 장애인, 노숙인, 노인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속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영등포구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이들이 영등포구에 다수 진

---

[53] 제24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2022.12.05)
[54] 제20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18.09.10)
[55] 제176회 행정위원회 제2차(2013.07.03

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구민들도 힘든 상황’에서 영등포구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때 영등포구는 이주민을 ‘다문화’로 지칭하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이주민을 분리해내어 지칭하며 그들을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본질화하고, 타자화하고, 기피하는 의도를 함축하게 만드는 일종의 ‘문화적 폭력’을 (김현미 2018) 답습했다[56].

한편, 대림동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도 영등포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지목되었다. 대림동은 “오래된 옛날 시골동네로서 아주 환경이 열악[57]” 할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일 마지막”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제일 낙후된 곳”[58] 으로, 소외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같은 대림동의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는 영등포구의 철도 남-북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제기되었다.

> “철도 북측 지역의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에 비하여 철도 남측 지역인 영등포본동, 신길동, 대림동 지역의 주거환경의 격차, 또한 그에 따른 주민 생활의 질적 격차도 상당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것이 아니라 거의 정체된 수준인 철도 남측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야말로 우리 구의 가장 긴급하고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단지 역세권 배후지역이라는 이유로 끊임 업이 거리 노숙인, 철도 소음 및 분진, 범죄 위험에의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 및 그러한 인프라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원죄란 말입니까? 우리 영등포의 가장 중심 지역이 개발에 소외되고 방치되어 마치 익명의 섬처럼 떠있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164 회 본회의 제 2 차(2011.12.09))

> “저희가 과학융합 인재교육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별관에 갑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을쪽이 소외돼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 특히 대림지역이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생활권 관련해서 SOC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

---

[56] 이에 영등포구는 ‘다문화’가 갖는 부정적인 어감을 인지하고, 이주민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참고: 제179회 행정위원회 제2차(2013.11.22))
[57] 제232회 행정위원회 제1차(2021.08.30)
[58] 제21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2019.06.17)

습니다. 대림지역도 영등포의 한 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림동 지역의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218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2019.11.22))

이처럼 대림동은 '소외되고 방치된', '철도 남측 지역'이자 '을쪽'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서, 대림동의 낙후됨은 개별적인 동의 문제를 넘어 지속되고 깊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대림동은 역사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피해자로 위치되는 한편, 현재적이고 자본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존재로 치부되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많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227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9 차(2020.12.11))

대림동의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은 '많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영등포구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으며, 영등포구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차이'로 인식되었다.

대림동에 대한 규범적 관점과 자본적 관점 모두 대림동의 물리적 환경 정비에 영등포구가 개입할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다소 상이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순위 밖의 이주민

대림동을 이처럼 자본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불균형하게 소모하고 투자를 유인할 매력이 부족한 부정적인 경제 자본으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은, 특히 이주민을 중심으로 대림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초래하는 역차별과 기회 비용에 대한 노골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1) 역차별

영등포구는 이주민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주민”으로 보면서도, “과한 서비스는 오히려 다문화를 저희 영등포에서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기저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두 집단 간의 경쟁 구도를 상정하는 인식이 있었다.

>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과정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 기존에 우리 토착 주민이죠. 이제는 그 주민(이주민) 분들의 어떤 혜택보다도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 151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2010.02.03))

> “대개 우리 대림동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다문화가족 위주로 복지가 더 많이 편성되고 우리 기존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206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 차(2018.02.26))

영등포구는 이처럼 이주민을 ‘굴러온 돌’이나 ‘다문화가족’으로, 그리고 내국인을 ‘박힌 돌’, ‘토착주민’, ‘기존 분들’로 지칭하며 구분하고, 이주민에게 복지가 집중됨에 따라 내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인식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을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2016 년 다문화지원과 신설 당시 ‘지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제기된 이견에서도 확인된다. ‘다문화쪽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차원을 연상시키는 ‘지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이나 ‘복지’처럼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59].

---

[59] “그런데 명칭이 다문화지원과인데 앞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주민들과 어떤 괴리감이 충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복지보다는 다문화쪽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차라리 다문화지원과보다는 다문화정책과든지 정 못하면 다문화복지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 우리 지역서민들께서 역차별 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점을 염두에 두고요. …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이 돼서 우리 자국민들이 피해의식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 195회 행정위원회 제4차(2016.06.21))

이는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주민보다 내국인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 "조선족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맞지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고 지금 경로당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 조선족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라고요. ... 조선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은 제쳐놓고 조선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198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 차(2016.12.15))

> "아까 다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그쪽으로 형평성이 기울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물론 어차피 이제는 세계가 한마당 글로벌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어떤 큰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민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 비례를 따져 봐도 그쪽에 약 30%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 192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 차(2015.11.23))

예컨대 이주민에게 경로당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내국인이 경로당과 관련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제쳐놓고 조선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순위가 바뀌었다' 고 지적하는가 하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어떤 큰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며 형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구 비례 상 내국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주민과 내국인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이주민에 대한 특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동질화 논리가 두 집단의 의사 결정 및 예산에 대한 권리를 차등화하는 차별화 논리로 발전하고, 두 논리가 공존하며 편의에 따라 취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주민이 대림동 등의 일부 공간에 불균형하게 밀집 거주함에 따라 계층이 공간화되고, 그 결과 이주민 대상 정책이 필연적으로 공간적인 현상을 낳거나 특정한 거점 공간을 위주로 작동한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내외국인 간의 구분과 위계는 공간적 차원으로도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족이면 대림이라든가 신길6, 도림동 일대에 거의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여의도라든가 양평동하고는 다문화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동이잖아요? ...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해서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지역에 동네에 몰리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제 198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 차(2016.12.15), 다문화지원과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공모 관련 논의 중)

"영등포구에 현재 다문화가족 분포도가 누구나 알듯이 대림동에 제일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 그 다음에 신길 3 동 일부, 영등포본동, 도림동 일부 이쪽이 좀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런 현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정해야지. 지금 대림동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198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1 차(2016.11.30), 다문화지원과의 다문화가족 맞춤형 일자리 제공 관련 논의 중)

이처럼 대림동이 이주민과 동일시되면서 두 집단 간의 구분은 대림동과 그 외의 동 간의 구분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다문화지원과가 사실상 대림동에 특혜를 부여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이주민 지원 정책이 대림동과 그 밖의 내국인 중심 지역 간의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림동 이외의 이주민 밀집 지역 역시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즉, 대림동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모하면서 대림동 밖의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의 몫을 독차지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2) 기회비용

한편, 대림동의 입지는 거주민의 경제 수준이나 물리적 환경의 낙후와 별개로 잠재력이 큰 경제 자본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대림동 지역이 얼마나 좋은 교통의 요지입니까? 전철역으로 보면 대림전철역이나 이쪽의 신도림전철역, 1 호선 환승역도 있고 또 구로디지털역이 있고 그런데 여기를 제대로 개발을 했더라면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못지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 도시계획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193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2 차(2016.03.02))

대림동은 서울에 위치하고 2 호선과 7 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을 보유하고 있는 접근성이 좋은 중심지로서, ‘제대로 개발을 했더라면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못지 않은 지역’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2010 년 경부터 이주민의 점유로 인해 대림동 토지가 자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 “... 아예 대림동 한쪽 지구는 떼어가지고 타원 형상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가 한정된 구역으로 전락이 돼 있잖아요? ... 기존에 영등포가 서남권의 중심축이 돼있으면서도 이제는 다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정은 한계점에 딱 부딪쳐 버렸거든요.” (제 151 회 행정위원회 제 2 차(2010.02.03))

대림동에서 이주민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토지를 ‘쪼개서 나눠’준, 그래서 ‘영등포가 한정된 구역으로 전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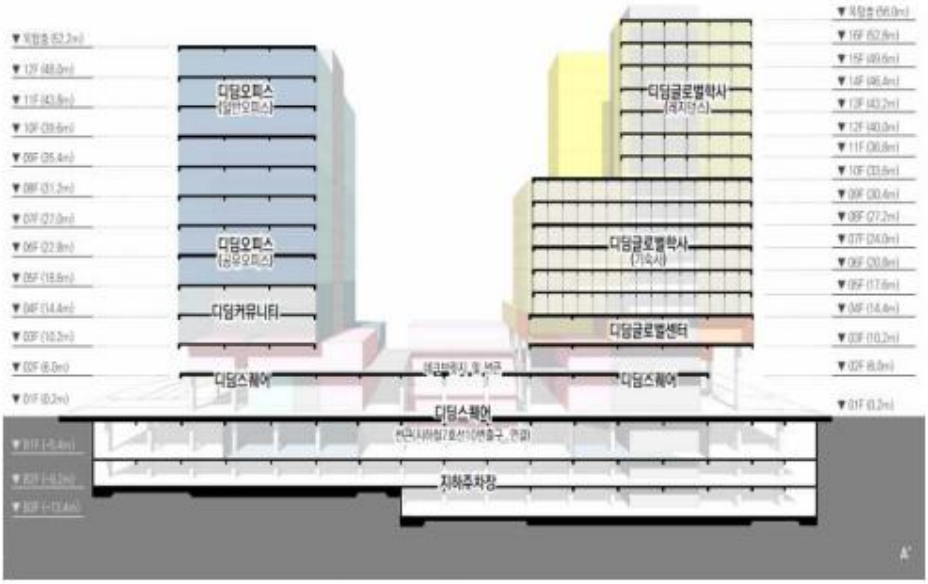
이처럼 이주민의 존재를 부담(liability)이자 기회비용으로 치부하는 시각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개발 논의와 계획의 변천사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미래 “대림동의 운명과 연결된 땅” (영등포구 관계자 1)으로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해당 시유지의 개발은 오랫동안 대림동의 숙원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의 개발은 무수한 논의와 계획을 거쳐왔는데, 2012 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결정 이후 2015 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60], 2019 년 대림동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를 다문화 거점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구상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상담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장 등을 포함하는 내외국인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서울 디딤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3-7)[61].

---

[60] 서울특별시. 2015.05.08.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49928

[61] 문화일보. 2019.09.09. ‘대림동에 내 · 외국인 공유 복합시설 건립’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0901071327333002



[그림 3-7]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계획 단면도

(출처: 2020 영등포구 주요업무계획)

그러나 영등포구 내에서는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 디딤플라자 계획은 대림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며, 그 중심에 있는 '다문화'는 그러한 자본화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 "중국을 비롯해서 물론 훌륭한 학사들이 다 모이는데 이런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위치에다가 그분들의 기숙사를 지어주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이 분들의 숙소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영등포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라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영등포구로 봐서는 이 자리에 사람이 모여드는 오피스텔이지만 회사가 들어와서 직무를 보는 업무용 빌딩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 212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3 차(2019.02.27),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 관련 논의 중)

예컨대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계획의 일부인 국제학사는 '이런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위치' 에 적합하지 않으며 영등포구의 다른 곳이나 영등포구 밖으로 제외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 "사실 역세권으로서 대림역이 환승역이잖아요. 또 여기가 15 층이고 이 건물 건립한다면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했겠지만 다만 20 층 이상 25 층 올려서 지금 대지가 또 넓잖아요. 건물 2 개 동은 멋지게 매머드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서 업무용 빌딩 예를 들어서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것 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그래서 대림동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영등포도 세수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211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3 차(2018.11.23),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 관련 논의 중)

> "본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2 호선·7 호선 대림 환승역으로 역세권이며 또한 교통의 요지이며 서울 서남권 3 대 도심의 도시기능을 충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서남권 경제 중심지 일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림동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디딤플라자 건립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복합신산업소재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중국무역회사 등 벤처복합창업센터를 건립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메카로, 뉴딜경제정책 방향으로 서울시에 제안하며 촉구합니다." (제 221 회 본회의 제 1 차(2020.05.08),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 관련 논의 중)

> "사실 여기가 우리 영등포가 서남권 종갓집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발전이 뒤떨어져 있어요, 대림동 주위. 대림동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주 오래된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남부도로사업소에 지구단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전반기면 늦어도 종료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25 층 올라가게끔, 용적률이 356%라는데 한 500%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 이게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야만이 대림역세권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서부터 발전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지역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끌어서 제대로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들이 소위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죠. ... 또 나아가서 이 건물이 랜드마크로 제대

로 들어와서 기업들 벤처기업들이랄지 청년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상권 모든 것이 좋아지잖아요?" (제 241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3 차(2022.11.24),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 관련 논의 중)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는 '건물 2 개 동은 멋지게 매머드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자 '대림동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할 수 있는 땅으로, 대림동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들과 청년 창업인 등을 유치하기 위해 업무용 빌딩과 벤처복합창업센터 등으로 용도를 설정하고 용적율을 더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계획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영등포구의 세수 확보를 돕고 영등포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을 요지로 하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개발 계획은 2019 년 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을 사유로 결국 좌초되었고[62], 이후 영등포구는 남부도로사업소의 복지적인 요소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서울시립과학관 등을 유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63].

---

[62] 제227회 본회의 제2차(2020.12.15)
[63] 2023 영등포구 주요업무계획

제 4 절 ‘차이’ 인식과 관리의 관계적 유동

앞선 절들에서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차이’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포섭, 동화, 배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때 영등포구가 인식하는 대림동의 ‘차이’는 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국적 혹은 출신 국가인 중국과 가장 크게 결부되었다. 특히 2010 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과 관련된 문화 및 사회 자본이 포섭의 대상으로 부상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림동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대림동의 자본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대림동과 관계된 자본화의 주요 출처인 관광객과 중국 본토의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대림동의 ‘차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차이’의 인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관계적이며, 따라서 유동적이다.

한편으로 ‘차이’의 인식과 관리는 이처럼 거시적인 변수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다 미시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주어지는 갈등과 기회 속에서 단기적, 임시적, 표면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차이’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행위자의 의도와 상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계속적인 진동을 동반하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실증하는 예로서 대림동에 얽힌 스케일적인 역동 속에서 대림동에 대한 영등포구의 ‘차이’ 인식과 관리가 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1. 다문화 거점화를 둘러싼 반목

대림동의 ‘차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관리는 스케일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스케일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대림동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림동과 영등포구의 다문화 거점화를 둘러싼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반목은 이 같은 스케일 간의 상이함 속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거버넌스의 역동을 잘 보여준다.

먼저, 서울시는 대림동과 영등포구를 다문화 거점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대림동에 차이나타운 조성을 시도하고,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다문화 관련 시설 입지를 시도하고, 대림동 내의 시유지를 활용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대림동의 상징성을 이용하거나 대림동을 거점으로 두고 영등포구의 다문화적인 특색을 강화하려는 구상과 더불어, 영등포구를 서울 서남권 지역의 몇 개 구와 묶어 다문화 거점화하고자 했다.

특히 서울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대해 이주민 복지의 성격을 포함하는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계획을 수립하며 '중국계 한인 중심의 외국인의 패턴이 다른 외국 젊은 학생들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시도[64]' 하고 '중국 동포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65]' 게 돕고자 하며, 규범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적 지향을 드러냈다.

이 같은 정책적 기조는 2014 년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이후 서울시의 다문화 정책이 보다 다문화주의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사실과 함께 (박세훈 2017), 시 스케일의 거버넌스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비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덜 밀착된 행정 업무를 맡으며, 서울시의 관점에서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은, 서울시가 대림동에 대한 다문화 브랜딩을 다양성 확보 효과를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영등포구는 다문화 거점화와 관련해 비교적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영등포구는 서울 디딤플라자 계획과 관련해 다문화 관련 시설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반목했다.

---

[64] "서울시 생각은 여기 외국인지원시설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현재 여기에 중국계 한인 중심의 외국인의 패턴이 다른 외국 젊은 학생들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시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제20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2018.02.28),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 관련 논의 중)

[65] "중국동포들이 거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다문화과에서도 중국동포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19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6.10.21),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 관련 논의 중)

"국제학사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중국동포가 다 와서 할까봐 전면전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 아직까지는 쌍방 간에 굉장히 대립된 상태입니다." (제 197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2 차(2016.10.21))

"다드림센터도 있고 많은데 왜 자꾸 대림동에 다문화, 다문화만 자꾸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된 것이 다문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제가 입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205 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3 차(2017.11.23))

"저희가 주민한테 의견 들었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주로 뭐냐 하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복합시설, 체육시설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외국인지원시설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항의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자꾸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20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 3 차(2018.02.28))

서울시와 달리 영등포구는 주민 생활과 밀착된 보다 미시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스케일적 특성을 갖는데, 이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편의 및 여가시설의 입지를 선호하고, 다문화 시설이 입지할 경우 '중국동포가 다 와서 할까봐'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비중과 파급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대림동의 다문화 거점화가 '주된 것이 다문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며 다양성 확보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주민 중심의 획일화로 인한 내국인의 소외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스케일 간의 특성 차이가 대림동의 '다문화'화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지는 모습은, 일련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의 구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각각 2015 년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과 2017 년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문화거리 조성을 구상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때 서울시의 계획은 중국풍의 공연장과 문화원, 어학원 등을 유치하고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하는 등의 공간적인 개입을 다수 포

함한 것과 달리[66], 영등포구의 계획은 대림역 주변과 대림중앙시장 주변의 '거리' 로 범위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축제, 투어 등 영구적인 공간 변화를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구상되었다[67].

또한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68]" 된다며 서울시에서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갈등의 소지를 언급하거나,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이런 특화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조금 더 주민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69]" 고 강조하며 생활 밀착적인 정책 기조를 드러냈다.

2. '차이' 인식의 임시적 조정

1) 상위 스케일의 인식에 영합하기

영등포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제 3 차 문화도시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1 년 12 월에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5 년 간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등포구가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도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을 구상하고 주관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대림동은 비중 있게 활용되었다.

먼저 영등포구는 구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림동을 '이주문화' 로 인해 특색 있는 인적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자 혐오와 차별을 겪는 지역으로 설명하고, 대림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대림동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

[66] 연합뉴스. 2015.05.21. '서울시,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 보류…"시기상조"'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0155400004
[67] 경향신문. 2017.06.05. '대림동 관광지화… '중국문화거리' 만든다'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1706051034001
[68] 제186회 본회의 제2차(2015.03.06)
[69] 제23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2022.02.10)

이러한 대림동의 이주 문화는 사업 구조의 중요한 한 축인 '상호문화'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개인의 발견 차원에서 이주민의 삶과 혐오 및 차별의 경험을 아카이빙하는 대림이야기프로젝트와 무지개다이어리, 관계의 확장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리빙랩 프로젝트, 그리고 모두의 장소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공간 등 다차원적인 실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70].

[그림 3-8] 문화도시 사업 공모 시 등장한 대림동에 대한 설명
(출처: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문화도시 영등포]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v.2 공유 (2021.1_영등포문화재단))

이때 영등포구는 대림동과 영등포구의 다문화적인 특색을 강화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강하게 반대하고 다문화라는 정체성의 지나친 확산을 경계했던 모습과 다르게, 대림동의 이주민을 선별적으로 부각하여 대림생활권을 특징 짓는 문화를 '이주 문화'와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으로 규정했다 (그림

---

[70] 영등포구, 2020.12. '서울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문화도시 영등포]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v.1 공유 (2020.11_영등포문화재단) https://www.youtube.com/watch?v=-hBqeIVSzFY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문화도시 영등포]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v.2 공유 (2021.1_영등포문화재단) https://www.youtube.com/watch?v=tyh1sE_ytUs

3-8). 또한, 범죄를 대림동에 실존하는 '차이'로 인식하고 물리적 통제를 통해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범죄도시'라는 낙인을 구 차원에서 해결하고 은폐하고자 했던 모습과 달리, 오히려 '범죄도시' 낙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차별 및 혐오라는 담론적 차원을 문제시하며, 문화적인 개입을 통해 대안적인 담론을 생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영등포구는 구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대림동이라는 '차이'를 비중 있게 활용했으며, 특히 상위 스케일의 규범적인 정책적 성향을 의식하여 그에 걸맞도록 '차이'에 관한 인식과 관리 방안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 2 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논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 "우리가 제 2 세종문화회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 2 세종문화회관 그 건물만 딱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파급효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MOU 각서 오가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기길 바랐고 그리고 우리 구가 다문화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렴되는 내용들이 MOU 각서나 우리 타당성 조사 등에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 구와 무관한 것처럼 서울시립에만 한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구립 예술회관이라는 돌을 던진 것과 제 2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돌을 던졌을 때 어떤 파장이 크게 퍼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 241 회 본회의 제 2 차(2022.12.13))

서울시가 영등포구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제 2 세종문화회관의 위치 이전과 구립예술회관으로의 대체가 논의되자, 영등포구는 이에 반대하며 기존 계획이 서울시 스케일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만의 특수한 수요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었음은 제 2 세종문화회관의 영등포구 내 입지 필요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즉,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사수하기 위해 이주민이라는 '차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의 강조와 관련 인식의 조정은 사업과 예산의 수주가 결정되는 초기 과정에 한해 이루어진 표면적이고 한시적인 영합이었다. 예컨

대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의 존재감을 다시금 축소하는 발언이 나타나기도 했다.

> "이런 다양한 계층의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문래동에 있는 창작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림동에 있는 다문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 영등포 문화를 지켜오고 육성하고 구민 누구나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 참여하는 그런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 영등포 사업입니다." (제 239 회 본회의 제 2 차(2022.09.29))

이처럼 '대림동에 있는 다문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누구나 향유 가능한 문화 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문화도시 공모 과정에서 대림동을 전면에 내세우던 모습과 온도 차를 보이며, 다문화 정체성의 지나친 확산을 경계하는 기존의 구 스케일의 '차이' 인식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다.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역시 이 같은 온도 차를 언급했다.

> "근데 이 부분은 (문화도시 사업에서 대림동을 비중 있게 다루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예술인들, 문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봐도 무슨 제 2 세종문화회관 만든다 이런 내용에나 관심이 있지 대림동을 어떤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 그나마 그래도 프로그램 몇 개 주는 게 다예요. 동포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프로그램."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영등포구가 문화 도시 사업의 공모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상호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D 는 그 실상에 대해 대림동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프로그램' 만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2) 상위 스케일의 인식을 이용한 아웃소싱

본 장의 3 절에서 논의했듯이, 대림동의 이주민은 경제적 차원에서 주로 영등포구에게 부담, 피해,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영등포구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내국인과 대림동 토지의 잠재력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다문화 거점화를 두고 서울시와 반목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영등포구는 이처럼 다문화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더불어, 오히려 다문화라는 '차이'를 내세워 상위 스케일의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 "서울시 정책 자체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영등포가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등포를 다문화거점화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많은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글로벌센터에 우리가 대사증후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구민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겠지만 서울시와 좀 더 가깝게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일단 다문화 쪽으로 몰고 가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라도 정말 이런 부분이 더 주도면밀하게 서울시에 노크를 해주시고 ... 방향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185 회 행정위원회 제 6 차 (2014.12.08))

예컨대 서울시가 다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쏟'는 경향을 역이용하여 '다문화 쪽으로 몰고 가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다문화라는 약점을 상위 스케일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이용함으로써 이주민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웃소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제 5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영등포구의 보도자료와 정책 문서, 영등포구 관계자 및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특성 중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포섭, 동화, 배제하는지 살펴보았다.

1 절에서는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중국 관련 문화 및 사회 자본을 포섭하는 방식을 논했다. 먼저,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상징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0 년대 중후반경 대림동의 자연발생적 중국성이라는 내부적 요건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음식 열풍에 따라 대림동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외부적 요건의 맞물림을 인식함에 따라, 대림동의 문화 자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태동하였다. 이에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중국 음식 문화와 더불어 대림동의 접근성 좋은 입지와 중국성의 진품성에 천착하여, 주류 사회 및 여타 차이나타운과 대림동의 '차이'를 담론적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차이'를 극대화하고 '차이'의 관광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림동에 물리적으로 개입했다. 이때 '차이'의 외부에 존재하는 시설의 불편함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거부감을 유발할 만한 '차이' 내부의 일부 요소 역시 시정의 대상이 되었다. 즉, 영등포구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준거로 대림동을 소비하고 싶은 '차이나' 타운이자, 소비하기 편리한 차이나 '타운'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실용적 자원, 즉,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재중 네트워크와 이중언어 능력에 주목하여, 이를 한국과 중국 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모빌리티를 촉진하고 조력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상 역시 2010 년대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 이후 중국 관련 (잠재적) 사회 자본이 재평가됨에 따라 등장했다. 즉, 영등포구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대림동과 영등포구의 '차이'를 구성함으로써 외국인의 관광지와 내국인의 주거지로서 인기를 끌고자 했다. 한편으로, 영등포구는 2010 년대 후

반부터 중국을 중심 타겟으로 의료 특구와 같은 인바운드 교류를 추진하면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재중 네트워크와 이중언어 능력을 관광객의 유치와 수행에 활용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영등포구는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교류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중국어 능력을 내국인으로 이전 및 확장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포섭의 대상으로 재규정되는 한편, 정책의 대상보다는 정책의 수단으로 포섭되었다.

한편, 이 같은 대림동에 대한 포섭은 신자유주의적 추구의 심화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적 포용(productive inclusion)의 성격을 갖는다. 먼저 영등포구는 대림동에 대한 '다문화'에서 '글로벌'로의 언표의 전환을 주창하고, 다문화지원과를 폐지하고 비전협력과를 신설하며, '차이' 인식과 관리 기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보였다. 신자유주의적 추구의 첫번째 징후로서 대림동이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은 대림동에 대한 포섭, 나아가 대림동에 대한 다문화주의적인 포용의 시도라는 외양을 갖고 있지만, '다문화'와 '글로벌' 간의 차등화된 위계의 존속과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특정성 및 부정성을 희석하는 동질화의 압력을 내포하며 생산적인 '차이'의 구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추구의 두번째 징후로서 2016 년부터 2020 년 사이에 이루어진 다문화지원과 폐지와 비전협력과 신설은, 복지와 문화적 기념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포섭하는 다문화정책은 보편화, 파편화, 비가시화된 반면, 보다 뚜렷한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이주민을 실용적으로 포섭하는 글로벌 정책은 별도로 종합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 대조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이는 이주민을 정책의 대상보다 수단으로 보는 시선을 한층 더 노골화한다. 이처럼 영등포구의 신자유주의적 추구 속에는 대림동의 '차이'를 기념하거나 희석하려는 시도가 공존하며, 다문화주의와 탈다문화주의 사이의 교착을 유발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림동에 대해 논의되거나 실행된 개별적인 포섭의 시도들 역시 불안정하고 선택적인 특성을 보였다. 먼저, 대림동에 대한 포섭은 '차이'의 생산성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며, 그에 대한 확신의 부재는 포섭의 추진력을 침식했다. 대림동의 '차이'를 '글로벌'한 것으로 보고 기념하려는 시도는, 그 논의 과정에서 대림동의 '차이'의 질과 그것이 유도할 관광객, 경험, 분위기의 차등적 위계의 반복적 소환에 근거한 끊임없는

회의와 가치 평가를 수반했으며, 실제 관련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도 의료 특구와 같이 이주민을 실용적 자원으로 활용해 경제적 성공을 성취한 사업과 대조적으로 실효성과 지속성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다음으로, 대림동에 대한 포섭은 가치 있는 '차이'와 '차이'의 가치가 유효한 영역에 대해서만 작용하며 선택성을 드러냈다. 대림동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포섭은 중국성이라는 가치 있는 '차이'만을 단순화된 형태로 취했다. 또한 실용적 차원의 포섭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언어 능력이 사회 자본으로 기능하지 않는, 즉, '차이'의 가치가 유효하지 않은 일상의 영역에서는 동력을 상실했으며, '차이'가 차등화의 구실로 변질되는 모습과 병존했다.

2 절에서는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일탈적 문화'를 '차이'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대림동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논했다. 먼저, 영등포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대림동 거주민들의 기초질서 위반을 빈번하게 거론하며 대림동을 무질서의 표본으로 특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주민의 뿌리 깊은 중국성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인식하며, '차이'를 인종화하고 본질화했다. 영등포구는 이 같은 부정적인 '차이'가 영등포구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영등포구 거버넌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청소과를 중심으로 대림동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무질서의 통제를 시도했고, 이는 대림동을 각종 경고문과 통제 장치로 뒤덮인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주민들의 무급 자원봉사 실천으로 민영화되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는 대림동에 대한 '범죄도시'라는 낙인을 '차이'로서 수용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특히 2017년에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를 우범지역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잇달아 개봉하고 흥행하면서 대림동에 대한 낙인이 심화되었고, 영등포구는 이에 분노하는 한편, 대림동의 이주민을 타자화하며 그들로 인해 영등포구가 입을 손해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영화사에 대한 영등포구의 분노는 대림동을 도구화하는 것 자체보다, 영등포구와 다른 이해관계에 기반한 도구화로 영등포구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지점을 향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범죄라는 대림동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리적 방범에 치중했다. 이 같은 물리적 통제의 기조는 허구적이고 과장된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별과 혐오 같은 담론적 차원을 문제시하는 대신, ‘차이’를 실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주민 집단의 행동에 귀인함으로써 인종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3 절에서는 영등포구가 경제적 차원에서 대림동을 차등화하고 배제하는 경향을 논했다. 영등포구는 대림동 이주민의 낮은 경제 수준과 대림동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차이’로서 거론하며, 대림동을 영등포구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규정했다. 이주민은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서 영등포구에 책임과 부담을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영등포구는 이 같은 의미를 함축하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통해 이주민을 지칭하며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폭력을 답습했다. 또한 대림동은 물리적 환경의 개발 측면에서 영등포구 철도 남-북 지역의 불균형 발전사의 피해자로 인식되는 한편, 결과론적으로 영등포구의 성장 동력을 침식하며 피해를 주는 존재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처럼 영등포구 내에서 대림동의 이주민과 물리적 환경의 경제적인 차원의 ‘차이’에 대해서 규범적이거나 자본적인 관점이 공존했으며, 이는 지원의 당위성 및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그들이 초래하는 부담과 피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적인 관점에 의거해 부담과 피해를 강조하는 담론은 대림동의 이주민에게 권리와 지원을 용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역차별과 기회비용에 대한 노골적인 문제 제기를 수반했다. 먼저, 영등포구는 의사 결정이나 예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원주민/내국인과 이주민/외국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두 집단 간의 경쟁 구도를 상정했으며, 두 집단 간의 형평성을 이루거나 내국인을 우선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내국인과 이주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이주민에 대한 특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동질화 논리가 두 집단의 참여와 수혜의 권리를 차등화하는 차별화 논리로 발전했고, 영등포구는 편의에 따라 두 논리를 번갈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대림동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모하면서 대림동 밖의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의 몫을 독차지하는 존재로 프레이밍되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입지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주민이 대림동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즉, 이주민이라는 ‘차이’에 의해 부담과 기회비용이 유발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영등포구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서울 디딤플라자를 건립하여

대림동을 다문화 거점화하려는 서울시의 구상에 대해 '다문화'가 유발하는 기회비용이 상당함을 강조하며 업무용 빌딩 등 자본화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촉구했다.

4 절에서는 앞선 절들에서 논의한 영등포구의 '차이' 인식과 관리가 관계적으로 유동하는 양상을 다뤘다. 특히 거시적 변수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 유발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상호작용 속의 갈등과 기회 속에서 '차이' 인식과 관리 기조가 단기적, 임시적, 표면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차이'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행위자의 의도와 상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계속적인 진동을 동반하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대림동의 '차이'를 둘러싼 영등포구와 상위 스케일 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먼저, 영등포구와 서울시가 다문화 거점화를 두고 반목하는 모습을 통해 스케일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 인식과 관리 기조의 상이함을 논했다. 서울시는 대림동과 영등포구를 다문화 거점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며 규범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적 지향을 드러냈는데, 이는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다문화주의와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덜 밀착적인 행정 업무를 맡으며, 대림동을 비중이 작은 일부로 보고 대림동의 다문화 거점화를 다양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 스케일 거버넌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 영등포구는 다문화 거점화에 대해 서울시와 반목하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이는 반대로 생활 밀착적이고, 대림동의 비중을 크게 인식하며 대림동의 다문화 거점화를 획일화와 소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 스케일 행정의 특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이 같은 반목과 온도 차는 특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의 서울 디딤플라자 계획과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의 구현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다음으로, 영등포구는 상위 기관의 규범적인 정책적 성향을 의식해 대림동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리 기조를 임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영등포구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수주하거나 그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영등포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대림동의 이주민을 선별적으로 부각하여 대림생활권을 특징 짓는 문화를

‘이주 문화’와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대림동에 대한 ‘범죄도시’라는 낙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차별 및 혐오라는 담론적 차원을 문제시하며, 문화적인 개입을 통해 대안적인 담론을 생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차이’의 강조와 관련 인식의 조정은 임시적이고 표면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영등포구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 정체성의 지나친 확산을 경계하는 기존의 구 스케일의 ‘차이’ 인식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구는 경제적 약점으로 인식해 온 ‘다문화’를 서울시 등의 상위 스케일 기관에 아웃소싱을 호소하는 맥락에 한해 경제적 강점으로 재인식하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제 4 장 이주민의 행위성

제 1 절 ‘차이나타운’ 만들기를 둘러싼 내부 동학

1. 적극적 동조

1) 포섭에 대한 열망

2010 년대 중후반부터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 추진해 온 일련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에 대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입장은 그간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2015 년 서울시의 차이나타운 지정 시도에 대해 ‘차이나타운’ 대신에 ‘중국동포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간략하게 알려져 있을 뿐이다[71].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정부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에 고무되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극적인 동조의 동기로는 일차적으로 대림동이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 “동포들은 하면 좋죠. 대부분 여기는 상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활성화되는 건 좋은 일이죠.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좋겠죠. 땅값이 오르고 활성화되면.”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 “내가 뭘 팔든지 여기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들을 많이 내놨어요. 대림동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집세는 계속 올

---

[71] SBS NEWS. 2015.05.21. ‘대림동 관광지화… ‘중국문화거리’ 만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8652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대림동차이나타운’ https://archive.much.go.kr/data/JD008/folderView.do?searchGroupNm=&jobdirSeq=567&idnbr=2016036323

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소득은 줄어들고. 이 세 가지가 원래부터 비례가 맞지를 않아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 인터뷰 중)

이때 경제적 동기는 연구 참여자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수확할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라기보다는, 대림동이 정부와 주류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모종의 새로운 시도들이 움트면서 대림동 내의 상인과 건물주,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을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에 가까웠다.

더불어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를 지지하는 동기의 또 다른 축으로, 대림동이 일종의 '차이나타운'으로 관광지화 될 경우 대림동과 주류 사회 간에 긍정적인 접촉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대림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다.

"내국인도 어느 날 중국 음식 좋겠는데 가서 먹어보자 (하면서 대림동을 방문하면) 이 동네는 사람 죽인 동네 아니라는 인식 바뀌잖아요. 내국인들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여기는 어디나 똑같은 건데 왜 여기는 미디어 보면 살벌하고 살인 사건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 ... 한울문화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치파오 복장 포토존 만들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그러면 학생들도 와서 체험해 보고 자율적으로 인식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이는 '차이'를 중심으로 한 포섭이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넘어 동화론과 배제론의 기저에 있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가정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따라서 더 완전한 포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도 인식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불러올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역으로 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많이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런 거 (본격적인 차이나타운 조성을) 못하겠으면 (대림)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조형물이라도 한번 하든지 (해라.) 건대 입구 양꼬치 거리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가리봉도 있고. 그리고 전선 지하화 좀 해라.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에는 차량이 없는 그런 거리를 만들든지 (해라.) 그 지역에 조명도 좀 더 많이 해주고. 그런 제안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저는 시에서 외국인 회의 대표로 활동할 때하고 구청에서 간담회가 있으면 가서 계속 얘기해요. 지금 보면 안산에 가면 다문화 거리라고 해서 표지판이 서 있어요. 여기 건대 입구에 가면 중국 미식거리라고 돼 있어. 지금 다른 지역은 이렇게 타운을 유치하려고 막 투자 유치됐는데 여기는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됐어.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는 동포 타운이야. 간판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좀 미디어 쪽에서 나쁜 곳으로 조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중국 미식성이라든가 아니면 동포 거리라든가 해가지고 좀 특화시켜가지고 내국인들도 중국 음식 한번 먹고 싶다면 여기 한번 가자 (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인식 변화를 만들자고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와 D 는 그간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와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영등포구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을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광진구의 자양동 양꼬치 거리를 우수 사례로 꼽으며, 영등포구 역시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임을 나타내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미관을 해치고 불편함을 주는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정책에 대해 동조 혹은 반대하며 반응하는 모습을 넘어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앞장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자신들을 위치지었다.

이 같은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열망과 주체성은 재한 조선족 씽크탱크(think tank)를 표방하며 활동한 KC 동반성장기획단의 실천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KC 동반성장기획단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중국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대림동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식 음식을 파는 가게를 정리하여 '대림동 맛집 지도'를 제작하고(그림 4-1), 대림동을 '대림동 차이나타운'으로 칭하며 '단돈 1000 원대 중국행 티켓'으로 갈 수 있는 '한국 속 중국'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4-2).

[그림 4-1] 대림동 맛집 안내지도
(출처: KC 동반성장기획단 홈페이지)

[그림 4-2] 대림동 홍보 영상에 사용된 홍보 문구와 그래픽
(출처: KC 동반성장기획단 홈페이지)

한편,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영등포구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실효성과 지속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소극성에 대해 탄식하는 한편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부진의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 "(차이나타운 조성 관련해서)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 얼마 전에 여기 영등포 구청장 간담회 할 때도 하니까 자기네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역민들 반대한다 (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역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어요. 경제 활성화되면 자기네 좋은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냐고."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차이나타운을 하자고 우리 대림동 단체들이 많이 시도를 했고 제안도 했고 그리고 구청과 소통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설립되지 않잖아. ... 경제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동참하고 추진하지 않지 않느냐. ... 어차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윗선에서 뭔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지."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와 C 는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 검토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설립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수용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사회 안정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이주민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꺼리는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의 로컬 스케일 동학에 대해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이를 '수없이 건의'하고 '많이 시도'하는 반면, 오히려 '윗선에서 뭔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기존 언론 보도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주체로, 이주민은 강경한 반대파로 그려졌다면, 실상은 이주민이 적극적인 동조 내지는 추진 주체로 등극한 반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2) 자연발생적 중국성에의 편승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적극 동조한 동기로는 지역의 특화에서 파생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기회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대림동의 현황이 갖는 특수성과 그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진단 역시 크게 작용했다.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와, 대림동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민과 함께 상점을 운영하거나 단체 활동을 하는 - 그래서 이주민의 인식과 실천에 대해 관찰한 바를 전달할 수 있는 - 한국인 상인들은, 그 이유로 대림동의 자연발생적인 중국성을 꼽았다. 즉, 대림동이 사실상의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함에 따라 대림동에 대해 펼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탓에 대림동의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정부가 후발적으로나마 나서서 대림동을 중국성 쪽으로 확실하게 특화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여기다 내국인들 무슨 김밥집 뭐 해놓으면 장사 잘 되지도 않아요. 내국인들 드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동포들이 이제 와 갖고 돈 벌면 스트레스 받고 일요일날 모임하고 하면 여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 인터뷰 중)

> "특성 있게 대림중앙시장이 외부에 이렇게 알려지고 하면은 대림동이라는 이 자체가 인식이 돼 가지고 외부에서 고객이 와도 한 명이 더 오실 거고 또 궁금하면 또 한 번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 다 이게 엎질러진 거고 이미 벌써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합쳐졌는데 그치게 색안경을 끼고 본들 뭐 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상인들 자체도 이제 같이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 (대림동 내 상인 a 인터뷰 중)

> "여기는 차이나타운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정해진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미흡해요. 실제 중국인이 많이 살아서 중국 냄새가 짙게 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국풍은 아니란 말이에요. ... 어차피 여기에 정착해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빠른 시간에 옮겨가는 거는 쉽지 않

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한 10 년 이상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도 10 년 이상은 유지가 될 것 같거든. ... 아예 정해서 정부에서 뭐 좀 이 건물도 중국식으로다가 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일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하고 ... 세입자가 꾸미는 걸 얼마나 꾸미겠어. 자기 공간 내에서나 꾸미는 거지.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만 중국풍으로 풍기는 거지 시각적인 효과는 크지가 못하다고. ... 어차피 여기서 쉽게 다르게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많이 (이주민들이) 몰리니까, 아예 차이나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건데 ..." (대림동 내 상인 b 인터뷰 중)

이처럼 대림동은 '김밥집 뭐 해 놓으면 장사 잘 되지도 않'고 '중국 음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주민의 존재가 '엎질러진' 것이므로 '같이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중국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래도 10 년 이상은 유지가 될' 만큼 뿌리 깊게 배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지정하고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주도하여, 대림동의 '중국 냄새'를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각적인 효과'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정책적 최선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시각이 중국계 이주민의 상업 및 소비 활동이 대림동의 자연발생적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중국성을 추동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반대로 대림동이 사실상의 '차이나타운'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인식 역시 그러한 동네의 성격을 의식한 상업적 실천을 추동했다. 즉, 대림동의 자연발생적 중국성과 이주민의 상업적 실천은 서로를 생산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예컨대 대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재한 조선족 상인 d 는 중국식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림 4-3), 해당 품목은 창업 당시가 아닌 추후에 손님들의 수요를 고려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중국 사람 상대하면서, 중국 사람 좋아하는 음식 연구하면서, 나오는 결과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한국 사람에게 맞추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들어와도 중국의 특색 어떤 것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점점 변한 것 같아요." (대림동 내 상인 d 인터뷰 중)

d 는 카페 개업 당시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상정하고 보편적인 카페 메뉴를 위주로 품목을 구성했으나, 한국인 손님은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걸맞은 ‘중국의 특색’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카페를 찾는 손님의 비중은 중국인이 높았는데,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익숙한 중국식 간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즉, 대림동 ‘차이나타운’ 내에 위치한 상점에 대한 두 집단의 소비 기대는 중국이라는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고, 업주는 그에 부응하여 판매 품목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림 4-3] 대림동 내 카페에서 판매 중인 중국식 간식
(2023 년 5 월 연구자 직접 촬영)

대림동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한 소비 기대는 이처럼 대림동 내 상점의 일부 메뉴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상점의 외관 같은 더 큰 정체성 요소의 구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룽샤' 등 '마라'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인 마라는 맵고 얼얼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 중국동포 사이에서는 마라탕 가게 창업이라는 신종 '코리안 드림'이 퍼지고 있다. ... "**주로 중국인들이 찾았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까지 마라탕을 맛보기 위해 한국인이 찾아오고 있다**"며 "현재 마라탕 가게 창업은 여러 외식업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편" ..." (박연희, 2019.10.02. [박연희의 발빠른 뉴스 32]" '제 5 회 한중국제문화예술교류대전' 성료" 등, 동북아신문)

"(중국풍 건축물 디자인을 도입한 식당의 경우) 길게 되면 6-7 년 됐고 아니면 5-6 년 (됐죠.) 이게 어느 정도 **중국인들이 몰리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장사를 중국인 상대로 해야겠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중국풍 건축물 디자인을 도입하는 추세로) 바꾼 건데 ..." (대림동 내 상인 b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의 보도 내용과 대림동 내 상인 b 의 관찰에 따르면, 2010 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인들이 대림동을 마라탕의 성지로 취급하고 방문하는 추세에 힘입어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 사이에서 '마라탕 가게 창업이라는 신종 '코리안 드림'' 이 생겨나는가 하면, 대림동이 '중국인들이 몰리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상인들이 중국풍 건축물과 장식(그림 4-4)을 도입하는 추세가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입구이자 최대의 번화가로 대림동에 대한 첫인상과 다름없는 디지털로 37 길에는 주류 방송 매체에 음식점이 방영된 모습을 출력해 전시해 놓은 광고판이 즐비하다 (그림 4-5). 이 광고판들은 입간판의 형식으로 상점 건물과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점의 외벽에 반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간판에 명시되어 사실상 가게 건물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방송 매체가 공간을 표상하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 수용으로서 그 공간이 다시금 방송 내용을 표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방송 내용은 주로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진정한 중국 음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인들의 역매개 실천 역시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대한 소비 기대를 의식하고 반영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4] 중국풍 건축물 디자인
(2023 년 3 월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4-5] 주류 방송 매체의 음식점 방영 이력 광고
(2022 년 5 월, 2023 년 3 월 연구자 직접 촬영

이처럼 대림동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대림동의 중국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차이’를 소비하기를 기대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대림동의 상인들 사이에서 상업의 품목, 업종, 외관, 광고 등 개별 상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중국색을 채택하고 배가하려는 실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다시금 대림동의 중국성의 일부로 흡수되어 비슷한 실천들을 추동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72].

한 마디로, 대림동의 자연발생적 중국성은 공간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실천 간의 끈끈한 상호 참조 속에서 자기 강화(self-reinforced)되는 형태를 띤다.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은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림동의 중국색이 짙어지는 것을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이를 거스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에 편승하여, 본격적으로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착수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3) 정체성의 타협과 도구화

한편, 대림동을 중국성 중심으로 특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대림동과 이주민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인식이 가장 큰 준거로 작용했으며, 이에 반해 특화안이 내포하는 재한 조선족의 정체성 규정의 문제는 차치되었다. 이때 재한 조선족 이주민 자신들의 내면적 정체성은 행위의 준거나 목표가 되기보다는, 지역 특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나 인정의 성취에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표적으로 대림동의 명칭에 관한 논의에서 ‘차이나타운’이나 ‘중국동포타운’ 과 같은 여러 안이 후보로 거론되었는데,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어느 명칭을 주류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선호하는가를 가장 큰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

[72] 예컨대 대림동 내 상인 b는 최근 들어 중국풍 건축물이 급증하는 대림동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만약 자신이 창업할 당시에 대림동이 ‘차이나타운’이 될 것을 예측했다면 관련 업자를 수소문해서라도 가게를 중국풍으로 꾸몄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이 내국인에게 유발하는 거부감을 인지하고,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명칭의 고안에 주력했다. 그 예로 ‘중국 미식 거리’나 ‘중국 음식 문화 거리’ 와 같이 그 범위를 한층 축소시킨 안이 비교적 유망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 “관광형으로 제일 활성화하기 좋은 거는 중국 미식거리가 제일 좋아요. 그거는 불만이 없어. 지역민들도 보면 내국인들한테도 거부감이 없어요. 타운 하면은 저기 뭐 이렇게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중국 미식거리를 해라. 미식성이라고 하든지 미식거리를 하든지 해서 저기 가면 중국 음식 먹고 오는 그럼 이거보다 (차이나타운보다) 더 부드러워질 수 있잖아. ... 여기는 그러면 중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네 이런 개념도 없어질 거라고.”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음식 문화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걸 희석시키는 (거지.) 이미지를 희석시켜서 좀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더 빠르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와 C 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안을 언급했는데, 이는 ‘차이나’를 정치적인 문제와 유리된 음식 문화 차원으로 국한시키고 ‘타운’을 더 작은 공간적 범위인 ‘거리’로 축소시킴으로써,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이 불러일으키는 중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한층 ‘희석’시키고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동포타운’이라는 명칭 역시 대림동의 특화안을 관철을 위해 내국인이 수용할 법한 명칭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여기 중국화 되지 않냐 하도 떠드니까 차이나타운은 하지 마라, 그럼 동포 타운 해라. 동포 타운도 자기네 (내국인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동포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내국인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동포들이 거기에 (차이나타운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한국인들이 동포를 중국인과 똑같이 취급했어. 그런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뭔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동포타운이라고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와 C 는 '중국동포타운'이라는 명칭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내국인 입장에서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여기 중국화 되지 않냐'며 반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여 '내국인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부각하려는 발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차이나타운'보다 '중국동포타운'이라는 명칭을 지지한 것은 맞지만, 이는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 암시된 것과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화안에 반영하려는 고집의 발로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국인들을 의식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즉,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한 재한 조선족 이주의 거부감이 아닌 내국인의 거부감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며, 재한 조선족은 어느 방향으로든 일단 특화된 명칭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포하는 재한 조선족의 정체성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타협할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체성의 타협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가? 재한 조선족 관계자 D 는 대림동의 명칭에 관한 다양한 안을 언급하며 이처럼 정체성을 타협할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출했는데, 동시에 그는 특화를 위해 고안된 대림동의 정체성을 재한 조선족의 내면적 정체성과 별개로 취급했다.

"차이나타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국 동포 타운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글로벌 타운이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일 원래 지역 특성에 맞는 거는 중국 동포 타운이에요. 근데 브랜딩화 하려면 차이나타운이 또 맞거든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정체성하고 크게 관계없고 지역 특성을 보는 건데. 차이나타운이 정체성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없어.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나 상권 특성을 보면 중국 동포 타운이 맞아요. 근데 더 크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차이나 타운이 낫고. ... 정 (내국인들이) 싫으면 글로벌 타운을 하자. ... 그게 시장성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특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사

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 여론이 별로 없으니까."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D 는 '자존심이나 상권 특성을 보면', '제일 원래 지역 특성에 맞는 거는 중국동포타운'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차이나타운'이나 '글로벌타운'과 같은 대안적인 명칭이 주류 사회의 호응 면에서 '중국동포타운'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 즉, 특화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화를 위한 외면적이고 공간적인 정체성을 내면적인 자기 정체성과 분리하고, 외면적 정체성만을 타협하고 도구화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특화를 위한 외면적 정체성은 '경제적으로 따지'거나 '반대 여론'을 고려해 내면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투영한 산물로서, 내면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2. 동조의 배경

앞서 설명했듯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한 이주민 측의 열망은 일차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의 개선에 대한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정책을 지지하는 동기를 물었을 때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내놓은 답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두고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이 같은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들의 다각적인 정체성 가운데 특별히 중국성이라는 주류 사회와의 '차이'를 부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답은 조선족의 정체성 인식과 그간 주류 사회와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상호작용해 온 역사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유추될 필요가 있다.

1) 동포성의 인정과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의 좌절

연변 대학교의 동문인 조선족 작가 여럿이 각자 조선족으로서 살며 경험하고 느낀 바를 엮어 출간한 수필집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70, 80 후의 삶, 앎, 꿈'에는, 한국과 중국의 두 나라가 개인의 삶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교차하며 '모순과 충돌'을 유발하는 조선족의 내면적 정체성에 대한 묘사가 담겨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 둘 중 어느 하나와 더 밀접하다고 딱 잘라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두개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이웃나라' 언어를 생활화하고 '이웃나라' 연예인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이웃나라' 대통령 선거를 더 주목하는 등 '이웃나라'의 생활방식을 삶의 구석구석에 더 많이 간직한 채로 살고 있다."(류란 2017[73])

> "조상이 태여난 곳은 한국도 조선도 아닌 조선반도였고 나는 중국에서 태여나 중국문화나 한어보다 우리 문화를 더 잘 리해하고 우리말을 더 잘 구사한다." (김영주 2017[74])

> "조선족은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라는 두가지 정체성을 숙명처럼 갖고 있어서 량자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안고 산다. 그래서 부동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두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강도로 작용하게 되여 충돌을 빚기도 한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경기를 할 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또는 그 반대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느끼게 되는 복잡미묘한 감정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싶다." (김영주 2017)[75]

그런 한편,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재한 조선족은 한국과 더 밀접하게 자신의 내면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

[73] 류란. 2017. "이방인'에서 '경계인'으로". 최일 편, 2019,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70, 80 후의 삶, 앎, 꿈*, 90-96. 민족출판사.
[74] 김영주. 2017. "민족문화 그리고 정체성". 최일 편, 2019,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70, 80 후의 삶, 앎, 꿈, 223-227. 민족출판사.
[75] 김영주. 2017. "민족문화 그리고 정체성". 최일 편, 2019,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70, 80 후의 삶, 앎, 꿈, 223-227. 민족출판사.

"부모 세대는 철저히 우리한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한국 혈통으로서) 조선족 우월성을 가르쳐주고 그랬지. 우리는 그래서 자랑스럽게 (한국에) 왔는데 여기는 (재한 조선족을) 외국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대표적으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한국 혈통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른 중국인들과 구별해왔을 정도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정작 한국으로 이주하고 나서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외국인들'로 취급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어 황당하고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의 동포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 욕구, 그리고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동포성의 인정이 좌절되어 분노하는 모습은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의 칼럼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는 "중국동포를 다문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배신감을 크게 느낀다"며 "다문화라는 말 대신 차라리 '이민'이나 '이주'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곽재석, 2012.02.09.'재한중국동포의 한국사회 정착', 동북아신문)

"중국 동포의 선조들은 고향이 남이든 북이든 여하를 불문하고 엄연히 과거 한반도 내에 적을 두었던 조선인 출신이다. 현재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이주해온 중국 동포는 비록 살아온 배경은 다르지만 다문화 가족이 아닌, 한민족 한 핏줄의 겨레이다. ... 오매불망 모국을 찾아 온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다문화라고 이름 지어놓고 차별대우를 하는 이들이 아니었던가. 언론이나 영화에서 무조건 중국 동포를 흉악범이나 사기꾼 캐릭터로 둔갑시켜 놓고 그들에게 다문화 가족이라는 족쇄마저 채워놓지 않았던가?" (김경애, 2018.10.15. [칼럼/김경애]편견을 깨고 장벽을 허물자, 동북아신문)

"한국영화 또는 여론을 이끄는 주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선족은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 물리적 영역권 밖의 존재라고 보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 한민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정신적으로 '통일한반도' 영역권에 귀속된다." (전은주, 2021.02.14. [대림칼럼 51] 잘생긴 '북한군'과 못생긴 '조선족', 동북아신문)

특히 재한 조선족은 한국 사회가 인종을 나누는 방식으로서 '내국인'과 '다문화'의 이분적인 인식 구조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동포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문화'로 분류하며 '내국인'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여론을 이끄는 주체들'에 대해 '장벽'과 '족쇄'를 실감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좌절했다.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는 이처럼 재한 조선족의 동포성에 대한 인정이 좌절되면서 재한 조선족의 주류 사회 참여가 제한되었고, 이는 재한 조선족 자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 "대림동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나 혹은 문화단체나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동포 단체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같이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참여를 시키고, 이러지 않거든. 그분들의 노력이 동포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엄청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인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주인보다도 이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동포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인터뷰 중)

다시 말해 '지역의 주인이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재한 조선족 단체들은 배제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주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기대되었던 동포성에 대한 인정이 뜻밖에도 좌절된 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질성이 갖는 잠재력에도 초점을 맞추어 한국성과 중국성이 상호 동등과 호혜의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공존하는 그림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 "어느 사회든지 주류 사회는 이민자 사회, 소수자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네 당연한 겁니다. 대신 오히려 이주민 사회와 소수자 그룹이 먼저 주류사회에 노크를 해야 돼요. ... 우리가 뭘로 소통할 것이냐, 우리 장점이 뭐냐, 우리가 뭐가 공감대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문화 노래자랑 할 때 우리는 지역 민요 노래자랑을 한 거죠. 동포들도 지역마다 민요가 있고 한국인도 좀 지역마다 민요가 있으면 그런 민요를 통해가지고 한번 서로 만나보자. 그리고 중국 동포 이주 사진전도 ... 외국인들은 조선족이라는 건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하나의 소통인 거고 그리고 대림동 한중 문화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축제를 하게 되면 한국인들만 아니면 동포들만 무대에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대림동 특성에 맞게 내국인들도 있고 지역 사람들도 있고 중국인은 한족도 있고 동포도 있고 다양하게 무대를 구성을 한 거였어요. 그 체험 현장도 한국의 이런 전통 놀이 문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중국 문화도 체험 다 하고. 그리고 계속 소통에 초점을 맞췄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일단 지역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는 그간 한국 사회에 '노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민요 노래자랑' 등 민요라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식, '중국 동포 이주 사진전'을 통해 동질성과 이질성을 모두 가진 조선족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방식, 그리고 '한중문화축제'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방식 등을 시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문화주의적인 소통이라는 이상은 내국인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점차 재한 조선족 측의 일방적인 자발적 공헌 노력으로 기울어져 갔다.

"서울시에서 그때 중국 동포 지원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제가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사실 이 돈은 얼마도 안 되는 거지만 중국 동포 사회의 정착 지원으로 쓰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돈을 한국 사회에 쓴 거예요. 대림동 투어 프로그램을 한 거지. 그 대상자는 내국인으로. 사실은 동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너 이거 동포들하고 쓰라고 줬는데 왜 내국인들한테 돈써 (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최종적으로는 동포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한 30명씩 이렇게 계속 했는데 ... 우리가 사전 설문 조사하고 사후 설문조사를 하는데 완전 달라요. ... 우리는 계속 그런 데 초점을 뒀어요. 동포사회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 사회를 알고. 아까 역사 탐방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한국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도) 어차피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처럼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 그러면 이 나라의 역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 1박 2 일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면서 (운영했어요.) 가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 정말 빡세게 짜요. 현지 문화해설사와 반드시 동행하고. 그게 효과 진짜 좋거든요. 오래 했어요. 행안부 사업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다 끊겼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내국인에서 이주민으로 그리고 이주민에서 내국인으로 전해지는 양 방향의 문화적 초대와 공헌 모두, 이주민과 내국인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등하게 협업하여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주로 재한 조선족 단체 일방에 의해 적극적으로 기획되고 실시되는 모양새를 띠었다.

예컨대 이들 단체에서는 이주민에게 주어진 정착 지원금을 활용해 내국인을 대림동에 초대하고 내국인이 이주민 사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반대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내부의 자원을 동원해 도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한 배경에는 내국인에 대한 공헌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최종적으로 동포들이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었다. 물론 이 같은 단체 활동의 배후에는 '행안부' 등 한국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 끊'기는 상황에 처했다.

재한 조선족의 상호문화주의적인 소통에 대한 정부와 내국인의 무관심은, 한발 더 나아가 반감으로 진화했다. 이는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철회된 것을 넘어, 정부가 내국인의 반감을 이유로 재한 조선족의 자체적인 활동에 입김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그것도 내가 한글날을 기념해서 만들었거든. 외국인 우리 동포 자녀들이나 중국에서 공부하면 한국 말을 몰라. 걔네들 오면 우리 한글날에 한국말로 하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내국인 아이들은 중국어, 한국어 같이 하고. 그래서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예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 4회째인데 작년에 시에서 태클을 건 거예요. 왜 한글날에 중국어 말하기 대회 하냐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 한글날에 외국인 애들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고 항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한글날 피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 그냥 나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창출이 아니고 협찬을 받아다가 걔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 걔가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이) 꿈이 중국 유학이야 이제는. 그렇게 꿈이 생기거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중략)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못하냐고. 누가 봐도 이게 머리가 막히지 않는 이상은 그거 좋은 건데. 자기네가 되려 우리를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와서 뭐 축사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 ... 대회 치르고 다 장학금 여기서 다 주지. 내국인 사업가들 후원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동포 사업가들 여기에 뭐 식자재 하는 분들 무역하는 분들 해서 (장학금 마련) 하지."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예컨대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같은 일부 상호문화주의적인 교류 노력은 이주민 측에서 사업의 기획과 실행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한국 정부 측에서는 공간 대여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학금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내국인 사업가들 후원하는 사람 한명도 없'이 '동포사업가들'에게서 출자되었다.

이는 한국 정부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이주민 측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에 비해 훨씬 이주민 주도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질성에 거부감을 갖는 주류 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 했다.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사업을 주관한 재한 조선족 단체장은 일차적으로 '누가봐도 좋은' 활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부 주류 사회의 반응과, 이차적으로 격려를 하기는 커녕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설명을 못하'고 '한글날 피해서 해달라'며 그 같은 불만을 수용하고 이주민 측에 전달하는 한국 정부의 수동성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호문화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주류 사회와 융화하고자 했던 이주민의 노력은, 주류 사회는 무관심한 가운데 이주민이 일방적으로 주류 사회에 공헌하는, 나아가 주류 사회의 냉대 속에서 이주민의 공헌 노력이 원치 않는 것으로 취급되고 반대에 부딪히는 양상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동포성의 인정과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이 좌절됨에 따라, 주류 사회와 접촉하고 융화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주류 사회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이주민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협해 내보이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자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 결과 오히려 이주민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브랜딩하며 도구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는 모습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2) ‘내국인’과 ‘다문화’ 사이의 사각지대

직전에 다룬 내용이 문화적인 인정과 융화 시도의 좌절에 관한 것이라면, 더 실질적인 문제도 있었다.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만 명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도 없어요. 담당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현재 한국의 법과 행정 체계 내에서 재한 조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재한 조선족은 ‘내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문화’에 속하지도 못해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재한 조선족 내부에서는 차라리 재한 조선족이 ‘다문화’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 지원을 받는 것이 실리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 “다문화 100 만 기실은 “진짜” 외국인은 절반도 안 된다. 그 이상은 모두 우리 중국조선족이다. 그런데 왜! 우리 조선족이 다문화지? ...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각성한다. 옳지, 우리는 다문화다! 우리는 당당하게 다문화의 1 원으로 나서서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받아들이고, 향수하여야 한다. 우리가 왜! 바보멍청이같이 받아도 주지 않는 충정만 노래하고 있을 것인가!? ... 우리는 중국에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까지 보면서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에 모든 충정을 다 받쳐 한눈팔지 않고 다만 한국국민으로서 살아오기를 원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를 다문화로 내 몰았다. 섭섭하고 원통하기 짝이 없었다. ... 우리는 대한민국의 다문화요! 중국의 화교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나니 중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쓸 때 없이 대한민국에 충정을 받아 달라고 구걸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문화의 1 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다문화의 모든 혜택을 요구하고 또 누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화교로서 중국정부의 모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박병도, 2012.07.31. “우리는 다문화의 1 원이다! 우리는 화교이다!”, 동북아신문)

동시에, ‘다문화’라는 표식과 재한 조선족의 내면적 정체성 간의 괴리, 그리고 일부 재한 조선족이 보이는 ‘다문화’라는 표식의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인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내부에서 표출되었다.

> “근데 실제적으로 다문화 예산은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 여성한테만 대부분 예산이 집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구로에서 혹은 영등포에서 다문화 노래 자랑하잖아요. 다문화 예산으로. 그런데 사실은 출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동포들이에요. 요즘 동포들 대부분 살고 있고. ... (시상할 때) 꼭 피부색깔 다른 사람 넣어줘야 돼요. 등수에 꼭 (인종이) 다른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이 예산이 집행이 돼도 말썽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동포 노래 자랑인데 현수막은 다문화라 써야 되고 사실 와서 박수 치는 사람들 관객들 95% 이상이 다 동포들이든거요. 근데 다문화라고 해야 예산이 나와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 “인간이 이름이 있듯이 모든 ‘업체’는 간판이 있다. ... 지난해부터 재한 조선족사회에 다문화바람이 불고 있다. 조선족이 다문화에 속하느냐, 마느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논쟁에는 관심이 없고 다문화간판에만 관심이 있다. 2 천 8 백억원(다문화) 대 1 천 2 백만원(조선족)의 정부 지원, 다문화에 유혹이 클 만도 하다. 조선족간판은 메리트가 없다. 다문화간판을 걸어야 메리트가 크다. 그래서 경쟁하듯이 다문화란 간판에 매달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식을 벗어나는 다문화간판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의 웃음거리를 지어내고 있다. 며칠 전 필자가 대림동을 지나다가 우연히 조선족행사에 마련된 화환에 ‘재한다문화’ 00 협회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정룡, 2013.08.08. [김정룡 칼럼]다문화병에 걸린 재한조선족, 동북아신문)

이처럼 ‘관객들 95% 이상이 다 동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고 해야 예산이 나’오거나 ‘조선족행사에 마련된 화환에 ‘재한다문화’ 00 협회라고 적’혀있는 모습과, 그에 대한 내부적인 한탄과 지탄의 목소리는, 재한 조선족이 한편으로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다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편입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같은 분류가 어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카테고리는 첫째로 ‘다문화’라는 두루뭉술한 카테고리에 비해 재한 조선족의 정체성의 일부를 더 특정적으로 반영하고, 따라서 재한 조선족의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더 용이했을 것이다.

둘째로 ‘다문화’라는 카테고리가 재한 조선족에 대해 배제적인 경향을 띠는 것에 반해 ‘차이나타운’은 오히려 배타적으로 재한 조선족을 포섭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비록 재한 조선족에게 직접적인 가용 예산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재한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더 나은 기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한 조선족에게 다가온 흔치 않은 포섭의 손길이었으며, 재한 조선족이 배제된(excluded) 타자에서 배타적인(exclusive)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재한 조선족은 그 기회를, 그 성격과 함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이견과 함정

앞서 설명했듯이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그에 이견을 표출하며 반대하기도 했고, 대림동과 중국의 동일시가 관광 목적으로 ‘차이나타운’을 소비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즉,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노정하는 타자화의 함정이 관찰되기도 했다.

1) 정체성의 환원 혹은 반영

앞서 본 연구는 재한 조선족이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해 ‘차이나타운’보다 ‘중국동포타운’이 낫다고 주장한 이유는 기존 언론 보도에서 암시된 것처럼 주류 사회에서 자신들의 내면적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주류 사회가 수용하기 쉬운 ‘부드러운’ 외면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76].

---

[76] 본 논문의 4장 1절 1-3) 참고

그러나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상인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비록 소수 의견이었지만, 실제로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을 내면적 정체성과 연관 짓고, 둘 간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내면적 정체성의 환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기는 교포 타운이라고 해야지. 동포타운 이런 이름을 붙여야지. ...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우리 조상이 여기야. ... 우리는 엄마 아빠 우리 조상들이 있던 땅으로 우리가 왔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 너는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면 되게 분개한다. 엄청 분개해. ... 여기는 교포타운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투표도 하잖아. 우리 지지하는 당도 있어. 왜? 우리는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교포 타운 (이라고 생각해.) 차이나타운이 아니야. 중국 아니야. 차이나타운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국적은 얻었는데 한국 사람 인정은 또 안 해줘요. ... 미국에 가가지고 난 애들은 미국 국적이어도 얘는 우리 손자야 하고 기뻐하고. 그거는 맞는가? 그건 아니잖아. 인종 차별이고 인권이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인정을) 못 받았잖아.” (대림동 내 상인 c 인터뷰 중)

대림동 내 상인 c 는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해서 대림동은 중국이 아니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대림동을 중국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재한 조선족을 중국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며, 그것은 재한 조선족의 내면적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연구 참여자처럼 국적을 가진 재한 조선족의 입장에서 이는 시민권적 지위의 인정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었다. ‘차이나타운’ 은 타자에 대한 표식의 일종으로서, 재한 조선족이 응당히 누려야 할 한국인으로서의 ‘인정’과 ‘주권’을 박탈당하고 ‘차별’ 속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기원하고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c 는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를 바에는 ‘중국동포타운’으로 부르는 편이 낫다고 말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일전에 설명한 재한 조선

족 단체 관계자들의 구상과 일치하지만[77], 근본적으로 주류 사회를 의식하기 보다는 주류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기보다는 관철하고자 하며, 내면적 정체성과 외면적 정체성의 간극을 인정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인정의 부재를 드러내는 징표로 본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c는 나아가 대림동의 자연발생적인 중국성에 관한 인식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라는 공간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실천 간의 상호 참조로 인해 대림동의 '차이나타운' 화가 스스로 가속화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해석[78]을 거부하며, 구성원의 실천을 동네라는 공간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개별 상점 공간에 국한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 "(교포들이 중국에서 먹던 음식의) 추억을 살리는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메뉴에 맞춘 인테리어일 뿐이고. ... 식당에 왔어. 그러면 분위기대로 이렇게 음식점을 장식을 하잖아. 그러면 사천성에서 왔어. 사천 요리를 해. 사천성 이런 분위기로 연출을 하잖아요. 그 인테리어가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대림동 내 상인 c 인터뷰 중)

다시 말해 상점의 정체성과 관련한 상인의 실천은 개별적인 구상을 실현하는 '그냥 그 정도에서 끝' 나는 것으로, 그리고 대림동의 자연발생적인 중국성은 그처럼 파편화되고 상호무관한 실천의 집합으로 인해 우연히 그렇게 보이게 된 것, 즉, 잘못 해석된 착시로 축소되었다.

c 가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은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정체성이 이주민 공간의 정체성과 맺는 관계, 즉, 이주민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주민 공간의 매개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이주민의 내면적 정체성이 이주민 공간의 외면적 정체성과 얼마나 동일시되고, 또 전자가 후자에 얼마나 투영되는가는, 통일되지 않은 견해들 간의 긴장 속에서 쉽사리 결론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과 c 가 내면적 정체성과 외면적 정체성 간의 괴리를 공통적으로 인정하되, 그 같은 괴리가 실질적으로 내면적 정체성의

---

[77] 본 논문의 4장 1절 1-3) 참고
[78] 본 논문의 4장 1절 1-2) 참고

환원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면, 두 정체성 간의 괴리를 크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즉, ‘차이나타운’이라는 외면적 정체성을 내면적 정체성의 매끄러운 반영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 “저는 그냥 그건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나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저도 한국에서 12 년 살았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 건데요. (중략) 저는 중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생각이 더 중국화된 거죠. (중략) 세대 차이 너무 나는 거죠. 우리 완전 달라요.” (대림동 내 상인 d 인터뷰 중)

예컨대 대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 대 상인 d 는 본인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처럼 중국의 대도시에서 성장한 젊은 조선족의 경우 동화주의적인 교육의 결과로 중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대한 동조의 여부와 방식이 민족과 개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라는 변수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국과의 동일시에 따른 타자화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은 대체로 대림동 ‘차이나타운’를 환영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도 하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수가 재한 조선족을 중국인과, 그리고 대림동을 중국과 동일시하는 주류 사회에 의해 그들이 겪는 피해를 호소했다.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재한 조선족이 중국인과 동일시됨에 따라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아 한탄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중 정서를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재한 조선족의 억울함은 반중 정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보다는, 재한 조선족은 중국인과 다르다는, 내면적인 정체성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중국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림동에 대한 혐오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 "중국에서 코로나 19 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은 것은 중국동포들과 중국동포집거지의 상가들이었다. 이는 중국동포들을 중국 국적자들이라고 해서 '중국인'으로만 보고 혐오한다는 반증이다. ... '작년 4 월쯤부터, 거기 우한 코로나 센터 아니냐 며 욕설이 난무하는 비난 전화 수백통이 끊임없이 걸려왔다'며 '동포들에게 제발 돌아다니지 말자고 사정했을 정도'라면서 서울 대림동 부근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다녔다.'" (차홍구, 2021.07.28. [차홍구 칼럼]"혐오"만 하지 말고 팩트를 보자...중국동포는 함께 살아갈 이웃, 동북아신문)

> "대림동 중앙시장은 국내 여느 시장과도 다를바가 없다. ... 사실 대부분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코로나 19 사태 직전이거나 한창 유행할 때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병균을 전파할 확률이 제로"라며 "그럼에도 일단 중국이 문제가 되면 따라서 재한중국인을 연관시키고 차별·혐오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거쳐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한다" (동북아신문, 2020.07.10.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모색)

이처럼 '중국동포들을 중국 국적자들이라고 해서 '중국인'으로만 보고 혐오한다'거나 '일단 중국이 문제가 되면 따라서 재한중국인을 연관시키고 차별·혐오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재한 조선족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보며 중국과 거리를 두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특히 재한 조선족은 정부의 '대림동 등 중국동포 밀집지역 집중관리' 활동이나 언론이 대림동을 상대로 과장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대림동의 현황을 강조했다.

> "특히 "대림동 등 중국동포 밀집지역 집중관리 등"은 시민들에게 대림동 지역을 기피 지역으로 낙인을 찍어주고 있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동포단체들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및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등 자발적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아직 한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동북아신문, 2020.02.09. [인터뷰]서남권글로벌센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센터로)

"이번에도 코로나 19 가 사태가 터지자 이번에도 언론들이 가만있지 않았다. 먼저 대림동을 취재하며 중국동포집거지들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했고, 마치 조선족들이 중국을 오가며 '슈퍼전파자'가 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족 코로나 19 확진자는 불과 몇 나타나지 않았다." (차홍구, 2020.03.10. [칼럼] '조선족 혐오발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동북아신문문)

이와 더불어 재한 조선족 단체들은 '다른 지역은 코로나 생겨도 모르는데 대림동만은 코로나가 생기면 무너진다' 는 인식 아래 대림동 내 코로나19 확산의 물리적 예방에 앞장섰다.

"여기는 (코로나 19 확진자) 없었어요. 동포들이 단체에서 소독약 사고 소독 기계 사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녔어요. 이 동네에. 내국인들은 여기 오면 코로나 걸리는가 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그때 당시 구청장도 왔었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코로나 생겨도 모르는데 대림동만은 코로나가 생기면 무너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언론들 또 쫙 그 조명할 거 아니에요. 대림동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상권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단체들마다 엄청 신경 썼어요. 전단지 막 뿌리고 방역하고 띠 두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마스크도 막 날라주고 하면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이들은 단체 활동의 일부로서 직접 소독약, 소독 기계,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과 홍보 물품을 구매하여 방역 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대림동을 중국과 동일시하며 코로나19 와 더욱 강하게 연상시키고, '여기 오면 코로나 걸리는가 해서 오지도 않' 는 주류 사회의 경향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은 이처럼 대림동을 중국과 동일시하며 차별하고 혐오하는 현상을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와 연결 짓지는 않았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중국성이라는 대림동의 '차이' 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기원을 갖고 있음에도, 그 둘 간의 상호 연관성이나 그에 따르는 이주민 측의 상반된 반응이 내포한 모순을 인지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만이 이 같은 연결 고리를 인식하며,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결과적으로 대림동을 중국으로 취급하며 혐오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에서) 차이나라고 할 때 이거는 중국이라고 얘기가 되고 (대림동의 거주민이) 중국인이라고 얘기가 되거든. 그런데 한국인들이 중국이나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거든. ...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국 동포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라고. 그 속에 갖다가 같이 막 너희들 다 중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중국 동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중심이 돼 있는데 중국이 싫다고 해서 동포들마저 싫게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동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인터뷰 중)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보는 것은 곧 대림동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주민을 중국인으로 보게 만들며,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중국 동포들이 피해를 받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부재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의 효과를 대체로 대림동 내부에 관광객이 유입됨으로써 일어나는 소비와 여가 활동에 국한시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접촉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대림동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존재하기는 했다[79]. 이는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의 효과를 정치적 영역으로 한층 더 확장시켜 보지만, 여전히 대림동 내의 상호작용 측면에만 주목하며, 대림동 외부에서 대림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채 대림동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제3자의 시선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잃어버린 조각에 집중함으로써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와 기존에 대림동이 중국과 동일시되며 받게 된 피해를 연결지어 바라보고,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의 약점을 짚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지점에서,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한 동조의 움직임에서 발견되는 외면적 정체성을 구성하여 도구화하려는 시도가, 과연 의도된 것처럼 내면적 정체성과 철저하

---

[79] 본 논문의 4장 1절 1-1) 참고

게 유리된 채 외면적 정체성에 대한 보상만을 수확하는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과연 관광을 매개로 주류 사회와 이주민의 접촉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혹은 오히려 이주민이 반중 정서를 직격탄으로 맞고 영구적으로 타자화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 "차이나타운'에는 한국 특유의 스트레스가 없다. 독한 배갈에 느끼한 중국요리, 중국어가 섞인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 반면에 '주류 사회 진출'과는 거리가 퍽 멀다. 한국언론이 재한조선족의 '사회적 융화'를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이나타운'이 유지되는 한 중국동포들의 '한국인 동화'는 요원한 일이다." (김범송 2016.02.29. [김범송 칼럼]조선족 '이민정책' 가능한가, 동북아신문)

'차이나타운' 이 주류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크게 더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혹자는 '차이나타운' 에서 활동하는 이주민의 '주류사회 진출' 이나 '한국인 동화' 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소수 이주민 집적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를 떠나 소수 이주민 집적지라는 분리된 공간적 형태 자체가 주류 사회와 이주민의 분리를 영속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동조하면서도 재한 조선족을 중국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차이나' 라는 외면적 정체성과 '동포' 라는 내면적 정체성을 분리하고, 외면적 정체성이 단지 도구적인 차원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의도[80]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

[80] 본 논문의 4장 1절 1-3) 참고

제 2 절 동화와 배제에 대한 반응

1. 내부적 타자화와 물리적 통제

대림동에 대한 배제론과 동화론[81]에 대해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첫번째 유형은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일탈적인 문화'에 대한 영등포구의 동화론적인 인식과 처방에 동조하며 물리적 통제를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 "동포들 창피한 일이 있으면 그건 때려야 된다. 소문 낼 거 내야 된다. 소문 낸다고 이미지 안 좋고 그게 아니다. 잡을 건 잡아야지 앞으로 안하지. 그걸 전체 동포 얼굴에 쪽 팔린다고 덮어놓게 되면 썩어서 더 크게 버려지잖아요. ... 우리 동포들이 뭐가 부족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주다 보면 어떨 때는 (중략)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 인터뷰 중)

> "한국 법이 너무 무른 거예요. ... 단순히 몇십 명이 그렇게 했지만 피해 보는 건 팔십만 동포, 전체 동포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내국인들이 보는 눈길이 중국 놈들 저거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 인터뷰 중)

특히 강경하게 이 같은 입장을 보인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A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저지른 '창피한 일'이나 '부족한 점'을 '때려야'하고 '스스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잡을 건 잡'으며 '채워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대림동에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부실한 대응을 보였던 사례를 여럿 언급하고, 한국의 행정 및 법 체계를 중국의 체계와 비교하기도 하며, '한국 법이 너무 무른' 현실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서 토로했다.

이러한 관점은 담론적 왜곡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문제의 실존과 그것을 물리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영등포구의 담론과 닮아

---

[81] 본 논문의 3장 2-3절 참고

있는 한편, ‘단순히 몇십 명이 그렇게 했지만 피해 보는 건 팔십만 동포’라며 이 같은 문제를 일부에 귀인하고 재한 조선족 사회 전체와는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영등포구의 담론과 구별되기도 한다. 즉, 이때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자신들을 타자화하는 주류 사회의 시선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되,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내부적으로 일부를 타자화하는 기조를 보인다.

이 같은 기조는 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 사이에서 보급되고 읽히는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의 칼럼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은 진정 한국시민으로 살아갈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이다. ... **이런 사람들**은 쓰레기처리, 노상방뇨, 무단횡단, 시끌벅적 떠들기, 길에서 가래침 뱉기 등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이 무시당하는 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룡, 2019.07.24. [칼럼/김정룡]조선족, 이상한 한국 때리기, 동북아신문)

> “이러한것들은 우리 동포사회에 끼여 든 **좀벌레**라 할수있습니다. ... 이런 좀벌레들의 침습으로 하여 우리 동포사회의 이미지는 엄중한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도로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 준 중국정부와 우리를 받아준 한국정부에 모두 미안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청룡, 2012.12.05. 재한중국동포들 자각적으로 한국의 법률과 제도를 준수합시다, 동북아신문)

> “만일 한국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여 돈 잘버는 사람들인즉 중국의 고향에서도 일에 열심하던 사람들라할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고향에 있을때도 일하기 싫어하고 놀음에 탐하던 사람들이렸기때문일가? ... “**집에서 새던 바가지** 나가서는 새지 않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동북아신문, 2011.01.01.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는가?)

> “영등포구 대림동은 중국동포들의 집거지자 자존심이다. 더는 이 지역에서 살인사건이나 마약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말도록 중국동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내국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사회가 애써 구축해온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림동의 이미지에 먹칠하지 말도록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차홍구, 2021.01.25. [칼럼] ‘대림동 살인사건’ 악몽, 더는 재현되지 말아야, 동북아신문문)

예컨대 위 칼럼의 기고자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문제적인 일부를 분리해내어 지칭하고, ‘좀벌레’, ‘미꾸라지’, ‘집에서 새던 바가지’와 같은 비유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비난하고 타자화했다.

이러한 내부적 타자화는 두가지의 부수적 위치 짓기 효과를 갖는데, 하나는 발화의 대상을 통제되어야 하는 자로 프레이밍하는 과정에서 발화자는 통제자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화의 대상을 특수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분리해냄으로써 대림동은 이들에 의해 ‘먹칠’을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곳으로 위치지어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재한 조선족 단체들은 이 같은 내부적 타자화의 기조에 따라 주체적으로 문제적인 행동과 환경의 물리적 통제에 앞장섰다[82]. 그리고 이때 대림동은 주요 대상이자 근거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들은 대림동을 청소하거나[83], 대림동에서 기초질서 준수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84], 쓰레기 배출법 준수를 독려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CK 여성위원회가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흔적으로 대림동 내 쓰레기 배출지에 이들이 설치한 표지판을 다수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6). 해당 표지판은 노란색 바탕과 붉은색 테두리를 사용해 정부에서 설치한 표지판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날카로운 경고보다는 독려의 어조를 띠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물리적 통제 기조를 수용하는 동시에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 측의 행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82] 동포세계신문. 2019.07.28. ‘대림동사람들 제1차 대림동포럼 개최 “대림동의 현재와 미래 함께 고민해 봅시다”’
[83] 동북아신문. 2019.09.24. ‘[발제문 1 문현택]동포밀집지역 기초질서 현황과 개선 방안’
[84] 동북아신문. 2017.03.09 ‘CK여성위원회, '깨끗한 거리 조성' • 4대 惡 근절 캠페인 개최’

[그림 4-6] 재한 조선족 단체에 의해 설치된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문
(2023 년 3 월 연구자 직접 촬영)

2. 변화와 공헌에 대한 인정 요구

동화론과 배제론에 대해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보이는 반응의 두 번째 유형은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의 현실의 변화와 주류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강조하면서 동화론과 배제론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거를 반박하는 관점이다. 요컨대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은 이미 동화되어 있기에 추가적인 동화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주류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배제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중국적인' 무질서와 '범죄도시'라는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낙인과 관련해,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는 '15 년 전의 대림'에 비해 '지금은 완전 달라'졌다며, 동화의 필요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최근에는 (기초 질서 관련 교육이나 물리적 통제를) 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된 게 10 년, 20 년, 30 년 있다 보니까 (재한 조선족이)거의 이제 한국인화가 됐고 다 분리 배출하고 그래요. 가끔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도 대림동 같은 경우도 15 년 전의 대림하고 지금은 완전 달라요. 구로도 마찬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 인식 그대로 있죠. 대림동 가면 칼 차고 다니고 있다 (라고 말하죠.)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D 는 재한 조선족은 수십년 간 한국에 머무르며 이미 '한국인화' 된 존재로, 쓰레기를 '다 분리 배출하고', '대림동 가면 칼 차고 다니고 있' 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재한 조선족에 대한 주류 사회의 동화론과 그 근저에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옛날 인식' 에 불과하거나 연구 참여자 본인은 '한 번도 못 봤' 을 정도로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은 이미 동질적인 존재라는 주장에서, 주류 사회의 동화론은 동질화의 추구를 빌미로 그 과정에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생산하며 재한 조선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이 문화적으로 변화했다는 주장이 동화론을 반박하는 근거라면, 재한 조선족 이주민과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선족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했다는 주장은 배제론을 반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지금 젊은 (조선족) 애들이 한국을 선택할까? 오면 이미지가 너 3D 업종 한다는 이미지고. 정말 중국에서 대학도 못 가고 정말 할 일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니면 부모가 한국에 있어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3D 업종을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올까? 오히려 그냥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가는 게 낫지 않나. 한국에 유입되는 유학생은 일단 엄청 줄었고요. ... 그래서 앞으로 (재한) 조선족 인구는 절대 90 만 명 초과 못합니다."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D 는 한국 사회가 재한 조선족을 사실상 '3D 업종 한다는 이미지' 로 취급하며 배제하지만, 오히려 조선족은 '정말 할 일이 없' 지 않은 이상 굳이 한국 사회의 냉담한 처우를 감수하며 한국으로 이주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한국에 유입되는 유학생' 이 줄고 있는 현

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어서 재한 조선족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이 배제를 감수할 위치에 처해있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재한 조선족의 경제적 공헌을 강조하며 재한 조선족에 대한 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담론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 "동포들도 다 기여하고 정착되어 있는 거야. 옛날에 불법 체류할 때 돈 벌어서 중국에 보낼 시기는 지난 거예요. 지금은 퇴직한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퇴직금 가져다가 여기서 쓰고 살아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 "외화 반출한다. 처음에는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브로커를 이용해야만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동포로 인정 안 했으니까. ... 근데 지금은 외화 반출하는 게 아니라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 하나는 일단 송금을 적게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송금해요. 애들이 여기 있는데. 두번째는 인바운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봐요. 거의 1천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와요. 한국의 중국어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2 만 5 천 명이에요. 그리고 인바운드 여행사들 오너들 대부분 조선족들이에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면 연구 용역 프로젝트 하나 해라. 민관 합동. 그래서 외국인이든 아니면 중국 동포든 동포들이 한국에서 과연 일자리를 빼앗고 있느냐,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느냐. 빼앗는다면 얼마나 빼앗고 있고 창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하자.)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 내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조사하자.) 얘가 (외화를) 반출하면 얼마나 하고 있고 창출하면 얼마를 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내서 아무런 설명 부가 설명 없이 그걸 그대로 언론에 그냥 노출시키자. 그러면 인식 개선이 된다. 동포 사회 20 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와 D 는 재한 조선족이 법적 지위의 개선과 오랜 정착 기간 동안의 적응을 바탕으로 외화 반출이 아닌 외화 벌이를 하는 존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재한 조선족이 송금을 할 필요성이 없고, 반대로 중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들여오며, 동시에 중국어,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재중 네트워크 등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이용해 중국 관광객을 들여

오거나 한국 상품을 중국에 파는 여행 및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배제론을 반박하기 위한 변화와 공헌 담론 역시 재한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것에서 대림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 "재한 중국동포는 이제 더는 3D 업종에만 종사는 최하층 인력집단이 아니다. 특히 대림동에는 중국동포동포들이 경영하는 식당, 가게, 여행사, 무역회사 등 꽤 수익 높은 상권이 형성돼 있고, 집값도 강남 못지 않게 뛰고 있으며, 중국동포들의 주요 단체와 신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동포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방범을 한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동렬 대림칼럼 71] 대림동 '영토'문제, 동북아신문)

> "대림동에서 초창기에는 다방만 있었어요. ... 근데 대림은 커피숍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들도 예를 들어서 하이볼을 파는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 "대림동 자체가 영등포의 일부예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세금을 제일 잘 내고 많이 내는 데가 여기 대림동이에요. 그만큼 여기 세금 많이 내요. 그러면 영등포도 신경을 잘 써야지."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대림동은 '수익 높은 상권'과 '강남 못지 않'은 집값을 보이고, 재한 조선족이 '주요 단체와 신문사들' 및 '동포자율방범대' 등의 자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방범을' 이루어낸 곳으로, 재한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상징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 증표로 D 는 '대림은 커피숍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하이볼'을 파는 술집 역시 많이 들어서는 상업 업종 변화에 따른 공간 상의 변화를 지목했다. 즉, 대림동은 더 이상 낙후되고 소외된 동네가 아니라 트렌디한 소비의 장으로서 소위 '핫 플레이스'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B 는 대림동이 주류 사회의 영토의 일부로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며 주류 사회에 공헌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영등포도 신경을 잘 써'서 정부의 지원을 응당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류 사회와 이주민이 경제적 공헌 측면에서 동질하다는 논리는 배제론의 바탕에 있는 ‘차이’에 따른 ‘차등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주민이 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주류 사회와 섞일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로부터 대림동을 ‘차이나타운’화하기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서남권 명소’로 만듦으로써 ‘주말에 중국동포와 한국인들이 같이 어울리’도록 하여 재한 조선족과 주류 사회의 섞임을 촉진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85].

3. 차별과 혐오에 대한 담론적 대항과 물리적 예방

앞서 논의한 재한 조선족 및 대림동의 변화와 공헌에 대한 담론은 문화적 차원(동화론)과 경제적 차원(배제론)에 걸쳐 있었으나, 주로 경제적 차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한 조선족 및 대림동의 ‘문화’를 문제시하고 제거해야 함을 주장하는 담론이 정책 차원의 동화론뿐만 아니라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차별과 혐오로 번지면서, 재한 조선족 사회 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 적극적인 실천을 벌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한 조선족 이주민 측은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이 문화적으로 변화했고 동화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 동화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주류 사회의 담론적 왜곡과 물리적 통제 기조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혐오를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담론적 대항과 물리적 예방 실천을 전개했다. 이것이 동화론과 배제론에 대해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보이는 반응의 세번째 유형이다.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재한 조선족의 문화적 ‘차이’를 문제시하는 시선이 내포하는 인종화와 본질화 경향을 문제 삼고 그에 반박했다.

---

[85] 동북아신문. 2016.10.27.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이 말하는 재한조선족사회 실태’

"중국동포의 범죄율이 내국인의 절반 정도예요. 근데 언론에 엄청나게 부각이 되죠.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하니까. 제목도 엄청 선정적으로 쓰니까. 한국 사람이 살인을 하면 A 모씨 (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 동포가 하게 되면 앞에 꼭 중국 동포 혹은 조선족 A 모씨 (라고 하죠.) 왜 한국인 A 모씨라고 안 합니까? 할 거면 같이 해야지. 이러면 불특정 다수의 중국 동포가 다 살인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D 인터뷰 중)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어제 엊그저께 와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족들은 금연거리인지 뭔지 중국의 문화 그대로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쪽에 서서 (담배) 피우다가 저기 숨어 있다가 휙 나와서 오면 사진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 이게 뭐냐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차라리 노란 조끼라도 입고 우리는 금연 단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해줘야지.) ... 다른 지역은 신사처럼 단속하는데 대림동만은 왜 딱지 끊으려고 단속을 하냐 ... 중국 동포들은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지하철역에 가서도 막 피운다니까요. 모르니까. 시골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구청에 말했죠.) 그것도 공감하는데 그냥 그때뿐이에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D 는 '중국동포의 범죄율이 내국인의 절반'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재한 조선족이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선족 A 모 씨' 라고 인종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국인이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 '한국인 A 모씨' 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를 인종화하는 시각이며, 불특정 다수의 중국 동포가 다 살인자처럼 보이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B 는 금연 위반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재한 조선족의 행동과 의식에 고착되어 바뀌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하는 본질화 경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 은 '다 알아' 서 그 같은 문제를 저지르지도 않으며, 문제의 원인은 '처음 온 사람들' 이 그러한 규정에 대해 '모르' 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숨어 있다가 휙 나와서 오면 사진 찍' 는, '딱지 끊으려고 단속을 하' 는 식의 단속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계도' 를 통해 교육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기초 질서 문제를 인종화하고, 본질화하고, 물리적 통제 기조를 우선시하며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영등포구의 정책적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과 시정 노력으로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 내용이) 대림동에 대한 치안. 해봐야 계속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림동 기초질서,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 그 다음에 치안.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미디어 쪽에서도 그냥 이 동네는 쓰레기가 많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많고, 싸움박질 하고. 이렇게 밖에 조명 안 되는 거야."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지금 서울 어디 가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내국인들도 버린다는 얘기라고. 왜 여기는 맨날 동포들만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타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폄하시키고 스스로 (구청에서) 폄하시키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영등포구인데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밀집 지역 외국인 치안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이런 간담회. 어떻게 하면 대림동을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느냐 이걸 동포들 단체들한테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수막을 이런 식으로 (외국인만 부각시키는 식으로) 하지 마라. ... 그리고 이런 간담회는 동포 단체들만 부르지 말고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부르라고. 대림동 (쓰레기 무단투기) 동포들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왜 여기다 (관련 현수막이나 간담회에) 꼭 중국 동포 무슨 아니면 외국인 이렇게 왜 붙이냐고. 무단 투기도 나도 여러 번 봤지만 우리 동네도 한국 아줌마들 와 버린다고. ... 대림동을 깨끗하게 만들고 치안 유지하는 거는 내외국인 할 거 없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B 인터뷰 중)

B 는 재한 조선족과의 간담회에서 기초질서나 치안 문제만을 논의하고, 관련 현수막이나 간담회에서 재한 조선족을 부각시키면서, 영등포구가 대림동을 '이렇게 밖에 조명 안되'게 하고, '스스로 폄하시키'고, 내외국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는 인식은, 물리적 차원이 아닌 담론적 차원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며, 따라서 물리적 통제가 아닌 담론적 왜곡의 시정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기초질서와 치안 유지의 방법에 대한 논의에 앞서 '동포 단체들만 부르지 말고' 내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부르라'고 요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기조는 주류 사회에 대한 담론적 대항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2015 년에 발족된 동포모

니터링단[86]은 재한 조선족에 대한 재현의 차원을 문제시하며,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동포사회를 묘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했다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C).

2017 년에는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발하고 담론적으로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극에 달했다. 조선족 범죄자를 등장시키는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가 연이어 개봉하면서, 대림동은 사실상 '범죄도시'라는 별칭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특히 영화 '청년경찰'은 '대림동'이라는 지명을 영화 상에 그대로 기용하고 대림동을 조선족만 사는 곳, 여권 없는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는 곳, 밤에 칼부림나는 곳, 밤에 경찰도 안 들어오는 곳 등으로 묘사하는 대사를 삽입하여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반발을 더욱 증폭시켰다. 해당 시기에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에서는 관련 논의가 폭발했고, 이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그에 맞선 재한 조선족 이주민 측의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 "2017 년 8 월, 영화 '청년경찰'이 상영되면서 재한조선족사회가 '폭발' 한 적이 있다. 대림동을 범죄의 소굴로, 중국동포들을 난자 강제 척출 범죄자로 묘사한 것이다. '청년경찰'을 본 관람객들은 중국조선족을 평소 범죄와 연계된 아주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비난하고 기피했었다. 이에 재한조선족단체들은 뭉쳐서 즉각 '청년경찰' 상영중단을 촉구하며 법률 소송까지 냈다. 이때 많은 조선족들은 "우리도 각본을 쓰고 영화를 찍자"라고 외쳤다. 한편의 영화가 얼마나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가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동렬, 2019.09.19. [르포 I 이동렬]재한조선족 문학의 사회적 의미, 동북아신문)

> "미디어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각인된다. 실제로 '청년경찰' 상영 후 대림동엔 한동안 한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우리한텐 고향음식 생각날 때 들르는 곳이 현지인들한테 '슬럼가'로 인식되었던 것이었다. 급기야 동네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하여 지역치안유지에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문화시장의 작동원

---

[86] 활동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신정아와 한희정(2016) 참고

리는 간단하다. '잘 팔리면 장땡이다'. 드라마에는 악역이 필요하다." (소빈, 2019.04.24. [칼럼/소빈]'매매혼'도 '4 등시민'도 거부한다, 동북아신문)

이주민들은 '고향음식 생각날 때 들르는 곳' 인 대림동이 '범죄의 소굴' 로 묘사된 것에 대해 분개했고, '잘 팔리면 장땡' 인 '문화시장의 작동 원리' 에 의해 대림동과 조선족이 '악역' 으로 희생되었다고 인식했다. 이에 재한 조선족 단체들은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심 끝에 승소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얻어냈고, 다수의 이주민들이 재한 조선족의 관점에서 '각본을 쓰고 영화를 찍자' 며 대안적인 담론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담론적 대항의 과정에서 대림동이라는 공간을 전용하고자 하는 실천도 나타났다. 예컨대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주민과 상인들은 2017년 8월 28일 영화 '청년경찰' 에서 범죄 소굴인 대림동의 시작점이자 경계로 등장한 대림역 12 번 출구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고, 이어서 '대림동 바로 알리기 홍보캠페인' 을 전개하였다[87]. 또한 같은 해 9 월 10 일 영화의 상영 중지와 영화사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각각 한국인과의 화합과 재한 조선족을 상징하는 파란 풍선과 빨간 풍선, 그리고 한국 영화에 의해 말살된 재한 조선족을 상징하는 국화꽃을 들고 대림동 거리를 행진했다 (그림 4-7)[88].

[그림 4-7] 영화 '청년경찰' 에 대항하기 위한 대림동 거리 행진
(출처: 동포세계신문, '한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 호소문')

---

[87] 동북아신문. 2017.08.25. "'청년경찰' 중국동포 부정적 이미지 타격 커…동포사회 반발 거세다" '

[88] 동북아신문. 2017.09.11. "'중국동포들을 더는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대림동의 전용을 통해 주류 사회의 담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대림동에 대한 낙인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림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안 담론을 생산하려는 시도로도 이어졌다.

영화 '청년경찰'이 상영되고 한바탕 소송과 집회를 치른 후에, 같은 해 추석을 맞아 기획된 '한중문화주간 행사'의 기획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 단체들은 이른바 '청년경찰 효과', 즉, 청년경찰로 인해 대림동에 쏟아진 관심을 역이용해 대림동의 이미지를 즐거운 문화 체험의 장으로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89]. 재한 조선족은 '범죄도시'와 괴리가 큰 '대림동의 현재 모습'을 직접 보는 것 자체로 주류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대림동을 ''큰 사람들이 모여 서로 포용하고 손잡고 사는 마을'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재한 조선족 문학인들을 대림동에서 독서 토론회를 열며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술 먹고 떠들고 싸우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아닌', '삶의 기술로 머리를 채우'는 '영화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이러니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90]. 이러한 '숨어있는 풍경'을 범죄 순찰대 초소라는 배경과 병치시켜 제시함으로써 대림동에 대해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 (그림 4-8).

[그림 4-8] 대림동 방범 초소 앞에서 열린 재한 조선족 문인 독서모임
(출처: 동북아신문, '[류재순 수기]이른아침, 대림동 어느 한 골목에서')

---

[89] 동포세계신문. 2017.9.26. '영화 '청년경찰' 상영 후 "대림동은 지금?" 추석맞이 한중문화주간 행사로 이미지 쇄신 주력'
[90] 동북아신문. 2017.09.25. '[류재순 수기]이른아침, 대림동 어느 한 골목에서'

또한, 대림동을 문학적 실천의 장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의 주제로 기용하여 문학적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논의도 등장했다[91]. 우범지역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불쌍한, 불안한, 그리고 불편한' 존재로 전락한 대림동과 조선족의 현실을 그린 시처럼, 문학 작품을 통해 '내국인의 잠재적 DNA 를 흔들어 감성 밑바닥부터의 순화를 통해 한민족 동질감을 느끼게 하' 자는 주장이다. 이는 담론적 대항을 위한 대안 담론 생산의 핵심 요소로서 문학적 교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감에 주목했다.

한편, 재한 조선족 이주민 측의 실천은 담론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물리적 예방 노력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92]이나 코로나 19 방역 활동[93]이 그 예다. 특히 신지연과 박인권 (2021)은 대림동의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 그 동기와 활동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물리적 예방 노력은 일전에 논의한 물리적 통제[94]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통제가 문제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물리적 예방은 문제의 현재적인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래에 문제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제의 부재를 유지하고 증명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물리적 예방은 근본적으로 담론적 대항의 연장선 상에 있다.

---

[91] 동북아신문. 2019.05.15. '[대림칼럼①/이동렬] 대림(大林)은 한창 문학 리모델링 중'
[92] 본 논문의 3장 2절 1 참고
[93] 본 논문의 4장 1절
[94] 본 논문의 4장 2절 1 참고 3-2) 참고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및 대림동 내 상인과의 인터뷰, 재한 조선족 뉴스 매체의 기사, 재한 조선족 단체의 홈페이지, 조선족 작가들의 문집 등을 바탕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이 영등포구의 '차이' 인식과 관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들과 대림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습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영등포구의 포섭, 동화, 배제를 수용 혹은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 동기와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 절에서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를 둘러싼 재한 조선족 이주민 사회 내부의 동학을 논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한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주체로, 이주민은 강경한 반대파로 그려졌다면, 실상은 이주민이 적극적인 동조 내지는 추진 주체로 등극한 반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주민들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 정책이 대림동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그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정책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역으로 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며 계획과 실행에 앞장서는 주체성을 보였으며, 정부의 소극적 행보에 대해 탄식하고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부진의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동조한 동기로는 대림동의 자연발생적 중국성의 존재와 그 특수성, 가능성, 한계에 대한 이주민 측의 인식이 작용했다. 대림동의 상인들은 대림동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대림동의 중국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차이'를 소비하기를 기대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상업의 품목, 업종, 외관, 광고 등 개별 상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중국색을 채택하고 배가하려는 실천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그 같은 실천의 결과로 대림동은 한층 더 '차이나타운'화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성이라는 '차이'를 강조하는 대림동 내 상인들의 상업적 실천으로 인해 대림동의 중국색이 짙어지고, 반대로 대림동의 짙은 중국색으로 형성된 소비 기대가 다시금 그와 같은 상인들의 실천을 추동하는 순환적 관계가 존재하며, 대림동의 자연발생적 중국성은 이 같은 공간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실천 간의 끈끈한

상호 참조 속에서 자기 강화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림동의 중국색이 짙어지는 것을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인식했다. 즉, 대림동이 사실상의 ‘차이나타운’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림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협소해진 동시에 정부의 추진력 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이를 거스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에 편승하여, 본격적으로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착수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한편,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무엇보다 대림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인식을 가장 큰 준거로 삼고, 자신들의 내면적 정체성은 특화안 자체의 관철을 위해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대림동에 관한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서 ‘차이나타운’이 내국인에게 유발하는 반감을 상쇄할 방안으로 ‘중국 미식 거리’나 ‘중국 음식 문화 거리’ 와 같이 특화의 주제와 공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안과, 재한 조선족의 동포성을 강조해 ‘중국동포타운’으로 명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특히 ‘중국동포타운’이라는 명칭은 ‘차이나타운’에 대한 재한 조선족 이주의 거부감이 아닌 내국인의 거부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결과로, 이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재한 조선족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특화안에 반영하려는 고집의 발로가 아니라, 내국인들을 의식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한편, 이주민들은 이처럼 정체성을 타협할 의지를 보이면서도, 특화를 위한 대림동의 정체성을 재한 조선족의 내면적 정체성과 별개로 취급했다. 즉, 외면적이고 공간적인 정체성을 내면적인 자기 정체성과 분리하고, 외면적 정체성만을 타협하고 도구화하고자 했다. 이때 특화를 위한 외면적 정체성은 주류 사회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내면적 정체성을 투영한 산물로서, 내면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특화의 방식으로서 중국성이라는 주류 사회와의 ‘차이’를 부각하게 된 동기는 조선족의 정체성 인식과 그간 주류 사회와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상호작용해 온 역사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유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두 나라와 관련된 정체성을 동시에 보

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조선족은 한국과 더 밀접한 내면적 정체성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이 같은 동포성에 대한 인정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며 실망하고 분노했다. 이는 여전히 동포로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차적으로 자신들의 이질성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성과 중국성이 상호 동등하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교류하는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이라는 이상 역시 주류 사회와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반감 속에서 점차 이주민 측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공헌 노력으로 기울어졌다. 정부는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반감을 이유로 재한 조선족의 자체적인 활동에 입김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포성의 인정과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이 좌절됨에 따라, 주류 사회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이주민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협해 내보이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자 마지막 선택지였으며, 오히려 이주민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림동을 '차이나타운'으로 브랜딩하며 도구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는 모습이 태동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내국인'과 '다문화'의 이분적인 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속하지 못하며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편으로 실리적인 관점에서 '다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편입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같은 분류가 어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한 조선족에게 다가온 흔치 않은 포섭의 손길이었으며, 재한 조선족이 배제된(excluded) 타자에서 배타적인(exclusive)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재한 조선족은 그 기회를, 그 성격과 함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쪽을 택하게 되었다.

한편, 재한 조선족 이주민 모두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며,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수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였다. 먼저, 일부 이주민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이견을 표출했다. 이들은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을 내면적 정체성과 연관 짓고 둘 간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내면적 정체성의 환

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것은 타자에 대한 표식의 일종으로서 재한 조선족이 차별을 당하는 현실에서 기원하고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동포타운'이라는 명칭을 지지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일전에 설명한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들의 구상과 일치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류 사회를 의식하기 보다는 주류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기보다는 관철하고자 하며, 내면적 정체성과 외면적 정체성의 간극을 인정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인정의 부재를 드러내는 징표로 본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이유에 근거했다. 이는 대림동의 자연발생적인 중국성에 대한 이견으로도 이어졌다. 대림동의 자연발생적인 중국성은 자기 강화의 불가역적인 흐름이 아니라, 파편화되고 상호무관한 미시적 실천의 집합으로 인해 우연히 그렇게 보이게 된 것, 즉, 잘못 해석된 착시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내면적 정체성과 이주민 공간의 외면적 정체성 간의 괴리를 대체로 인정하되, 내면적 정체성과 관련한 이주민 공간의 매개 기능, 즉, 내면적 정체성이 외면적 정체성과 얼마나 동일시되고, 또 전자가 후자에 얼마나 투영되는가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를 보였다. 한편, 이에 대해 젊은 세대의 재한 조선족의 경우 두 정체성 간의 괴리를 크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즉, '차이나타운'이라는 외면적 정체성을 내면적 정체성의 매끄러운 반영물로 인식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림동과 중국의 동일시가 관광 목적으로 '차이나타운'을 소비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즉,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노정하는 타자화의 함정이 관찰되었다. 이주민들은 재한 조선족을 중국인과, 그리고 대림동을 중국과 동일시하는 주류 사회에 의해 그들이 겪는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는 반중 정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보다는, 재한 조선족은 중국인과 다르다는, 내면적인 정체성의 인식에 근거했다. 특히 코로나 19 가 확산되면서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대림동이 중국과 동일시되며 차별을 받자, 이주민들은 사실상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대림동의 현황을 강조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대림동 내 코로나 19 확산의 물리적 예방에 앞장서며, 대림동은 중국과 다름을 강조했다.

이처럼 대림동을 중국과 동일시하며 차별하고 혐오하는 현상과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중국성이라는 대림동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기원을 갖고 있음에도, 그 둘 간의 상호 연관성이나 그에 따르는 이주민 측의 상반된 반응이 내포한 모순을 인지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같은 부재는 대림동 외부에서 대림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채 대림동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제 3 자의 시선을 간과함에 기인하는데, 이 지점에서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와 기존에 대림동이 중국과 동일시되며 받게 된 피해가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며,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한 동조의 움직임에서 발견되는 외면적 정체성을 구성하여 도구화하려는 시도가, 과연 의도된 것처럼 내면적 정체성과 철저하게 유리된 채 외면적 정체성에 대한 보상만을 수확하는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동조하면서도 재한 조선족을 중국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차이나’라는 외면적 정체성과 ‘동포’라는 내면적 정체성을 분리하고, 외면적 정체성이 단지 도구적인 차원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의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2 절에서는 동화론과 배제론에 대한 이주민의 반응을 논했다. 첫번째로, 이주민은 ‘일탈적인 문화’에 대한 영등포구의 동화론적인 인식과 처방에 동조하며 물리적 통제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자신들을 타자화하는 주류 사회의 시선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되,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내부적으로 일부를 타자화하는 기조를 보였다.

두번째로, 이주민은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의 현실의 변화와 주류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강조하면서 동화론과 배제론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거를 반박했다. 먼저, 이들은 ‘중국적인’ 무질서와 ‘범죄도시’라는 진단에 대해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의 변화를 강조하며, 동화의 필요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다음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과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선족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했음과, 한국 사회에 대한 재한 조선족의 경제적 공헌을 강조하며, 배제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배제론을 반박하기 위한 변화와 공헌 담론 역시 재한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것에서 대림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재한 조선족 및 대림동의 변화와 공헌에 대한 담론이 문화적 차원(동화론)과 경제적 차원(배제론)에 걸쳐 제기되면서도 주로 경제적 차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세번째로 문화적 차원에 대해서 한발 더 나아가 주류 사회의 담론적 왜곡과 물리적 통제 기조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혐오를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담론적 대항과 물리적 예방 실천이 관찰되었다. 먼저 이주민은 재한 조선족의 문화적 '차이'를 문제시하는 시선이 내포하는 인종화와 본질화 경향을 문제 삼고 그에 반박했으며, 영등포구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구의 정책적 경향에 대해 구체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그것을 시정하려 시도했다. 이는 주류 사회 전반에 대한 담론적 대항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2017년에는 영화 청년경찰을 기폭제로 재한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발하고 담론적으로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극에 달했으며, 이주민은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한 조선족 관점의 영화를 생산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담론적 대항의 과정에서 이주민은 대림동을 전용함으로써 대림동에 대한 낙인을 시정하고 긍정적인 대안 담론을 생산하고자 시도했다. 예컨대 대림동에서 시위와 행진을 벌이고, 대림동에 쏟아진 관심을 역이용해 대림동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를 담아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대림동을 문학적 실천의 장소나 문학적 주제로 삼아 대림동에 대해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생산하고자 했다. 또한 이 같은 담론적 대항의 연장선상에서 물리적 예방 활동이 이어졌는데, 외국인자율방범대나 코로나 19 방역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리적 통제가 문제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물리적 예방은 문제의 현재적인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래에 문제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제가 부재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증명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둔다는 점에서 물리적 통제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포스트구조주의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로컬 스케일이라는 맥락에서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차이의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질문하고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재한 조선족 이주민 집적지인 대림동을 사례로, 대림동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차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대림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재한 조선족 단체 관계자 및 이주민이 그러한 정책적 기조에 반응하며 자신들과 대림동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특성 중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포섭하거나, 동화하거나, 배제하고자 했는가?

먼저, 영등포구는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 중국의 다면적인 부상을 주목하고 대림동의 중국 관련 경관 요소와 문화, 그리고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재중 네트워크와 이중언어 능력을 각각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인식하고, 영등포구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들의 선호를 확보하기 위한 '차이'로서 포섭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대림동은 소비하고 싶은 '차이나' 타운이자 소비하기 편리한 차이나 '타운'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내외국인의 모빌리티를 유치하고 조력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규정되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림동과 이주민에 대한 포섭은 생산성에 대한 가치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생산적 포용의 성격을 띠었다. 언표와 직제의 전환은 생산성에 따른 이주민의 차등화의 존속, 인종적 특정성과 부정성의 희석, 생산성이 담보된 도구적 '차이'만이 생존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포섭의 이면에는 불안정성과 선택성의 그림자가 도사렸다.

다음으로,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일탈적 문화, 즉, 기초질서 위반과 범죄를 '차이'로서 구성하거나 수용하며 그것을 인종화하고 본질화했다. 그리고 물리적 통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이주민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기조는 담론적 왜곡을 도외시하고 '차이'의 실존을 인정하며, 그것을 이주민 집단에 행동에 귀인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는 경제적 차원에서 대림동의 이주민의 소득 수준과 물리적 환경의 낙후됨을 문제삼고, 그 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책임이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규범적 시선과 자본적 시선의 혼재를 드러냈다. 자본적 관점은 이주민에게 권리와 자원을 부여하는 일이 초래할 역차별을 경계하며 형평성을 강조하고 차등화를 정당화하거나, 이주민을 대림동의 입지의 자본화를 방해하고 기회비용을 축적하는 존재로 프레이밍하는 배제적인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의 영역과 대상이 끊임없이 세분화되며 그 안에 포섭과 배제의 경향이 공존하는 모습과 더불어, 상위 스케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존의 '차이' 인식과 관리 기조가 단기적, 임시적, 표면적으로 조정되는 포섭과 배제 사이의 진동이 관찰되었다. 영등포구는 행정의 스케일적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사업 확보를 위해 특정한 맥락에 한해 배제의 대상을 포섭의 대상으로 재프레이밍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영등포구의 포섭, 동화, 배제를 수용하는가 혹은 거부하는가? 그리고 그 동기와 방식은 무엇인가?

포섭의 시도와 관련하여, 재한 조선족 이주민은 기존 언론 보도와 달리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적극적 추진 주체로 자신들을 자리매김했다. 동조의 직접적인 동기로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기회의 인식과 더불어, 대림동의 자연발생적 중국성이 장소 정체성과 구성원의 실천 간의 상호참조로 인해 자기 강화되는 현황 속에서 이를 불가역적 흐름으로 인식하며 정부의 적극적 편승을 촉구하는 인식이 자리했다. 동조의 방식으로는, 주류 사회를 준거로 이주민 자신들의 내면적 정체성과 외면적 정체성을 분리하고 외면적 정체성을 타협하고 도구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성이라는 '차이'의 포섭에 동조하는 모습에는, 다른 방식으로 포섭되고자 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노력이 실패해 온 역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먼저, 이들은 동포성을 바탕으로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추구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자신들의 중국성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을 추구했으나 이 역시 좌절되었다. 이에 주류 사회에서 그들의 '차이'가 소비되는

현실을 의식하고 그 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자 마지막 선택지였다. 다음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내국인’과 ‘다문화’ 사이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다고 인식하며, ‘다문화’라는 카테고리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한편 그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이때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그들이 배제된 타자에서 배타적인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한편, 일부 이주민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이들은 ‘차이나타운’이라는 외면적 정체성과 내면적 정체성의 괴리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명칭을 이주민에 대한 정체성의 환원과 타자화의 징표로 인식했다. 나아가, 이주민의 상업적 실천은 개별 점포에 국한되어 파편화되고 상호무관한 것으로, 따라서 자연발생적 중국성을 잘못 해석된 착시로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세대 가운데 중국과 더 밀접하게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고 외면적 정체성을 내면적 정체성의 매끄러운 반영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가 내포하는 타자화의 함정이 관찰되었다. 이주민들은 주류 사회에서 중국과 대림동이 동일시되며 자신들이 겪는 피해를 토로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대표적인 예로 꼽으며, 반중 정서 자체보다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이러한 문제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지점에서 외면적 정체성과 내면적 정체성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동시에 그 같은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과 거부의 혼종성은 동화나 배제에 대한 반응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는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먼저, 이들은 동화론에 대체로 동조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내부적 타자화와 물리적 통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들은 이주민과 대림동의 문화적 변화를 강조하며 동화론을 부정하고, (잠재적)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이주민의 경제적 공헌을 강조하며 배제론을 부정하는 변화와 공헌 담론을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동화론의 인종화와 본질화 경향을 문제시하고, 담론적 대항과 ‘차이’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한 물리적 예방 실천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대림동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용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포용, 인권 담론에 대한 기여

본 연구는 한국의 로컬 스케일의 차이의 정치에 주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관련 문헌에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특히 로컬 스케일에서 이주민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이중성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포섭과 배제의 공존은 **다층적**이다. 영등포구는 대림동에 대해서 크게 중국 관련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포섭하는 반면, 일탈적 문화나 경제적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차이'의 영역에 대해 포섭과 배제가 교차하는 모습은, 하나의 영역이 다시 하위 영역으로 쪼개지고, 그 하위 영역 역시 끊임없이 세분화되면서, 마치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더 작은 층위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차이나타운' 만들기는 재한 조선족 이주민의 문화 중 중국 문화만을 포섭한 것인데, 이 중국 문화라는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다시 중국 음식 문화의 포섭과 '중국적인' 무질서의 배제로 양분되며, 중국 음식 문화 중에서도 개고기 판매 등의 일부 요소는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차이' 안에서 또 다시 가치 있는 '차이'를 선별하고, 극대화하며, 나머지를 배제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작용은 포섭의 단위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작은 층위로 침투했다.

다음으로, 포섭과 배제의 공존은 **혼종적**이다. 한편으로, 포섭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배제성을 그림자처럼 수반한다. 예컨대 대림동에 대해 '글로벌'의 칭호를 붙이는 문제는 대림동이 '글로벌'의 조건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평가를 상시 수반하며, 그에 대한 회의는 대림동에 대한 포섭의 추진력을 침식했다. 또한 이주민이 정책의 수단으로 실용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주민의 이중언어 능력과 같은 사회자본이 그 가치가 유효하지 않은 영역에서 오히려 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즉, 포섭은 생산성에 따라 조건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나 유효성 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대림동의 일탈적 문화의 시정을 강조하는 동화론이나, 대림동을 경제적 차원에서 부담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지원하고 개발할 책임을 강조하는 자본적이고 규범적인 논의의 혼재는 배제 속에 포섭의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포섭과 배제의 공존은 **유동적**이다. 포섭과 배제의 여부가 맥락에 따라 유동하는 동시에, 상이한 여러 개의 맥락이 단일한 시간 속에 중첩된다. 따라서 포섭과 배제는 양자 간의 진동을 수반하는 상태로, 그리고 그로 인해, 공존하게 된다. 예컨대 영등포구는 대림동에 대한 '범죄도시'라는 낙인을 실존하는 이주민의 '차이'로서 수용하고 물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도시 사업의 공모 과정에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주류 사회의 담론을 문제시하고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낙인의 원인과 실존 여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서로 다른 맥락과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이주민에 대해 포용적이거나 배제적인 경향을 띠며 공존했다. 영등포구의 예산 분배 측면에서 부담으로 인식되고 차등화된 대우 속에서 배제되었던 이주민이, 상위 스케일의 예산을 확보하는 맥락에서 강점으로 인식되고 포섭되어야 할 존재로서 내세워진 것 역시 같은 현상이다.

이처럼 포섭과 배제가 다층적, 혼종적, 유동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은 일차적으로 이주민이라는 '차이'를 주류 사회의 영토와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와 타자의 중첩의 딜레마가 지방정부라는 로컬 스케일에서 더 극대화되고, 따라서 긍정적인 '차이'의 극대화와 부정적인 '차이'의 통제와 관련한 이해관계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더불어, 생활 밀착적인 행정의 특성이나, 상위 스케일에 일정 부분 종속되어 자유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역시, 대림동에 대한 개입의 영역과 방식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로컬 스케일의 특성으로 작용했다.

둘째,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작동에 대한 이주민의 행위성을 탐구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함께 살펴보고 그 만남이 이주민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갖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를 촉구하는 킴리카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문헌에서 짚어 온 이주민의 행위성인 수용과 거부의 혼종을 확증하는 동시에, 동포성의 인정을 염원하는 이주민이 중국성이라는 '차이'의 기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설적인

모습의 동기, 방식, 이견, 함정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맥락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비전형적인 사례의 축적에 기여했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 모델을 유연화하고, 동질화/차별화의 담론적 양상을 구체화하며, 그 둘을 연결하는 중간적인 분석틀의 구축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양쪽 모두와 관련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과정적으로 존재하는 '차이' 구성의 논리들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추출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분석하기에 유용한 새로운 틀로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작동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문화 정책 및 담론 안의 다양한 논리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게 하며, 정부의 '차이' 인식 및 관리와 이주민의 행위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가시화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 같은 문헌에의 함의는 실천적 함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행정, 정치, 도시계획의 실천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포용과 배제의 다양한 존재 양상, 분석 방법, 그리고 그 한국적 맥락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성찰은, 추후 이주민이나 이주민 공간 관련 실천을 구상하거나 그것을 포용이나 인권 측면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의 매개 기능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본 연구는 대림동이라는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로컬 스케일의 차이의 정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대림동이 갖는 공간이라는 차원에 의해 새로운 복잡성이 발생하며, 따라서 대림동은 그 안에 존재하는 이주민 집단으로 매끄럽게 치환되기 어려움을 암시했다. 즉, 공간은 빈 용기(container)가 아니며,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매개함으로써 의미의 굴절을 야기한다.

이 같은 공간의 독자적인 매개 기능과 관련해, 3 장에서는 첫째, 경관이나 시설과 같이 공간적으로 고착된 요소가 사람과 별개로 포섭, 동화 배제의 요소가 된다는 점, 둘째, 공간이 사람을 반영한다는 인식 아래, 공간은 곧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평가를 완곡하게 지적할 수 있게 하는 완충물로 작용한다는 점, 셋째, 특정한 집단의 밀집과 같은 공간적 작용에 의해 계층이 공간화

되며 가시화됨에 따라, 형평성이나 차등화에 관한 논의가 공간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더불어 4 장에서는 공간이 매개하는 의미의 종류, 그 방식,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인식의 상이함과, 그에 따라 행위성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독특한 방식을 띨 수 있음을 논의했다. 예컨대, 대림동 '차이나타운' 만들기에 대한 이주민 측의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함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면적 정체성을 공간적 정체성에 반영하거나 분리하는 일의 당위성, 파급효과,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의 충돌과, 이주민의 실천을 어느 공간적 스케일에 귀인하는가 - 미시적인 상점의 스케일인가 혹은 동네 전체의 스케일인가 - 와 관련한 관점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곧 '차이나타운' 만들기의 함의와 방식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그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라는 상반된 반응이 뒤섞인 모습을 초래했다.

이는 향후 이주민이나 다문화 정책 관련 연구에서 공간의 매개 기능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중요한 연구 질문이 될 가능성과, 관련 실천에서 공간적 차원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공간적 차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러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주체적으로 포섭하고, 이주나 다문화와 관련된 다학제적인 연구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를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방향으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정부와 이주민 각 측을 구성하는 세부 집단을 식별하고, 각 세부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행위자를 섭외해 면담하거나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의 동학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측의 공무원을 섭외해 면담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대림동에서 단체 활동이나 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주민의 의견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충분히 귀중하고 심

층적인 통찰을 제공하지만, 이처럼 추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풍부함과 깊이를 한층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로컬 스케일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함의 도출을 위해, 연구의 범위를 넓혀 로컬 스케일 행위자와 상위 스케일 행위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로컬 스케일 행위자의 독특성은 그것을 다른 맥락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국인 거주민, 지역 활동가, 방문객과 같이 로컬 스케일을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를 포함하여 로컬 스케일 동학을 더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공간을 둘러싼 로컬 스케일의 차이의 정치를 보다 완전하게 그려보면서 새로운 함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민경. "모빌리티를 통해 본 이주자 밀집지역의 역동성 탐구-대림동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31.3 (2019): 155-171.

공윤경.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2013): 183-214.

곽재석. "국내 동포 밀집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재외한인연구* 55 (2021): 1-31.

김수철. "공생과 타자: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 이론에 관한 재고찰." *문화와 정치* (2017).

김용선, 임영상.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타운과 동포단체." *재외한인연구* 45 (2018): 153-186.

김일권. *재한 중국인을 통해 본 한국적 다문화주의 전개: 구 화교, 신 화교, 조선족을 중심으로*. 박문사, 2015.

김정선.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한국식'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2011): 205-246.

김현미,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 (사)국제민간교류협회, 2018. http://jubileekorea.org/?mod=document&uid=17&page_id=11706

김현선.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서울시 구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010): 231-264.

문윤수. "아날로그 옥외광고와 공공미술의 결합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인자로서의 특 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카고 밀레 니엄파크와 서울 대림동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8 (2021): 41-87.

박상영.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고찰: 90 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혼재성의 다양성." *아태연구* 22.4 (2015): 5-40.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2010): 69-100.

박세훈, "서울, 글로벌 다문화도시로의 전환." *서울연구원 엮음, [서울의 미래2] 성숙도시 서울-도전 받는 공간*, 2017. 446-481.

박재영, 강진구.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가리봉동 · 구로동· 대림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016): 255-290.

서지수.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 (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2012): 49-75.

신동순.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과 '대림동'의 문제적 재현." *중국학논총* 69 (2020): 269-291.

신정아, 한희정.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기: 동포모니터링단< 강강숲래 > 활동 및 단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5.3 (2016): 235-282.

신지연, 박인권.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공간과 사회* 75 (2021): 168-207.

오경석. "한국의 다문화주의: 특징과 과제." *HOMO MIGRANS* 1 (2009): 9-32.

육주원. "반다문화 담론의 타자 만들기를 통해 본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협력적 경쟁관계." *한국사회학* 50.4 (2016): 109-134.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9): 40-68.

윤희진. "다문화 공간 스토리텔링을 위한 향유자 인식 연구: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2022): 121-144.

이정현, 정수열.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304-318.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경계 밖에 선 한반도화교 137 년의 기록*. 동아시아, 2018.

임영상, 김용선.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타운과 동포단체" *코리아타운 사람들*. 북코리아, 2019. 221-258.

임월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회운동* 101 (2011): 87-110.

장효청. "대림동 거리 모습에 담겨진 중국문화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도림로 38 길, 디지털로 37 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6 (2019): 425-438.

조지영, 서정민. "누가 다문화 사회를 노래하는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써의 한국 다문화 담론과 그 효과." *한국사회학* 47.5 (2013): 101-137.

천현진, 이준, 강용, 김성균. "중국 이주민 거주지역 내 시장공간의 문화경관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0.5 (2012): 73.

최병두.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2007): 82-103.

최병두.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2012a): 13-36.

최병두.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및 지역정책 과제." *국토* (2012b): 44-51.

최선영.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등적 도구화 정책: 서울시 외국인정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최선영. "외국인 이주민 집단 주변화의 제도적 속성으로서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2022): 99-113.

최인규, 전범수. "영화 < 청년경찰>,< 범죄도시> 에 나타난 범죄 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35.4 (2019): 107-125.

한준성.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1 (2010): 289-316.

홍태영. "한국사회 타자의 포용을 위한 자유주의적 탐색." *EAI 워킹페이퍼* (2022): 1-16.

Ahmed, Sara. *On being included: Racism and diversity in institutional life.* Duke University Press, 2012.

Alfaro, Claudia Fonseca. *Producing Mayaland: Colonial Legacies, Urbanization, and the Unfolding of Global Capitalism.* John Wiley & Sons, 2023.

Michaels, Walter Benn. "Against diversity". *New Left Review* 52 (2008): 33–36

Bourassa, Gregory. "Neoliberal multiculturalism and productive inclusion: Beyond the politics of fulfillment i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Policy* 36.2 (2021): 253-278.

Bronsvoort, Irene, and Justus L. Uitermark. "Seeing the street through Instagram. Digital platforms and the amplification of gentrification." *Urban Studies* 59.14 (2022): 2857-2874.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UK: Palgrave Macmillan, 2009.

Desille, Amandine. "Revisiting the diversity-urban development nexus: Perspectives from Israeli immigrant towns." *Political Geography* 73 (2019): 1-16.

Dest, Anthony. "'Disenchanted with the state': confronting the limits of neoliberal multiculturalism in Colombi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Ethnic Studies* 15.4 (2020): 368-390.

Hale, Charles R. "Does multiculturalism menace? Governance, cultural right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Guatemal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4.3 (2002): 485-524.

Hale, Charles R. "Neoliberal multiculturalism: the remaking of cultural rights and racial dominance in Central America." *PoLAR* 28 (2005): 10.

Hale, Charles R. "Neoliberal multiculturalism." *The Routledge Handbook of Latin American Development.* Routledge, 2018. 75-86.

Hale, Charles R. "Using and refusing the law: indigenous struggles and legal strategies after neoliberal multiculturalism." *American Anthropologist* 122.3 (2020): 618-631.

Hashimoto, Yui. "Racing the creative class: diversity, racialized discourses of work, and colorblind redevelopment." *Urban Geography* 42.4 (2021): 528-550.

Jensen, Sune Qvotrup. "Othering, identity formation and agency." *Qualitative studies* 2.2 (2011): 63-78.

Jones, Nikki, and Christina Jackson. "'You Just Don't Go Down There": Learning to Avoid the Ghetto in San Francisco." *The Ghetto.* Routledge, 2018. 83-109.

Karimi, Aryan, and Rima Wilkes.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national models of integration: time to think without the model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8.7 (2022): 1729-1746.

Kim, Eungi. " Korean Multiculturalism : The Genealogy of the Concept, Shifting Meanings, Issues and Implications." *아세아연구* 53.2 (2010): 102-129.

Kirk, Richard. "Neoliberal multiculturalism in Dallas: The discursive foundations of

diversity-led gentrification in an aspiring US global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2023): 0308518X231152258.

Kivisto, Peter. *Multiculturalism in a global societ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2.

Kymlicka, Will. "Neoliberal multiculturalism." *Social resilience in the neoliberal era* (2012): 99-125.

Lan, Pei-Chia. "From reproductive assimilation to neoliberal multiculturalism: Framing and regulating immigrant mothers and children in Taiwa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40.3 (2019): 318-333.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England: Blackwell, 1991.

Malik, Kenan. "Making a difference: culture, race and social policy." *Patterns of Prejudice* 39.4 (2005): 361-378.

Maloutas, Thomas. "Diversity. A critical approach." *The Greek Review of Social Research* (2021): 31-54.

Mazzarella, William. "Culture, globalization, mediation." *Annu. Rev. Anthropol*. 33 (2004): 345-367.

Melamed, Jodi. "The spirit of neoliberalism: From racial liberalism to neoliberal multiculturalism." *Social text* 24.4 (2006): 1-24.

Melamed, Jodi. *Represent and destroy: Rationalizing violence in the new racial capit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Mitchell, Katharyne. "Educating the national citizen in neoliberal times: from the multicultural self to the strategic cosmopolita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8.4 (2003): 387-403.

Park, Yun-Joo, and Patricia Richards. "Negotiating neoliberal multiculturalism: Mapuche workers in the Chilean state." *Social forces* 85.3 (2007): 1319-1339.

Pierik, Roland. "Conceptualizing cultural groups and cultural difference: The social mechanism approach." *Ethnicities* 4.4 (2004): 523-544.

Rabii, Watoii. "Global appeal: colorblindness, neoliberalism, and neighborhood branding." *Critical Sociology* (2023): 08969205221146268.

Reid, Donald. "Sharing the halal snack-pack: Multiculturalism as neo-assimilation in Australia." *Continuum* 33.1 (2019): 77-92.

Roberts, Lance W., and Rodney A. Clifton. "Exploring the ideology of Canadian multiculturalism." *Canadian Public Policy/Analyse de Politiques* (1982): 88-94.

Roberts, David J., and Minelle Mahtani. "Neoliberalizing race, racing neoliberalism: Placing "race" in neoliberal discourses." *Antipode* 42.2 (2010): 248-257.

Roderick, Ian. "Neoliberal multiculturalism and the discourse of primitivism at Walt Disney World's Pandora." *Journal of Multicultural Discourses* 14.3 (2019): 195-207.

Saha, Anamik, and Sandra Van Lente. "Diversity, media and racial capitalism: a case study on publishing." *Ethnic and Racial Studies* 45.16 (2022): 216-236.

Schiller, Nina Glick. "Localized neoliberalism, multiculturalism and global religion: exploring the agency of migrants and city boosters." *Rights, Cultures, Subjects and Citizens*. Routledge, 2013. 44-70.

Seet, Adam Z., and Xinyu Zhao. "The paradox of Whiteness: Neoliberal multiculturalism and the cas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Ethnicities* 21.5 (2021): 852-874.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2009): 147-174.

Shin, Jaran. "The vortex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characteriz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three newspapers."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16.1 (2019): 61-81.

Simmel, Georg. "The Stranger".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New York: Free Press, 1950. 402 – 408.

Speed, Shannon. "Dangerous discourses: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ism in neoliberal Mexico." *PoLAR* 28 (2005): 29.

Torino, Giulia. "The governmentality of multiculturalism: from national pluri-ethnicity to urban cosmopolitanism in Bogota." *Identities* 28.6 (2021): 699-716.

Zukin, Sharon, Scarlett Lindeman, and Laurie Hurson. "The omnivore's neighborhood? Online restaurant reviews, race, and gentrification."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7.3 (2017): 459-479.

Abstract

Constructing differences of an ethnic enclave

- exploring the local politics of making Daerim-dong 'Chinatown'

BARK, HyeHye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Maj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ruction of 'differences' of an ethnic enclave; the process by which knowledge about how an ethnic enclave is different from mainstream society is created, and in turn, manifests in practice.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social conflict surrounding differences originates not only from the differences themselves, but more fundamentally, from the disagreements and contestations that arise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practices targeting the 'differences' that may exist. In short, 'difference' is a product before becoming a producer of politics.

In academia, there have been attempts to critique discrimination concealed and perpetuated in the management of 'differences' of racial minorities. In particular, the discourse on neoliberal multiculturalism accuses neoliberalism of being the driving force of inequality and exposes the workings of inequality hidden beneath the 'progressive' surface. Furthermore, poststructuralist epistemologies on neoliberal

multiculturalism call for a shift away from an approach where the agents and their perceptions, intentions, and practices are assumed to be monolithic, and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multilayered, hybrid, and fluid nature of the agents and their agency within and beyond the state, as well as ever-present complexities and contestations between them. What then emerges from this conversation is a theme of the multidimensional and multi-scalar nature of the production of knowledge-and-practices about 'differenc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workings of neoliberal multiculturalism surrounding an ethnic enclave, by zooming into the political processes in which the local actors in Daerim-dong, a (Korean) Chinese enclave in Seoul, engage, cooperate with, and contest each other to produce the knowledge and practices targeting the 'differences' of the neighborhood. Thereby, this cas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neoliberal multiculturalism in three ways. First, by demonstrating the complicated duality of inclusion and exclusion. Second, by filling a relative gap in the literature on local governments' agency in multicultural governance despite their evolving interests and roles in recent years. Lastly, by examining the encounter of forces from above and below as well as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I conducted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migrant organizations, and merchants in Daerim-dong. I also analyzed official meeting minutes and material from migrant news outlets from 2010 to 2022, as well as policy documents, news articles, and fieldwork data.

In Chapter 2, I presen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theories and case studies on neoliberal multiculturalism in the West and in Korea. I argue that existing theories are not sufficiently concrete to capture the ambivalence of inclusion and exclusion found in transitory moments, within a group, and across diverse and co-present contexts. Next, I examine the frameworks used for multicultural policy research, and discus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I als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developed by extracting eight concepts from the literature, which are used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ifferences.' This is an intermediate framework

intended to bridge the national multicultural policy models and the discursive patterns of homogenization/differentiation, by making the former more flexible and fleshing out the latter.

Chapter 3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the local government captures and embeds meaning into the 'differences' of Daerim-dong, translates them into policies, and maintains or transforms the very 'differences' by executing on those policies. In brief, the local government featured the cultural and social capital derived from the 'Chineseness' of the neighborhood, attempted to control and assimilate the 'deviant culture' of the migrants in the neighborhood, and legitimized differential treatment and exclusion against them in terms of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Underlying these perceptions and interventions was a set of neoliberal logics with which they sought to gain an advantage over other local governments in attracting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resources.

Furthermore, this productive inclusion of Daerim-dong took multi-layered, hybrid, and fluid forms. First, the process of subdivision took place iteratively while proceeding down the layers, continually excluding some properties from the inclusive sphere. Second, inclusion was essentially unstable and incomplete and hence always accompanied by exclusionary potential. Lastly, as different contexts overlapped, the perceptions and interventions were adjusted and oscillated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temporarily and at a superficial level.

In Chapter 4, I analyze how Korean Chinese migrants in Daerim-dong react to local government's attempts to celebrate, assimilate, and exclude the 'differences' of their people and their neighborhood. On the one hand, migrants were generally supportive of staging Daerim-dong as a 'Chinatown.' However, some were skeptical of the plan, arguing it to be a form of identity reduction and 'othering.' On the other hand, migrants showed three types of reactions and strategies regarding the assimilationist and exclusive perceptions and interventions, all of which, albeit for different reasons, were aimed at empowering the migrants themselves. They partially accepted the assimilationist discourse and proactively engaged in internal othering

and collective efforts for improvement. They also refused both the assimilationist and exclusivist logics by emphasizing the change and contribution of both the migrants and the neighborhood. Moreover, they initiated collective movements for discursive resistance and physical prevention to disprove the assimilationist set of logics that were escalated and expanded into a territorial stigma on the neighborhood.

Amidst this mixed agency that accepts/uses as well as refuses the perceptions and interventions from above, why and how Korean Chinese migrants came to bring their 'difference' to the fore, despite their aspiration for getting the legitimate recognition as co-ethnics, reflects the unique histories and contexts of Korea that have shaped their position. For the migrants, the staging of Daerim-dong 'Chinatown' was one of few opportunities left following the frustration of earlier attempts to get their co-ethnicity recognized, and then to establish an interculturalist communication with mainstream society. Moreover, it was a better option, in that the migrants could move up to an exclusive protagonist from an excluded other between the dichotomy of 'national' and 'multiculture' groups. This led them to come up with a rather eccentric strategy for identity management, where they intended to separate their internal self-identity and the outward spatial identity that c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mainstream society's ideal for consumption. Considering the prevalence of antagonistic sentiment toward China in Korean society, however, a critical reflection is required on whether the making of Daerim-dong 'Chinatown' will aggravate 'othering' against the migrants, or indeed lead to a meaningful empowerment for them.

Keywords: differences, neoliberal multiculturalism, ethnic enclave, multicultural policy, migrant agency, local politics

Student Number: 2020-28753